

발 간 등 록 번 호

11-1500000-002065-0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 역 도 시 계 획

2007. 6

건 설 교 통 부

목 차

제1부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	1
1. 계획의 개요	3
1.1 배경과 근거	3
1.2 위상과 성격	5
1.3 수립 범위	6
1.4 수립체계 및 추진경위	8
2. 여건·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11
2.1 여건변화 전망	11
2.2 현황 및 문제점	14
2.3 광역계획권 SWOT 분석	20
2.4 주요 정책과제	22
3. 계획목표·전략 및 계획지표	27
3.1 계획의 목표	27
3.2 추진 전략	28
3.3 인구지표의 설정	29
4. 공간구조 구상	35
4.1 공간구조 현황 진단	35
4.2 공간구조 구상의 기본방향	37
4.3 개발·교통·녹지축 설정	40

제2부 부문별 계획	47
5. 토지이용계획	49
5.1 현황 및 여건 분석	49
5.2 핵심과제 및 추진전략	50
5.3 토지이용 수요 추정	54
5.4 개발가능지 분석	56
5.5 지방자치단체 개발수요 분석	61
5.6 용지배분	63
5.7 광역토지이용 관리방안	65
6. 광역교통계획	67
6.1 현황, 문제점 및 여건 전망	67
6.2 핵심과제	68
6.3 광역교통망 구상의 기본방향	69
6.4 광역교통망 구상	71
7. 녹지관리계획	75
7.1 현황 및 문제점	75
7.2 핵심과제	79
7.3 전략 및 실천계획	79
8. 경관계획	83
8.1 현황 및 문제점	83
8.2 핵심과제	84
8.3 전략 및 실천계획	85

9. 환경보전계획	91
9.1 현황 및 문제점	91
9.2 핵심과제	94
9.3 전략 및 실천계획	94
10. 광역시설계획	97
10.1 현황 및 문제점	97
10.2 수요추정	100
10.3 핵심과제	102
10.4 전략 및 실천계획	102
11. 문화 및 여가계획	109
11.1 현황 및 문제점	109
11.2 핵심과제	112
11.3 전략 및 실천계획	112
12. 방재계획	117
12.1 현황 및 문제점	117
12.2 핵심과제	120
12.3 전략 및 실천계획	121
13. 행정도시 주변지역	123
13.1 현황 및 여건	123
13.2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127
13.3 공간구조 구상	128
13.4 부문별 계획 및 관리 기본방향	130

제3부 집행 및 관리	135
14. 집행 및 관리체계	137
14.1 여건과 정책과제	137
14.2 광역도시계획 집행체제	138
14.3 광역도시계획의 구현	141
15. 계획의 수정·변경	143
15.1 집행사항의 평가 및 관리	143
15.2 계획의 변경체제	143

표 목 차

제1부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의 충청권 발전방향 》	13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인구 현황 》	17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인구추이 》	31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인구추정 결과 》	31
《 시·도별 인구지표(상한, 하한) 》	32
《 대전권 및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개요 》	36
《 “중부권 5개 거점도시 네트워크”의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	42

제2부 부문별 계획

《 광역토지이용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	51
《 도시화용지의 수요 총계 》	55
《 광역계획권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분포 》	57
《 군집화된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	59
《 토지이용 수요와 시·군 개발수요 총량 비교 》	61
《 지자체 개발수요의 우선순위 시뮬레이션 결과 》	62
《 용지 구분의 기준 및 원칙 》	63
《 시·도별 개발용지 배분 》	64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녹지면 등급별 수 및 면적 》	76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경관거점별 조망점 및 경관자원 》	88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93

《 광역계획권내 지자체의 용수공급시설 확충계획 》	103
《 주요 물류·유통시설 확충계획 》	107
《 자연관광자원 현황 》	109
《 여가자원 현황 》	110
《 문화·여가 중심지역별 테마 》	113
《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	114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율 》	118
《 최근 10년(1995년~2004년)간 충청도 일원의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 ..	119
《 최근 6년(2000년~2005년)간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인적재난 현황 》	120
《 생활권별 기능배분 및 발전방향 》	129

그 림 목 차

제1부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	6
《 광역도시계획 수립체계 》	8
《 행정도시의 공간적 위상 》	14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교통망 현황 》	16
《 SWOT 분석 》	22
《 여건전망·현황분석과 정책과제, 계획목표·전략의 구조 》	25
《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	38
《 계획적 개발축의 설정 》	41
《 교통축의 설정 》	43
《 녹지축의 설정 》	45

제2부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계획 과정 》	53
《 개발가능지 분석 과정 》	56
《 국토환경성평가도에 의한 개발가능지역의 분포 》	58
《 광역계획권 개발가능지 》	60
《 광역계획권내 국가간선교통시설 및 계획 현황 》	67
《 고속순환교통체계 형성 》	71
《 행정도시 관문 연결교통체계 구축 》	72
《 도시간의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 구축 》	73
《 생태자연도 현황 》	75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녹지분석 》	77

《 광역계획권 보존녹지 분류 》	78
《 광역생태축 체계도 》	81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주요 경관거점 》	87
《 대기오염 현황(SO ₂ 사례) 》	91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여가자원 현황 》	110
《 문화여가 중심지역 및 네트워크 체계 》	113
《 광역계획권 내 하천 현황 》	117
《 지진발생 추이 》	119
《 지진 규모별 발생 비중 》	119
《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 》	123
《 생태자연도 및 수계도 》	124
《 개발제한구역 및 국토이용계획 현황도 》	125
《 주변지역 교통현황 》	125
《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SWOT 분석 》	126
《 주변지역 생활권 구상(안) 》	129
《 행정도시 주변지역 도로망 체계 》	131

제1부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

1. 계획의 개요
2. 여건·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3. 계획목표·전략 및 계획지표
4. 공간구조 구상

1. 계획의 개요

1.1 배경과 근거

1.1.1 계획의 배경

-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라 한다) 건설사업을 추진
 - 근거법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05년 3월 제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을 충청권에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해 광역적 도시계획 필요
 - 도시기능의 분담 및 상호 연계, 환경보전 강화,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계획의 수립을 추진

1.1.2 법적 근거

-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은 특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수립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변지역과 인근지역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 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 ※ 일반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립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추진 개요

- 행정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2030년까지 인구 50만인 규모의 신도시 건설로 추진

구 분	행정구역	면 적
예정지역 현	2개 시·군 5개면 33개리 - 연기군 : 남·금남·동면 - 공주시 : 장기·반포면	약 72.91km ² - 연기군 : 68.01km ² (93.3%) - 공주시 : 4.90km ² (6.7%)
주변지역 현	3개 시·군 9개면 74개리 - 연기군 : 남·금남·동·서면 - 공주시 : 장기·반포·의당면 - 청원군 : 강내·부용면	약 223.77km ² - 연기군 : 118.62km ² (53.0%) - 공주시 : 71.73km ² (32.1%) - 청원군 : 33.42km ² (14.9%)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중추기관이 출현하여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12부 4처 2청 등 총 49개 단위기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행정도시를 연계하여 전국 각 지역이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생 발전을 추구

○ 도시건설의 정책목표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로 조성

○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살기 좋은 인간중심 도시’, ‘품격 높은 문화·정보도시’로 설정

○ 단계별 도시건설

- 1단계(2007~2015년) : 인구 15만인을 목표로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
- 2단계(2016~2020년) : 인구 30만인을 목표로 대학·의료복지·첨단지식기반 등 각종 도시 자족기능이 운용되고 도시성장이 본격화
- 3단계(2021~2030년) : 인구 50만인을 목표로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복합적 자족도시 형성

1.2 위상과 성격

1.2.1 계획의 위상

-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은 국계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과는 달리 특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
-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은 대전권·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및 시·군 도시기본계획 등에 우선하되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계획에는 우선하지 않음
 -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기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함(특별법 제17조)
- ※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등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며(국계법 제19조 제2항)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함(국계법 제25조 제1항)

1.2.2 계획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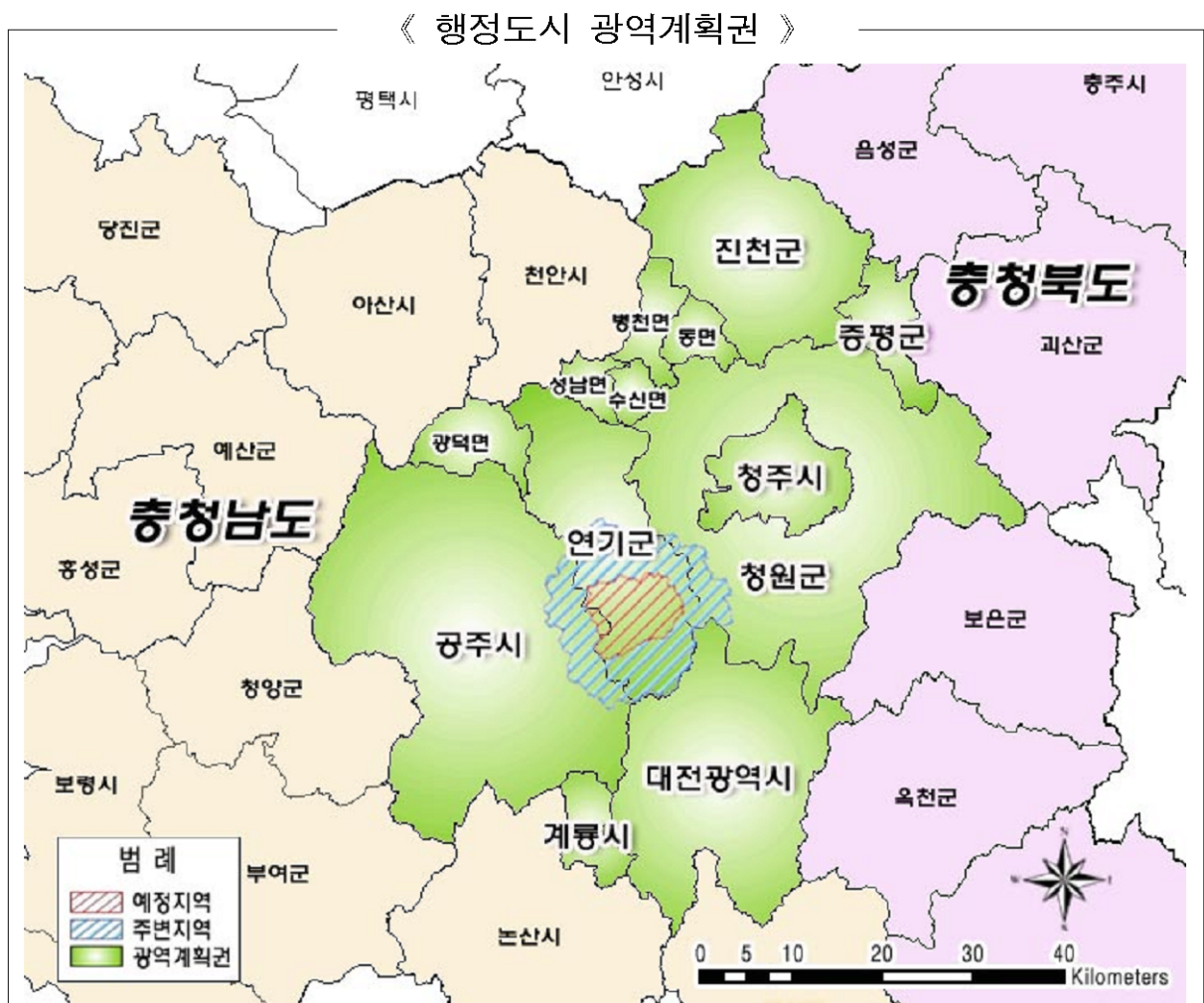
- 광역도시계획은 물리적·청사진적 계획인 종전의 광역개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과는 달리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님
 - 전략계획 : 광역계획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전략 제시
 - 정책계획 :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정책주체가 추진할 실천계획과 시책을 체계적으로 제시
 - 지침계획 :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의 하위계획 수립과 개별 개발사업 인·허가시 고려할 상위적 사항들을 제시
- ※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의 하위계획에서 적용하는 지침(guideline)을 제시하되, 개별적 개발행위나 토지이용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 또는 구속하는 내용은 담지 않음

1.3 수립 범위

1.3.1 공간적 범위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1월 2일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고시
 -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전역
 - 전체면적은 3,597km²이며 대전광역시 540km², 충청남도 1,601km², 충청북도 1,456km²로 구성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은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 협의,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2005. 12. 15)



1.3.2 시간적 범위

- 2005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2030년(행정도시 건설 완료 시점)을 목표년도로 설정

1.3.3 내용적 범위

○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

-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배경과 근거, 위상과 성격, 시·공간적 범위 및 수립 경위 등
-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문제점, 여건변화 전망, SWOT분석 등을 통한 주요 정책과제 도출
- 계획의 목표·추진 전략 및 인구지표를 설정하고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를 진단하여 개발·교통·녹지축 등 장기 공간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제시

○ 부문별 계획

- 광역적 토지이용 현황 분석 및 장기 토지이용 수요 전망 등을 통해 도시화 예정용지, 보전용지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제시
- 개발축, 교통축 등을 고려하여 광역계획권 내 거점도시간 간선교통망 등 광역교통망 구상을 제시
- 생태네트워크와 녹지현황, 경관요소 등을 분석하고 장기적 녹지보전 방안 및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
- 수질, 대기 등 환경보전 강화 방안과 상하수도, 물류·유통시설 등 광역시설의 공급 및 배치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침을 제시
- 문화자원, 여가·레저 시설 등을 파악하고 문화·여가 공간 네트워킹 및 관련 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
-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하천관리, 도시방재체계 개선 방안 등 방재 지침을 제시
-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장기 발전방향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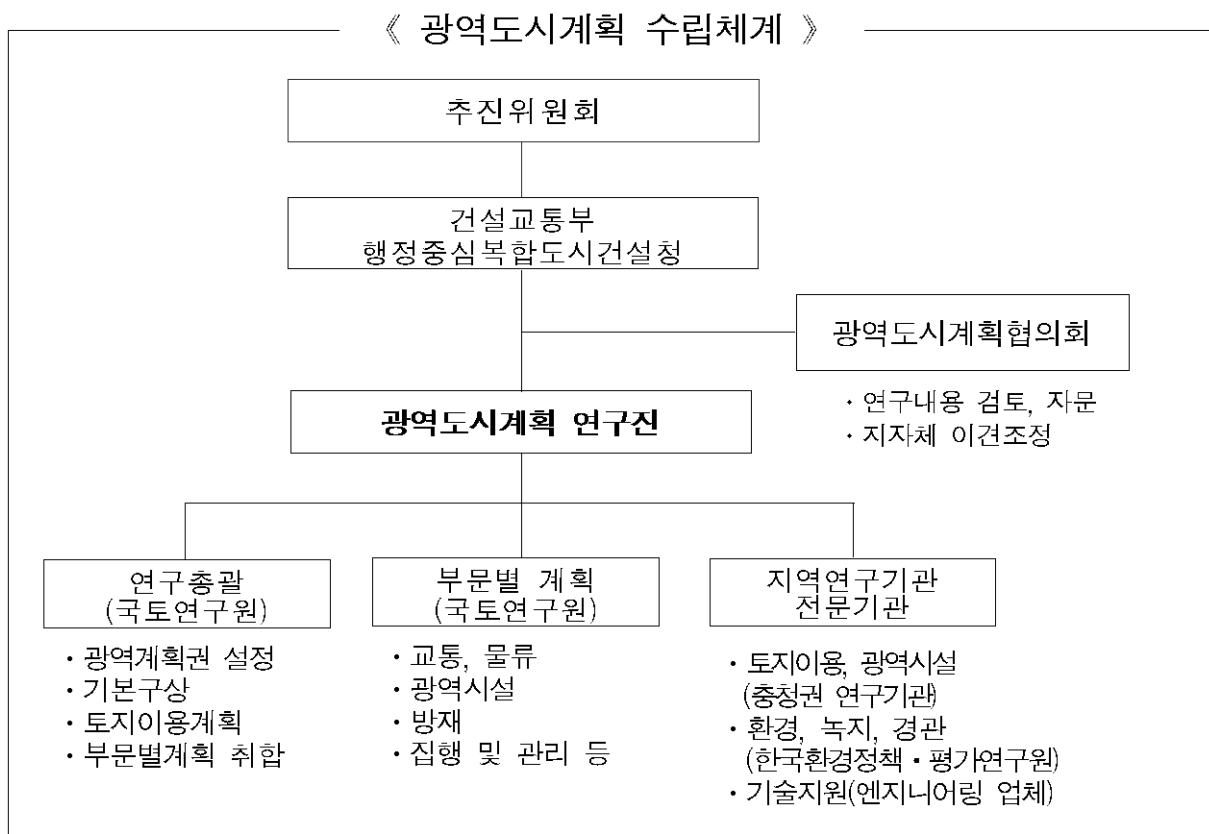
○ 집행 및 관리

- 광역도시계획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집행체계,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분담, 계획의 관리와 변경체계 등의 방안을 제시

1.4 수립체계 및 추진경위

1.4.1 수립 체계

-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국토연구원이 과업을 총괄하고, 충청권 시·도연구원, 관련 전문분야 국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계획안을 마련
 -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및 엔지니어링 업체 참여
- 광역계획권 설정 및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중앙-지방정부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위하여 「행정도시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
 - 추진위원회,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정도시건설청」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관계관 및 관계분야 전문가 등 14인으로 구성
 - 총 11회의 협의회를 개최(2005. 9 ~ 2007. 3)하여 광역계획권 설정 대안,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 및 부문별계획, 공청회·관계기관협의 결과 조치계획 등을 검토, 협의



1.4.2 추진경위

- 2005. 7. 8 : 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방침을 결정하고 국토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
- 2005. 9. 27~10. 27 : 제1~3차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개최 (광역계획권 설정 기준 및 대안 협의)
- 2006. 1. 2 : 광역계획권 지정(안)에 대한 추진위원회 심의(2005. 12. 15)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고시
- 2006. 3. 27~4. 24 : 제4~6차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개최 (광역도시계획 목표·전략, 인구지표 및 공간구조 등 내용 검토 및 협의)
- 2006. 8. 29~12. 1 : 제7~8차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개최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 녹지관리 등 부문별계획 내용 검토 및 협의)
- 2006. 12. 1~2007. 2. 14 : 전략환경평가 자문회의 및 전략환경평가위원회 심의 (전략환경평가 이행)
- 2006. 12. 19~21 :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대전, 청주, 연기 등 3회)
- 2007. 1. 8~3. 8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 2007. 1. 25~3. 8 : 제10~11차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개최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
- 2007. 3~5 :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광역도시계획(안)을 보완
- 2007. 5. 1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7. 6. 14 : 추진위원회 심의·의결

2. 여건·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2.1 여건변화 전망

2.1.1 국내외 여건변화

- 세계경제의 자유화로 국가간·지역간 초국경적 경쟁 심화 예상
 -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 시장경쟁체계 형성
 - 국가가 아니라 지역이 자본, 투자, 기업, 지식, 기술, 인재 등을 끌어 모으고 조직하는 새로운 경제단위, 사회단위로 부상
-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경제권의 급성장으로 지역경제권 구축 가시화
 -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이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의 하나로 성장
 -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교역 및 투자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경제권 구축이 가시화
-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
 - 공간계획의 기초가 지속가능한 인구수준의 유지, 자원기반 확보와 기술의 진전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위 지역에서의 계획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
- 지방화시대 정착에 따른 지역개발전략 모색 필요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간의 단절형 사회구조로부터 각 주체간 협력과 창조적 경쟁의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사회로 변혁되고 있음
 -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고 자립적 발전 기회가 점차 증대되어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지역 활성화가 예상되는 반면 지역 간의 경쟁·갈등·분쟁이 증폭될 우려도 높음
-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지속
 - 수도권 인구 집중은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심화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0년대 이후는 50%를 상회하여 국토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 또는 강화 예상

2.1.2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여건변화 전망

-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공간구조 재편
 - 대전과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행정도시의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공간적 중심 형성 예상
 - 행정도시가 거점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주변 거점도시인 대전과 청주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거점도시권 형성 가능
 - 수도권과 경부·호남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광역계획권에서의 계획적 도시개발 및 관리 수요 증대
 - 행정도시 건설 및 입주 초기 단계에는 유입되는 인구 및 건설인력을 위한 인근 지역의 배후 및 지원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개발 압력이 높아져 난개발 발생 우려
 - 행정도시에 중앙행정기능 등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경우 수도권 뿐 아니라 광역계획권 내에서도 행정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광역계획권의 정주기반 정비와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 수요 증대 예상
- 광역계획권 내 첨단지식산업의 성장
 - 대덕연구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문화와 국제교류기능 확대
 - 행정도시의 국가적,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교류 증대가 예상되며 한반도의 구심적 역할, 나아가 동북아시아 경제권 중심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문화적 역량 확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의 충청권 발전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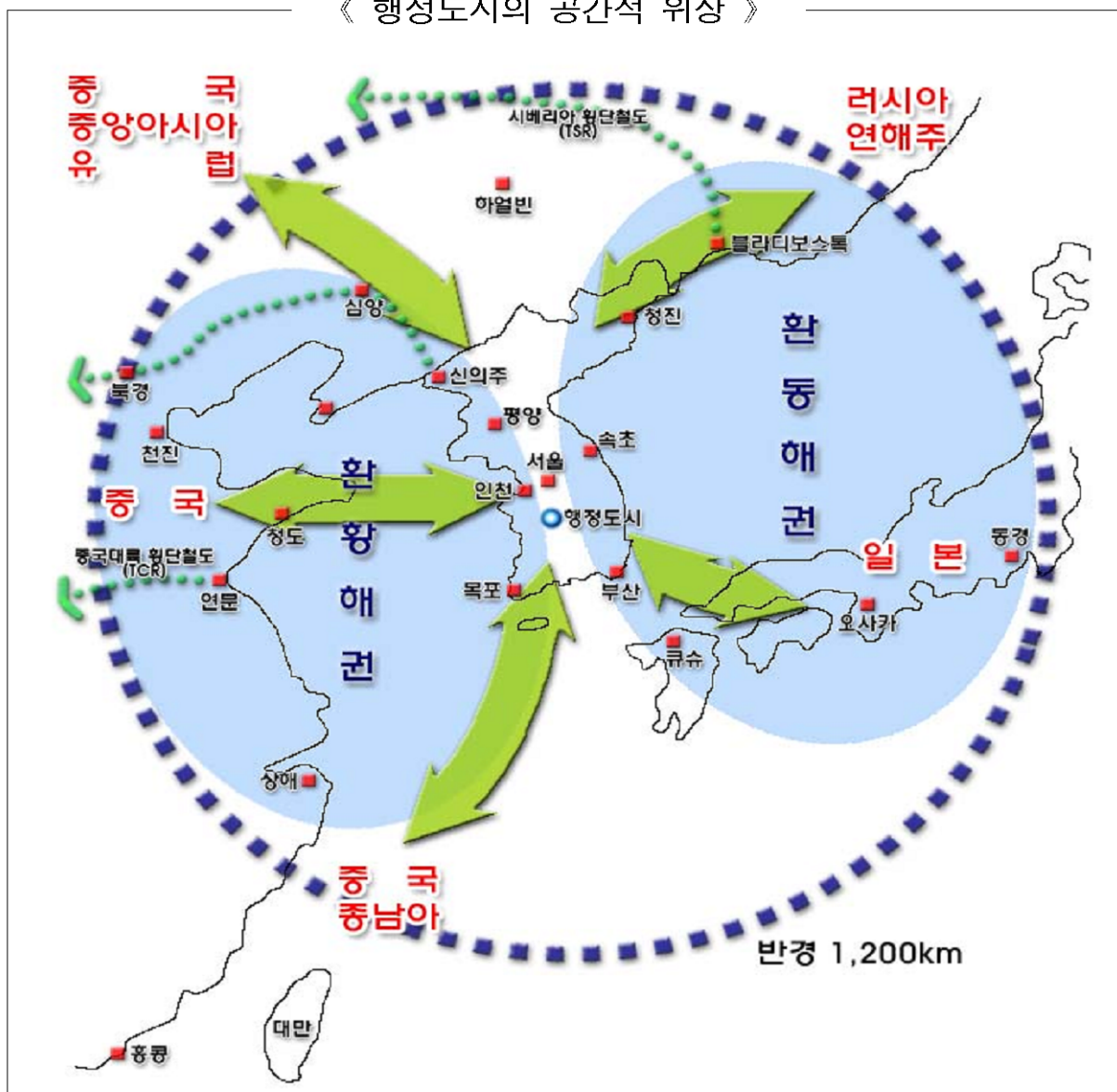
권역	기본목표	발전방향
대전광역시 과학기술 중추 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선진국제도시 - 동북아시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첨단과학기술도시 - 지방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의 선도모델도시 - 격조 높고 쾌적한 문화·복지·환경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핵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 동북아 R&D 허브도시 및 과학기술 기반의 조성 - 미래지향적 도시구조 형성과 교통·물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 - 문화·컨벤션산업의 육성으로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환경친화적 도시관리와 선도적인 복지모델의 실현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중심지역	- 첨단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 - 국토 발전축의 중심지역 - 삶의 질이 보장되는 웰빙 지역	- 국토발전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권 연계 인프라 확충 - 혁신형 산업발전기반 구축 -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신산업의 적극육성 -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산업화 추진 - 사회안전망 구축과 환경친화적 공간관리 -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제적 교류 거점 육성
충청남도 국가행정의 새로운 중심지역	- 행정중심복합도시권으로서 국가균형발전 선도지역 - 첨단산업과 전통농축산업의 상생 발전지역 - 개성과 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창출지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개발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체계 구축 - 개성 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특화관광 자원 개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서해안 시대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 지역자원의 관리 및 고품격의 생활·복지환경 조성 -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자체간 교류·협력 활성화

2.2 현황 및 문제점

2.2.1 입지특성

-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한반도 중부권의 거점권역으로 광주, 대구,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로부터 접근성이 우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영향력 확산에 용이
-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상해, 천진, 북경, 대련, 블라디보스톡, 평양, 서울, 인천, 부산,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등 동북아시아의 성장축인 초국경적 도시회랑(transnational urban corridor)의 중심부에 위치

《 행정도시의 공간적 위상 》



- 광역계획권은 내부적으로 행정도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청주시, 청원군, 남쪽으로 대전광역시와 계룡시, 서쪽에 공주시, 그리고 북쪽에 연기군, 천안시가 위치
 - 광역계획권의 주변으로는 권역 북측으로 수도권이 인접해 있으며 서측으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동측으로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그리고 남측으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이 인접
- 광역계획권은 전체 3,597㎢의 면적으로 충청북도 40.5%, 충청남도 44.5%, 대전광역시 15.0%로 구성됨
 - 이는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충청권 면적의 21.71%, 전국토의 3.61%에 해당
 - 시·군별 비중은 공주시의 면적이 광역계획권 전체의 26.2%를 차지하고 청원군(22.6%), 대전광역시(15.0%)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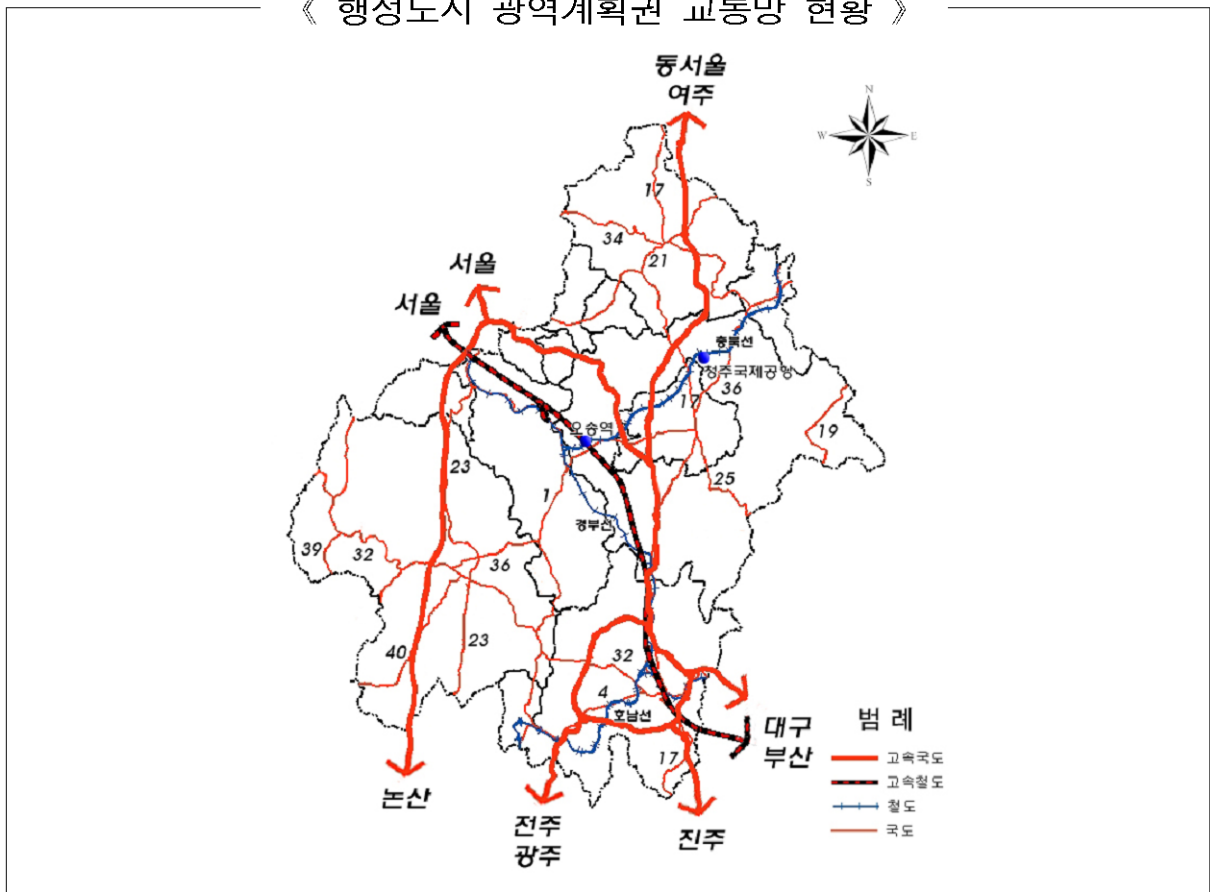
2.2.2 자연환경

- 광역계획권의 지형은 연기군, 청주시, 대전광역시가 비교적 평탄하며 동쪽으로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이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의 경계를 이루며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음
 - 북쪽으로는 금북정맥이 형성되어 공주시, 천안시(5개면)를 지나 진천군의 북서방향으로 뻗어가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공주시 남쪽 경계와 계룡시, 대전광역시의 남부로 이어지는 금남정맥이 형성되어 있음
 - 금남정맥에 포함되는 만인산(464m), 안평산(470m), 보문산(457m)과 금북정맥에 포함되는 태령산(450m), 한남금북정맥의 두타산(598m)등 400~500m의 낮은 산들이 둘러싼 형태를 보임
 - 광역계획권의 내부지역은 대부분 50m이하의 표고로 평탄한 지형을 이룸
- 광역계획권의 수계는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발원한 금강이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청원군을 거쳐 충청남도를 남서방향(연기군,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으로 관류하다가 군산만으로 흘러나감
 - 진천군의 백곡천, 증평군의 보강천 등이 천안시의 각 지류를 타고 흐르는 미호천과 합류하여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며 공주시의 각 지류들은 유구천을 따라 금강으로 유입되어 서해안으로 흘러감

2.2.3 공간구조와 도시네트워크·교통

-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 등 광역계획권 내 중심도시 간 기능적 연계성과 상호보완성의 강화 필요
 - 대전권과 청주권은 서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각각 대전광역시-계룡시, 청주시-청원군 중심으로 분화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음
 - 행정도시와 진천-음성지역의 혁신도시, 고속철도역 등 예정된 대형 개발사업과 기존 도시와의 도시기능 배분, 광역시설 배치 등 체계적 연계 필요
- 광역계획권은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분기, 경부 및 호남선 등 간선철도, 경부, 호남, 중부고속국도 및 주요국도가 분기되는 등 교통요충지임
 - 광역계획권 내 주요도시 및 시가지간 간선교통체계의 연계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경부고속국도 대전-청주 구간 등 부분별 혼잡구간 및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 대도시 내부의 순환교통체계 개선 필요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교통망 현황 》



2.2.4 인구, 토지이용 및 정주환경

- 광역계획권의 인구는 2,582천명(2005년 현재)으로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충청남·북도 인구대비 52.6%, 전국대비 5.3%를 차지
 - 과거 10년간 인구변화는 2.4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데 대전광역시(3.37%)와 청주시(2.00%)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공주시(△0.56%)와 증평군(△0.76%)은 다소 감소 추세임
- 평균 인구밀도는 718인/km²이며 청주시와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평균 인구밀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인구 현황 》

(단위: 천명, %)

구 분	인구		2005년 인구비율 (%)	2005년 인구밀도 (명/km ²)	연평균 성장률 (‘95~‘05)
	1995년	2005년			
계	2,035.9	2,582.9	100.00	718.05	2.41
대전광역시	1,049.6	1,462.5	56.62	2,710.46	3.37
청주시	520.0	633.9	24.54	4,131.99	2.00
청원군	117.8	121.3	4.70	148.94	0.29
진천군	57.0	62.1	2.41	153.04	0.87
증평군	33.3	30.8	1.19	376.91	△0.76
공주시	138.2	130.6	5.06	138.82	△0.56
연기군	80.9	85.4	3.31	236.19	0.54
계룡시	15.7	34.5	1.33	567.56	8.20
천안시(5개면)	23.4	21.8	0.84	91.19	△0.71
동면	3.5	2.9	0.11	67.34	△1.88
병천면	6.0	6.8	0.26	121.09	1.28
수신면	3.6	3.0	0.11	114.48	△1.78
성남면	5.2	4.4	0.17	134.49	△1.54
광덕면	5.1	4.7	0.18	57.80	△0.98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6.

- 토지이용 현황(2000~2004년간) 중 임야는 58.0%에서 57.5%로, 전·답·과수원 등의 농업용 토지는 25.1%에서 24.4%로 감소, 대지·도로·학교·공장용지 등 도시적 토지는 8.4%에서 9.5%로 증가
 - 대전광역시, 청주시 및 새로 개발 예정인 시가지(행정도시, 오송역세권) 외 공주, 연기, 증평, 청원 동남부지역 등은 주거 및 정주환경 개선 필요
- 천안시(5개면), 진천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주거시설, 공장 등 평면적이고 비체계적인 도시화 진전으로 환경 저해와 난개발이 우려되며 특히 공주시, 연기군 북부 및 청원군 동남부는 개발밀도가 낮음

2.2.5 환경, 녹지, 경관 및 공급시설

- 광역계획권 북쪽으로 금북정맥이 공주시, 천안시 남부를 지나 진천군의 북서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공주시 남쪽경계와 계룡시, 대전광역시의 남서부 지역에 금남정맥이 위치
- 전체적으로 녹지가 발달해 있으나 평면적이고 비체계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이 산재하여 난개발 방지와 환경 및 녹지 보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필요
 -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과 고속국도, 고속철도, 국도, 철도 등에 의해 녹지축과 생태통로가 부분적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도시외곽-내부공원-녹지를 연결하는 공원·녹지체계의 완결성 부족
 - 금강 수계의 하천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생활폐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적극적 처리 대책 필요
- 인구 및 산업체 증가로 일부지역에서 용수부족 우려가 있고(청주·청원권 및 진천) 하수도 보급 수준도 일부 낮은 편이며(진천) 2007년 이후에는 광역계획권 내 폐기물매립장의 용량 부족 예상

2.2.6 산업경제

- 광역계획권의 산업구조(산업별 취업자수 기준)는 1차 산업이 9.3%, 2차 산업이 20.6%, 3차 산업은 70.1%이며 2·3차 산업은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음
 - 대전광역시와 청주시는 1차 산업 비중이 2.3%, 3.3%로서 매우 낮고 3차 산업은 각 83.5%, 70.6%로 높게 나타남

- 광역계획권 내 거주 취업자수와 일자리수의 직주비율은 2000년 1.33에서 2005년 1.44로 증가세를 보여 일자리수보다 취업자수가 빨리 증가하고 있음
 - 청원과 진천은 지역 내 일자리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공주(1.87)와 계룡(1.74)은 직주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 내 일자리수의 부족현상을 보임
- 광역계획권 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은 국가산업단지 2개소(32,418천㎡), 지방산업단지 14개소(28,607천㎡)와 대덕연구단지,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월지방산업단지 등이 조성 중임
- 광역계획권 내 대부분 지역은 독립적인 경제기반이 취약한 편으로 대전광역시에 대한 도시서비스 의존도가 높아 광역계획권 내부 경제기반의 불균형 우려
-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발전의 기반은 조성되어 가는 추세이나 업무, 금융 및 전문서비스 기능의 집적기반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 대두

2.2.7 관광·문화·레저

- 단위 관광자원 또는 시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관광자원 간 연계성이 미흡한 편으로 지역별, 관광지별, 관광자원별 특화전략 강화 필요
- 교통·통신의 발달, 주5일 근무 등에 따라 광역계획권 내의 문화관광 및 레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시설 보완·확충 필요
 - 국립공원, 군립공원, 관광휴양지, 관광농원 등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백제문화 유적지를 비롯한 많은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박물관, 문화시설 등의 체계적인 문화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야 함
 - 대규모 광역체육시설, 생활권별 체육시설, 레저 및 위락시설 등이 양적으로 부족한 편이며 질적 수준도 제고 필요

2.2.8 방재

- 전체 하천의 94%를 차지하는 지방 2급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율이 54.4%에 불과하여 하천재해 위협에 대한 예방체계 미흡
- 광역계획권 대부분 지역에서 배수시설, 저수지, 유수지 등 도시방재시설이 부족하며 유지관리도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음

- 미호천 중상류, 금강과 미호천의 합류지점 인근이 지형적으로 홍수에 취약하여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지역의 미호천 유역 내 홍수피해 가능성이 있음
- 과거 홍성지진 발생지역과 광역계획권이 인접하고 있어 지진 대비가 필요하며 광역계획권 내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인적재난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 연기군(조치원) 등의 기존시가지에서 화재 등 인적재난 발생건수가 높음

2.3 광역계획권 SWOT 분석

2.3.1 강점(Strength)

-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고속철도 대전역, 오송역, 남공주역과 함께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적 중심지 뿐 아니라 국제적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입지
- 행정도시 건설은 충청권 지역의 증가하는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는 중부지방의 새로운 거점도시권 형성의 당위성을 가짐
- 광역계획권 내 대덕연구단지와 함께 대전과학산업단지, 연기첨단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이 건설 추진 중에 있어 첨단지식산업의 잠재력 우수
- 백제문화, 고인쇄 문화, 금강권역문화 등 국내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수 있는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역계획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문화·역사·관광 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 높음

2.3.2 약점(Weakness)

-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등의 대도시에 인구 및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연기, 공주, 증평 등의 도시들에서는 지속적인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어 광역계획권 내 지역 간 불균형 우려
- 광역계획권 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실행 중인 각종 지역개발 사업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심층 고려 미흡

- 지방자치단체별 계획 및 전략사업은 대부분 지역 고유의 자원·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양상을 보임
- 정부축을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광역적 도시기능 연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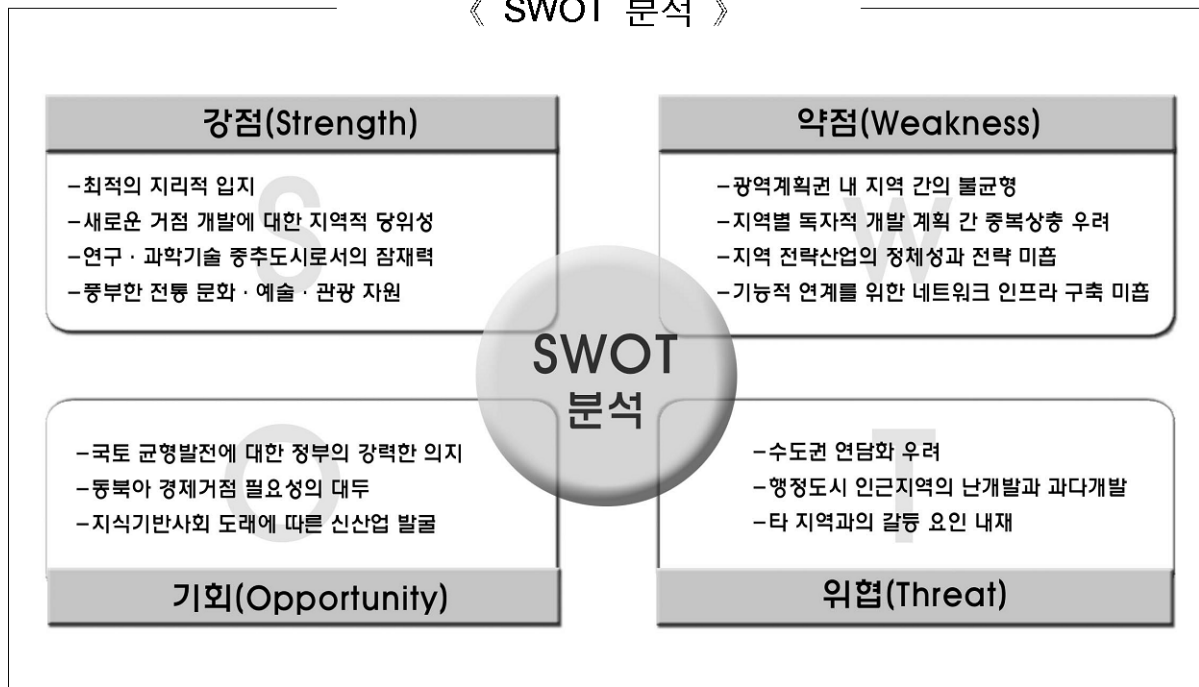
2.3.3 기회(Opportunity)

- 정부는 국토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도시 건설, 지방분권,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 충청권 거점권역 형성에 긍정적 여건을 제공
- 동북아시아 경제권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고 뚜렷한 거점 지역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거점을 선점할 필요성 대두
- 광역계획권은 행정, 문화·예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동북아시아경제권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광역계획권은 과학기술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과학기술의 중추도시로 추진되고 있어(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혁신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2.3.2 위협(Threat)

- 광역계획권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있으며 특히 천안 및 진천지역은 수도권과의 산업교류가 왕성하고 수도권 전철이 확대 운행되는 등 상당부분 연담화가 진행된 실정임
-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 청주시를 비롯한 주변지역을 이어줄 수 있는 연계 교통시설이 미흡하고 행정도시의 중심성을 고려한 광역시설의 보완 필요
- 행정도시 건설 등 새로운 거점권역의 형성 및 지역간 불균형을 위한 투자 확대가 국내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

《 SWOT 분석 》



2.4 주요 정책과제

2.4.1 수도권과의 연담화를 방지하고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거점도시권 형성

- 본 광역도시계획의 가장 큰 의의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거점도시권을 형성하여 개발 · 성장의 잠재력을 여타 다른 권역으로 확산하려는 것임
- 행정도시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필요
 - 경부축을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도시간의 교류 기반이 약한 실정이므로 적절한 성장관리 및 계획적 개발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 대두
- 광역계획권은 지역혁신체계의 핵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크므로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점도시권 형성 및 중심성 강화 필요
- 국토의 중심도시권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 국제교류, 중추문화 기능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 국제화 기반시설을 신설 · 확충 필요

2.4.2 수도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산업기반 및 정주환경 조성

- 행정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를 최대한 유인하고 영·호남 및 강원권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하는 수도권 대체효과를 보일 수 있어야 함
-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흡인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광역계획권 차원에서의 경쟁력 있는 고용 기반과 주택, 도시인프라, 서비스,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 조성 필요
 - 인근 도시에서의 문화·여가·관광·의료 등의 기능 강화 필요
 - 광역계획권 내 인구유출 및 감소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 기초편익시설 배치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주환경 정비 및 개선 대책 필요
- 첨단지식산업의 기반이 건설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가능성이 크므로 기존의 연구단지 및 대학과의 연계발전 등을 통해 교육·연구 및 첨단기술의 혁신거점 형성을 가시화해야 함

2.4.3 광역적 차원의 공간구조 개편과 계획적 관리

- 행정도시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개발을 담보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인근 지역에서 추진 또는 계획 수립 중인 주요 개발사업의 규모·내용 및 추진 일정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난개발과 지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과도한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대전광역시나 행정도시 중심의 단핵집중적 공간구조를 지양하고 광역계획권내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
 - 행정도시-대전광역시-청주시 등 대도시와 공주, 연기, 진천, 증평, 계룡 등의 지역중심지가 연계되는 다핵분산형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심지 간 순환망 위주의 간선교통망 구축 필요

- 광역계획권 내 주요도시 및 시가지간 간선교통체계와 주요 중심지 내부 교통체계 보완 필요
 - 대전광역시-행정도시-청주시 간 간선도로 보완 및 청주국제공항, 오송역 등 교통결절지점을 효율적으로 연계
 - 광역계획권 내 대도시인 대전광역시, 청주시의 도시 내부 공간통합성 및 내부순환 교통체계를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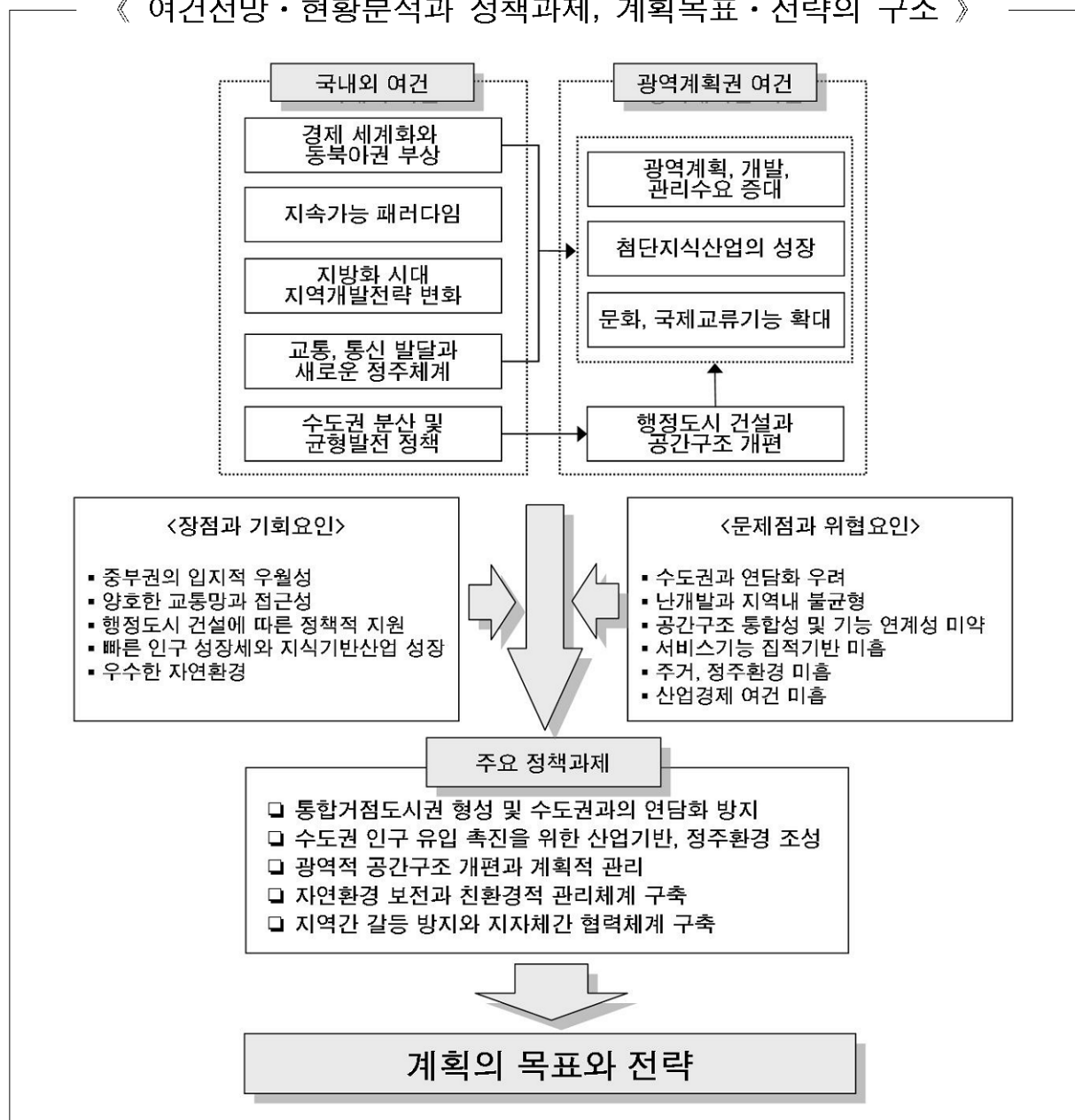
2.4.4 자연환경보전과 친환경적 관리체계 구축

-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적·종합적 환경관리정책의 체계적 추진 필요
 - 과밀개발을 지양하고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우수한 자연녹지·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토지이용 및 개발의 원칙 마련
-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을 보전하여 여가시간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적 문화·여가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수립 필요
 - 관광자원 및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관광자원별 특화전략 마련
 -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 광역체육 시설, 생활권별 체육시설, 레저 및 위락시설 확충 필요
- 금강 수계의 하천 수질 보전대책을 강화하고 녹지축과 생태통로의 분절 최소화·복원을 위한 대책 및 도시계획적 지침 마련 필요
 - 시가지내 녹지 확충 및 도시외곽의 공원·녹지와 내부의 공원·녹지를 연결하는 공원·녹지체계 형성 방안 마련 필요
- 인구 및 산업체 증가에 대비한 용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하수 및 폐기물처리 시설 등 환경시설의 용량 확충 필요
 - 배수시설, 저수지, 유수지 등 방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체계 개선안 모색
 - 기존 시가지에서의 인위적 재난방지프로그램 구축 및 도시 내 안전관리시설 지정·운영 지침 마련 필요

2.4.5 지역 간 갈등 방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 행정도시가 건설되고 이를 중심으로 거점도시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광역계획권 내외의 지역 간 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과 광역계획권의 경계지점에 있는 지역과 행정도시에 인접한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이 갈등 소지를 내포
-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한 자원배분, 지자체간 개발욕구의 합리적 조정 등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행·재정적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여건전망·현황분석과 정책과제, 계획목표·전략의 구조 》



3. 계획목표 · 전략 및 계획지표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 국제 수준의 문화 창달과 국제교류 기능 등을 담당하는 21세기 동북아의 핵심도시권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촉진하는 중추행정기능의 새로운 중심지
 - 중심도시간 첨단산업·연구개발·교육의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어 도시혁신의 선도거점

3.1 계획의 목표

3.1.1 국가중추행정 및 자족기능을 갖춘 거점권역 형성

- 국가행정 및 공공서비스, 연구개발 및 교육, 첨단산업 생산·서비스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추어 수도권에 대응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촉진하는 거점도시권 형성

3.1.2 21세기 문화 및 첨단산업의 혁신도시네트워크 구현

- 국제 수준의 문화 창달과 국제교류 기능 등을 담당하는 21세기 동북아의 핵심 도시권 실현
- 인근 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로 첨단산업·연구개발·교육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도시혁신의 선도거점 구축

3.1.3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 및 난개발·연담화 방지

- 난개발과 시가지간 연담화를 지양하고 환경 및 경관보전형 토지이용과 고품격의 생활·복지환경 정비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3.2 추진 전략

3.2.1 국가중추행정 및 자족기능을 갖춘 거점권역 형성

- 국가행정 및 공공서비스, 문화 및 국제교류, 연구개발 및 교육, 첨단산업 생산·서비스 등 기능의 적정 배치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첨단과학기술 및 지식산업 육성과 고급인력 양성 기반 구축을 통해 산·학·연 연계 혁신거점 구축
- 전국 주요 도시로부터 광역계획권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망·철도 정비 및 광역계획권 내 순환도로망 구축
- 국내 및 동북아 중심권역 구현을 위해 청주국제공항의 적극 활용과 관련 국제기능 도입, 인천공항 및 서해안 항만들과의 접근성 향상 등 국제교류 및 물류유통 기능 강화

3.2.2 21세기 문화 및 첨단산업의 혁신도시네트워크 구현

-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품격 높은 문화인프라 구축과 역사문화 자원의 국제화를 통한 광역계획권의 “대한민국 대표문화” 브랜드화
- 공주의 백제문화, 청주의 고인쇄문화, 대전광역시의 유성관광단지·엑스포공원 등 관광자원과 인접 녹지축, 교통축을 연계한 관광네트워크 구축
- 국제규모의 스포츠 콤플렉스와 복합레저단지 등 광역계획권의 문화레저 수요 충족 및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 첨단산업체-대학교-연구기관간의 혁신·협력체제 등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광역계획권 내 교통, 정보통신 등 인프라 강화

3.2.3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 및 난개발·연담화 방지

- 유기적인 도농통합과 시가지간 연담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역공간구조 관리 정책 수립
- 녹지 및 수변공간의 보존·관리, 자연경관 보전 등을 우선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체계를 구축

- 환경보전 및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회피·우회·보전의 환경친화적 교통시설 확충 및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
- 고품격의 생활·복지환경과 안정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의료, 복지, 환경, 교통, 도시계획 분야 등을 아우르는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3.3 인구지표의 설정

3.3.1 인구지표 설정의 기본방향

- 행정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적 의의를 지니므로 인구지표를 국토공간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 광역계획권의 인구지표는 행정도시의 건설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충청권에 분담되는 인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쟁력 있는 거점권역 형성을 위한 광역계획권의 체계적인 지역개발의 결과로써 실현 가능한 인구 규모를 상정
- 본 계획의 인구지표는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개발을 유도해가면서 자연추세 또는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구를 수용한다는 전제 하의 인구성장 시나리오로 설정

□ 인구지표 설정의 유형

- 인구지표의 설정은 계획의 성격에 따라 정책목표로써 설정되는 경우와 인구성장 시나리오로써 간주되는 경우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정책목표의 경우는 계획의 성격에 따라 앞으로 달성해야 할 인구지표로 설정
 - ex) 행정도시 2030년 인구 목표를 50만인으로 설정하는 경우
- 인구성장 시나리오의 경우는 자연추세 또는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구를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인구지표로 설정함
 - ex)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007. 4)에서는 목표인구(정책적 목표 감안)와 관리인구(수도권 3개 시·도 도시계획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2020년 수도권 인구를 2,375~2,470만인 수준으로 제시

3.3.3 광역계획권 인구 전망

- 광역계획권의 인구추이는(1980~2005년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 성장을 보임
 - 대전·청주·계룡 등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청원·진천 등은 인구 감소 후 최근 소폭 증가
 - 증평·공주·연기와 천안시(5개면)는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인구추이 》

(단위: 인)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
계	1,438,077	1,722,793	2,035,080	2,254,764	2,458,312	2,582,914	2.37
대전광역시	651,642	866,695	1,049,578	1,268,432	1,390,510	1,462,535	3.29
청주시	252,985	350,175	497,429	520,046	582,758	633,888	3.74
청원군	173,398	141,824	114,689	117,772	124,958	121,272	△1.42
진천군	64,106	56,753	49,242	57,004	61,131	62,133	△0.12
증평군	-	34,139	37,498	33,300	32,464	30,846	△0.51
공주시	167,406	152,252	158,075	138,202	135,931	130,595	△0.99
연기군	97,371	92,736	90,386	80,931	80,851	85,395	△0.52
계룡시	-	-	11,682	15,671	27,578	34,451	7.48
천안시(5개면)	31,169	28,219	26,501	23,406	22,131	21,799	△1.42

자료: 시·군 통계연보

- 광역계획권 인구는 자연적, 사회적 인구 변동 요인 및 행정도시, 혁신도시 및 지역별 개발사업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추계한 경우 2030년 371만인으로 전망
 - 행정도시가 건설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020년 302만인까지 증가 후 2030년대까지 정체하는 것으로 추계
 - 자연적 인구증가(조성법), 대단위 개발사업(택지 및 산업단지)으로 인한 유발 인구,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유발인구 등을 감안하면 2010년 320만인, 2020년 361만인, 2030년 371만인으로 추정
- ※ 각 시·도,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인구목표는 2020년 또는 2025년까지 총 446만인 수준임(2030년 행정도시 인구 50만인 포함)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인구추정 결과》

(단위 : 천인)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연평균 증가율 (%)
대전광역시	1,696	1,785	1,840	1,868	1,870	0.49
충청북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1,078	1,106	1,149	1,140	1,128	0.23
행정도시 및 충청남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426	511	621	657	708	2.58
계	3,200	3,402	3,610	3,665	3,706	0.74

3.3.3 인구 시나리오 설정

- 광역계획권의 인구시나리오는 정량적 분석 결과 전망된 인구규모와 중부권 거점도시권 형성의 정책적 의미를 같이 고려하여 상한·하한 인구 시나리오 제시
- 2030년 인구추계치 370만인을 하한인구로, 30만인 수준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목표가 추가된 400만인을 상한인구로 설정
 - 2030년 행정도시 건설을 전제로 한 인구추계를 하한인구로 설정
 -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의 정책적 규범을 고려할 때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은 수도권 인구를 보다 많이 분담하는 정책목표를 추구할 필요

※ 광역계획권내 각 시·군별 2020년~2030년 인구목표(도시기본계획 등)의 합계는 총 4,464천인으로서 전체적으로 목표지향성이 과다한 경향을 보이며 서로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 계획의 상한 인구로 설정하기에는 부적절

3.3.3 지역별 인구배분 등 인구지표 운용방안

- 광역계획권 전체의 총량 인구에 대하여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행정도시는 제외) 협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지표 범위를 제시
- 본 광역계획권은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과 전략이 펼쳐지는 공간적인 영역으로 행정·재정적 기속력이 있는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

《 시·도별 인구지표(상한, 하한) 》

(단위: 천인)

구 분	하한인구	상한인구
계	3,700	4,000
대전광역시	1,750	1,850
충청북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1,070	1,220
충청남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380	430
행정도시	500	500

주 : 시·도,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상·하한 인구지표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운용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인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구 시나리오 범위 내에서 전략적인 개발과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운용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그 지역에서의 고용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고용 대 인구 비율(Job-Population Ratio)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거지역(택지) 개발 수요를 조율하는 계획적 관리체계를 도입

□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5년 단위)을 통한 지역별 인구지표 작성 방법

① 단위 지역의 고용인구 변화량 산정 (= P)

- 이전 5년간 해당 지역의 고용 창출 성과를 분석하고(센서스 자료 등을 기초로 해당지역에서의 고용 순증가 집계) 여기에 별도로 실현가능한 고용 창출량을 추계하여 합산

※ 사업추진이 확실한 산업단지의 고용 파급효과, 대학교의 유치에 따른 효과, 기타 고용 파급효과를 수반하는 사업 등의 활성화 기간을 감안한 지난 5년간의 고용 유발량을 의미

ex) 산업단지의 경우 계획, 분양, 입주까지 대략 10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단지의 활성화 시점에서 발생할 고용효과를 등분할한 5년치 고용창출량 반영 가능

② 고용인구 변화에 따른 택지개발 수요 산출 (= R)

- 위에서 산출한 고용 변화량에 고용 1인당 택지 원단위를 곱하고 여기에 지역내 주택매실, 산업단지 건설 등의 변동 요인을 보완하기 위한 분량을 인정하여 택지수요를 산출

$$\Rightarrow R = P \times (\text{고용 1인당 택지 원단위}) + (\text{보정분량})$$

단, 개발가능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pm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유도

③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시 반영하되 해당 지역의 상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판단(단, 대전광역시는 예외)하여 수정·보완 가능

※ 보정 시 개발가능지, 환경·녹지·경관 등 제약요인 등을 고려

4. 공간구조 구상

4.1 공간구조 현황 진단

4.1.1 대전광역시, 청주시 중심의 양핵 중심 구조

-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 등 광역계획권내 중심도시 간 기능적 연계성과 상호 보완성이 미약
 - 대전권과 청주권은 서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각각 대전광역시-계룡시, 청주시-청원군 중심의 도시권 형성
 - 계룡시, 연기군, 증평군, 진천군 등 지역 중심도시는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독립적 생활권 형성 제약
- 철도 및 고속국도 등 교통망 또한 대전광역시와 청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접 시·군 간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동서지역간의 연계교통망 형성 미흡

4.1.2 일부지역에 편중된 개발 및 도시 기간산업 기능 미약

- 산업단지 등이 대전광역시, 청주시, 청원군 등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 심화 우려
-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유입과 이들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공공시설 개발 수요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공주시, 연기군, 증평군 등은 상대적으로 낙후

4.1.3 광역계획권내 지역 간의 연계기능 미흡

- 주요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체계가 각 지역별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기능과 역할이 서로 보완되지 못하고 있음

《 대전권 및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개요 》

구분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2020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행정 구역	공주시, 논산시(계룡시 포함), 연기군,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청원군(부용면, 현도면, 문의면), 보은군(회남면)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면적	4,663.87km ²	3,403.14km ²
인구	1,949,000인	826,691인
공간 구조	- 도시기능, 교통망, 정보·교류망의 광역적 이용체계 구축 -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의한 대전 광역도시권의 기능 확충 - 첨단산업의 집중육성으로 경제기반 강화 - 도시별 적정인구 수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 - 중심도시 : 대전 기존도심, 둔산, 유성, 서남부 - 지역중심도시 : 공주시, 논산시 - 배후지원도시 : 연기군, 금산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 특수기능도시 : 계룡시	- 중부권 거점 기반 마련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권 육성 - 첨단산업 집중 육성으로 경제기반 강화 - 지역간 연계교통망 확충 - 도시성장관리정책·도시별 적정인구 수용·균형발전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 - 중심도시 : 청주시 - 부도심 : 오송, 증평 - 관광공간·루트개발 : 괴산군, 보은군 - 수도권 사업 기능분담 : 진천군, 음성군
광역 교통	- 전국차원의 교통중심지 및 관문기능 강화 - 권역 내 동서 및 순환연계 도로망체계 구축 - 지역간 광역철도 보강 -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이용자 중심 종합 환승체계 구축 - 대전권 종합화물수송체계 구축 -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간의 정합성 유지 강화 - 종합적인 광역교통행정체계의 구축	- 중부권 광역철도망체계의 구축 - 공항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 - 광역도로망체계의 개선 - 청주국제공항~대전간 경량전철망 계획 - 국토간선 남북 3축 보완 -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오송역) 건설

4.2 공간구조 구상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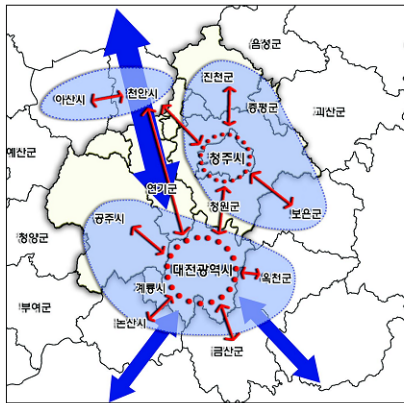
4.2.1 공간구조 구상의 원칙

- 행정도시와 인근 도시간 네트워크형 광역계획권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향후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 구축을 위한 공간구조 제시
 - 행정도시와 기존 지역 중심지인 대전권·청주권을 통합하여 행정도시 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관리를 위한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정비와 배치, 수도권과의 연담화 지양 등 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한 공간구조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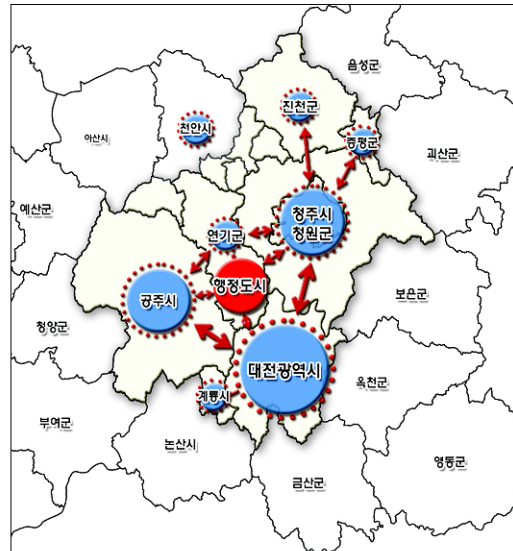
4.2.2 중심도시 및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도시네트워크의 형성

- 광역계획권 내 주요 중심도시로는 인구 50만인 이상의 대전광역시·청주시 등이 있으며 이외에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진천군, 증평군 등의 지역 중심도시가 산재
 - 대전권과 청주권으로 분절 경향을 보이고 있는 공간구조를 행정도시 중심의 통합적 거점권역으로 재편성
 - 광역계획권 내 중심도시와 행정도시와의 상호 기능 보완 및 연계 강화를 통해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거점권역 형성 기반 구축
- 광역계획권 내 주요 중심도시를 포괄하는 도시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동등한 위상으로 각 지역의 발전과 전체 광역계획권의 동반성장 추구
 - 대도시(중심도시)-주변도시 체계가 아닌 여러 개의 독립된 도시가 기능상 상호 보완하고 교통·통신에 의해 연계되는 다중심적,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
 - 대전광역시·계룡시, 공주시, 행정도시·연기군, 청주시·청원군, 진천군·증평군 등 5개 중심지역을 연계하는 공간구조 제시
- 지역간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행정도시의 국가행정 및 공공기능, 대전권의 연구 기능, 청주권의 첨단지식산업 기능, 공주의 문화·역사 자원, 청주국제공항의 국제교류 기능 등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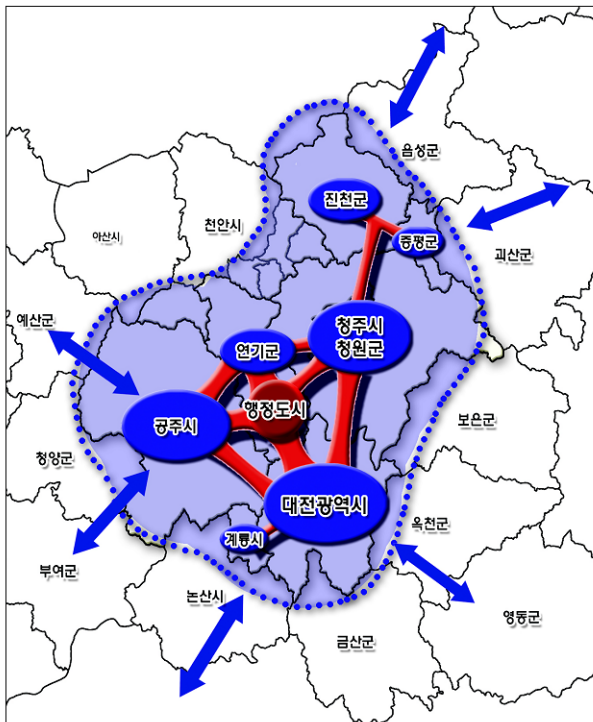
《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



기존의 공간구조
(경부축 중심의 분절형)



공간구조 개편방향
(교통·기능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도시 형성)



2030년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공간구조
(통합적 거점 구축)

4.2.3 산업구조 및 경제기반 개편을 위한 혁신 거점 육성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한 고부가가치산업 위주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구조 및 경제기반 개편
- 첨단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대학의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혁신의 거점화와 경쟁력 있는 산업생산 기반 마련

4.2.4 광역교통 연계망의 합리적 구축

- 행정도시·대전광역시·청주시 간의 중심축과 간선도로, 철도, 신교통수단 등 연계교통망 체계 구축
- 청주국제공항·고속철도역과 행정도시의 연계도로망 확충 및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네트워크 구축

4.2.5 광역계획권 도시 네트워크의 계획적 성장관리체계 구축

- 광역계획권 내 주요도시 간 적정 인구 및 기능 배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 행정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는 교육·문화·관광·의료·위락 등 다양한 배후 지원기능 강화

□ “네트워크 도시”의 개념

- 다중심적인 도시집적체로 단일 중심을 가진 대도시권과 구별되며 여러 개의 독립된 도시가 기능상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고 교통·통신에 의해 집적경제를 달성하는 경우를 이룸
 - 21세기의 네트워크 도시는 연구, 산업, 교육, 문화예술 등 지식기반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는 혁신적 도시들이 주류를 이룸
- 네트워크 도시의 하위시스템은 산업생산, 과학기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지며 각 도시는 수평적으로 상호보완하면서 발전하는 거버넌스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 “네트워크 도시”의 의의

- ① 외부경제(positive externality)의 강화
- ②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의 실현
- ③ 중심지 도시체계의 기능 보완
- ④ 경제적 불확실성의 감소 등의 의의가 있음

※ 대표적인 해외사례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로테르담-헤이그 중심의 란트스타트(Randstad), 일본 오사카-교토-고베 중심의 게이한신 대도시권(Keihanshin metropolitan area)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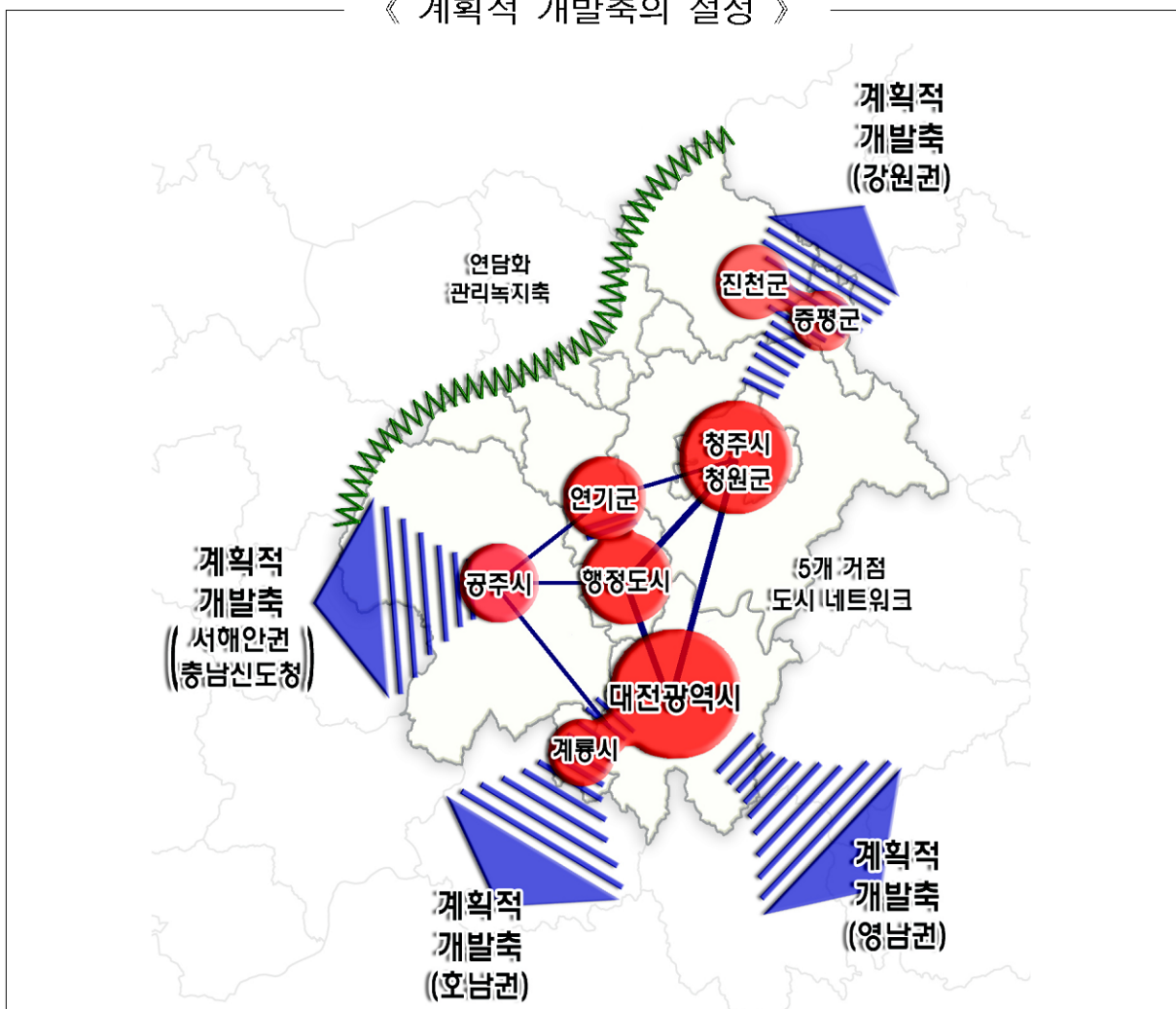
4.3 개발·교통·녹지축 설정

4.3.1 계획적 개발축

- 기존 광역도시계획에서의 개발을 촉진·유도하는 “개발축” 개념이 아닌 성장관리를 유도하고 과잉 개발을 억제하는 계획적 개발의 개념 도입
 - 행정도시 건설단계와 인근지역의 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 도모
 - 현재 계획 수립 혹은 추진 중인 각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단계적 조정과 보전지역 내 난개발 방지 및 적정 수준 개발 유도

- 체계적·단계적 개발 유도, 관리 또는 보전과 적정수준의 개발관리를 도모하는 계획적 개발축 설정
 - 제1축 : 행정도시에서 공주 방향(서해안 및 충남신도청권을 지향)
 - 제2축 : 행정도시에서 계룡방향(호남권 지향)
 - 제3축 : 행정도시에서 대전도심을 지나는 방향(영남권 지향)
 - 제4축 : 행정도시에서 청주·청원을 지나 진천·증평 방향(강원권 및 충북 내륙권 지향)
- 경부축에 대한 개발집중과 수도권과의 연담화를 억제하기 위해 연담화관리 녹지축을 설정
 - 행정도시-연기군의 도시지역은 행정도시 건설의 시너지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 도모

《 계획적 개발축의 설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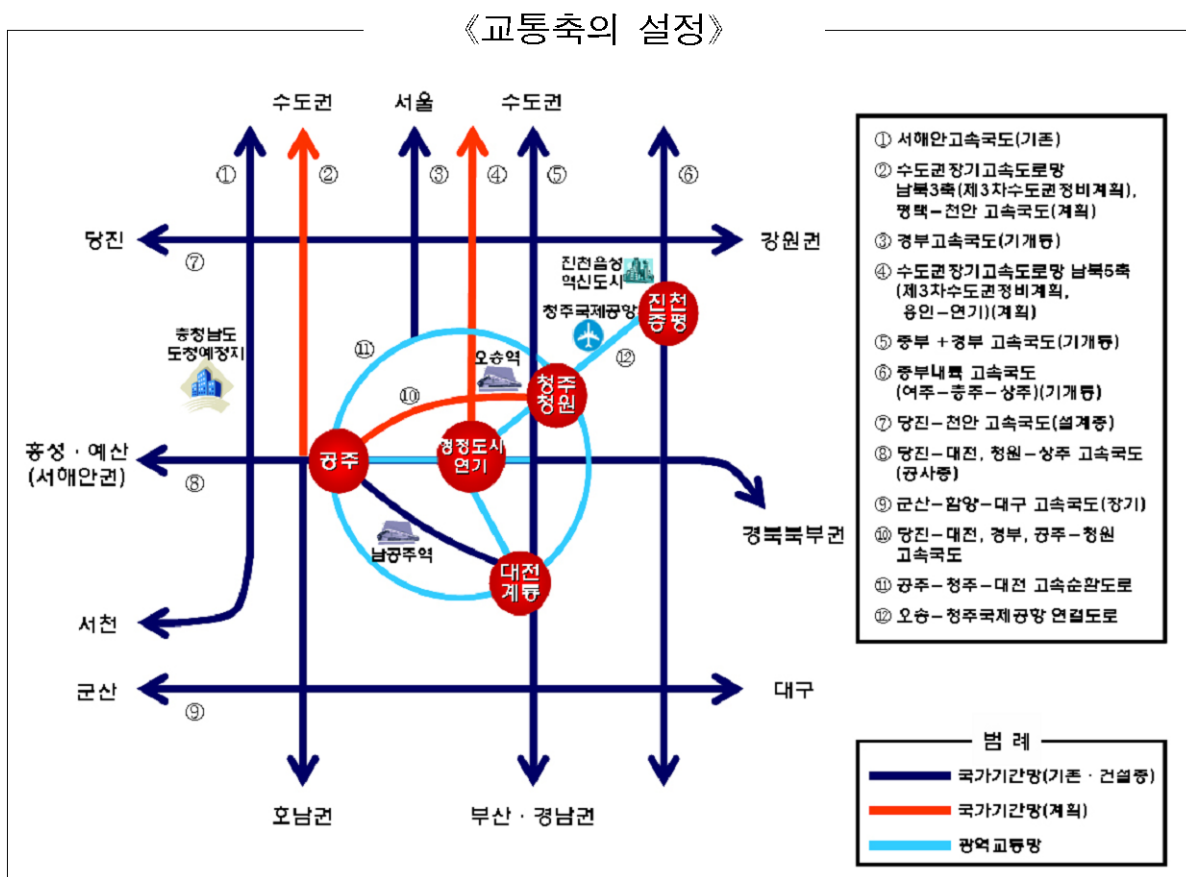


《 “광역계획권 5개 거점도시 네트워크”의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

권역	기능 분담 및 연계 전략
광역계획권 전체	· 수도권 수준의 국가중추행정,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국제교류 등 (국가)중심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하되 · 거점도시별 특화 기능으로 상호 보완적인 네트워크 형성
행정도시 · 연기군	· 행정도시는 중앙행정, 국제교류, 문화, 지식산업 및 교육연구 기능을 위주로 개발하여 광역계획권 내의 중추도시로 육성 · 연기군은 기존의 물류·산업·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CT·관광레저 등 도시적 서비스 기능 보완 및 동반성장 추진
대전광역시 · 계룡시	· 행정도시의 핵심적 배후도시로서 중앙행정 및 군사·국방, 과학기술 R&D, 금융·상업·물류 등 광역적 도시 서비스 지원 기능을 담당 · 풍부한 인구, 다양한 도시기능 및 우수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의 국토균형발전 촉진 기능 선도
청주시 · 청원군	·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오송역을 통한 행정도시의 관문으로 국제교류 및 광역적 도시서비스 기능 보완 ·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진천·증평▷청주·청원▷연기·행정도시▷공주▷대전으로 이어지는 첨단지식기반산업 벨트의 중추 역할 수행
공주시	· 고속철도 남공주역을 통한 행정도시의 남서쪽 관문이자 광역권계획의 서부 거점지역으로 서해안 및 충남신도청예정지 방향 개발축과 연결하는 교통결절점으로 설정 · 첨단산업 및 성장동력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보완하고 풍부한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광역적 문화거점으로 개발
진천군 · 증평군	· 동북부 거점지역으로 강원권 및 충북내륙권 방향 개발축과 연결하는 교통결절점으로 설정 · 진천·음성 혁신도시 및 증평 항공우주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첨단산업 혁신거점 역할 수행

4.3.2 국가 및 광역 교통체계와 연계된 교통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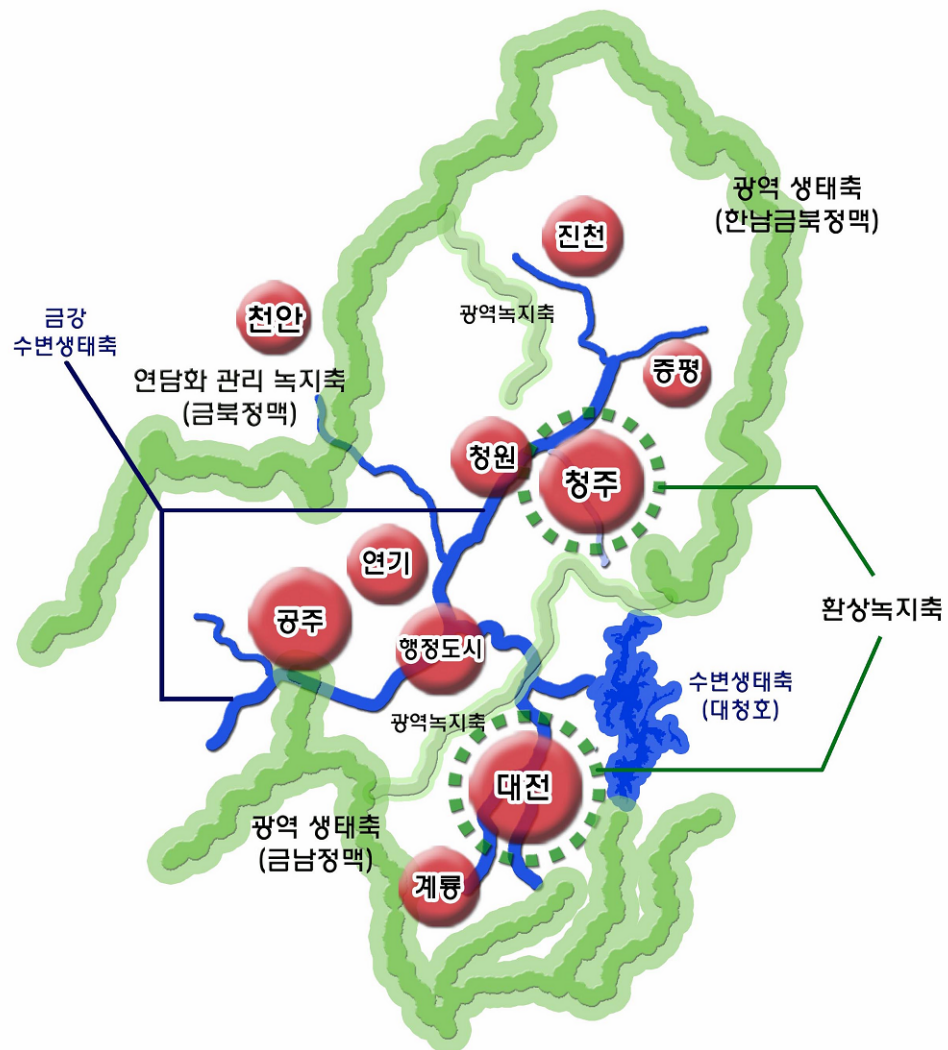
-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속순환교통체계 형성
 - 공주~청원 고속국도를 신설하여 행정도시 고속순환교통체계를 완비하고 기존 경부, 중부, 논산~천안, 호남고속국도의 통행량을 분산 처리
- 행정도시 관문을 연결하는 간선교통체계 구축
 - 행정도시의 국제 및 국가적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청주국제공항, 고속철도(오송역, 남공주역)로부터 행정도시로의 신속한 이동성을 확보하되 대중교통체계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구축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
- 행정도시와 거점도시간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 구축
 - 행정도시, 대전광역시, 청주시를 상호 연결하는 직결 간선교통망을 구축하여 광역계획권의 계획적 개발축의 연계 강화 지원
 - 광역계획권 내 주요도시간 연계발전과 신속한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순환간선도로망 구축



4.3.3 녹지·생태·수변환경 보전 체계

- 수도권과의 연담화 및 주요도시 간 연담화를 지양하고 생태계간 연계 체계화를 통한 녹지·생태·수변환경의 생태네트워크 보전 체계 설정
- 환경적·지형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금북·한남금북·금남 정맥 등은 절대 보전을 요하는 최상위 생태지형축이므로 광역생태축으로 설정
 - ※ 공주시 북부외곽으로부터 진천군 북부지역으로 지나가는 금북정맥은 광역생태축 및 수도권과의 연담화를 제어하기 위한 연담화관리녹지축으로 설정
- 대청호 수질관리, 금강 및 지류의 하천환경 보호를 위한 수변생태축 설정
 - 금강·대청호 주변의 수변공간이 형성하는 수생태의 보전을 위한 광역 수변생태축 설정
 - 미호천, 유구천 등 광역계획권 내 주요하천을 중심으로 도시수변생태축을 설정하고 광역수변생태축과 연계
 - ※ 녹지생태축과 수변생태축이 연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적 이용을 도모하여 생태 거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행정도시의 “블루-그린(Blue-Green)” 네트워크와 연계
-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청주시 주변지역(중전 개발제한구역)을 도심 환상 녹지축으로 설정하고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녹지는 보전을 위주로 관리

《 녹지축의 설정 》



제2부 부문별 계획

5. 토지이용계획
6. 광역교통계획
7. 녹지관리계획
8. 경관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광역시설계획
11. 문화 및 여가계획
12. 방재계획
13. 행정도시 주변지역

5. 토지이용계획

5.1 현황 및 여건 분석

5.1.1 토지이용 현황

- 광역계획권의 토지이용 실태(2005년 현재)는 도시용 토지(대지, 공장용지, 학교 용지 등) 9.4%, 농업용 토지(전, 답, 과수원 등) 23.5%, 임야 58.1%, 기타 9.0%로 나타남
- 광역계획권내 도시지역은 총 1,121.8km²이며 이중 녹지지역이 80.8%로 가장 많고 주거지역 14.0%, 공업지역 3.7%, 상업지역 1.5%의 순으로 나타남
 - 비도시지역은 총 2,832.5km²이며 이중 농림지역 57.8%, 관리지역 38.5%, 자연환경 보전지역 3.8%의 순으로 나타남

5.1.2 광역토지이용 문제점

- 대전권과 청주권이 별도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축과 장래 토지개발 수요 등의 측면에서 연계성과 일관성 부족
-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건설에 따라 개발압력의 증가로 관리지역 및 보전 지역 등에서의 무질서한 난개발이 심화될 우려
 - 행정도시, 혁신도시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추진으로 광역계획권 내 인구 성장과 산업활동이 급속히 증가하여 주거·공업용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가 상승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기개발지 및 개발예정지 등의 지역별 편중(특히 공주시, 연기군 북부 및 청원군 동남부의 개발밀도가 낮음)이 심화되어 있음
 - 지역 거점도시인 공주시, 진천군, 증평군 등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광역 계획권 내 주요 중심지 간의 기능적 연계성과 보완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부재

5.1.3 시·군별 토지이용 문제점

○ 대전광역시·계룡시

- 주거·상업·공업 기능이 혼재하는 등 토지이용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으로 농경지의 잠식 가속화
- 양호한 농경지가 도심 내에 입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계룡시는 군사보안의 특수성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시내로의 편중된 개발과 지형·지세로 인하여 토지이용 연계체계 부족

○ 청주시·청원군

- 청주시내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획일적인 아파트단지 및 유흥지대 혼재 등 토지이용체계 혼잡
- 청원군에서는 공장용지의 산발적 분포로 인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 진천군·증평군

- 시가화 지역에서는 토지이용 혼재, 공원이 부족하며 외곽 지역에서는 소규모 공장의 산만한 입지 등 토지이용이 비체계적인 양상을 보임

○ 공주시·연기군·천안시(5개면)

- 공주시는 구시가지의 토지이용이 무질서한 편이며 연기군은 행정도시의 직접 영향권 지역으로 조치원읍 및 행정도시 인접지역에서 난개발이 우려됨
- 천안시(5개면)는 소규모 공장 난립 등 계획적인 토지이용 관리 시급

5.2 핵심과제 및 추진전략

5.2.1 핵심과제

- 중부권 5개 거점도시 네트워크 공간구조 정립을 위한 기능적 연계 중심의 토지이용 및 관리방안 수립
- 연담화 우려지역 및 난개발 발생 가능 지역에서의 계획적·환경친화적 토지이용체계 구축

- 권역 내 중심지의 시가지 정비와 외곽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 광역토지이용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

문제점	핵심과제	세부과제
5개 거점도시간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부족	중부권 5개 거점도시 네트워크 공간구조 정립을 위한 기능적 연계 중심의 토지이용 및 관리방안 수립	- 공간구조 상 개발축을 따라 기능적으로 연계된 토지용도(도시화 예정용지) 부여 - 권역 내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규모 및 사업추진일정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수립 - 광역적 도시화예정용지 수요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개발압력의 증가로 인한 난개발 심화	연담화 우려지역 및 난개발 발생 가능 지역에서의 계획적·환경친화적 토지이용체계 구축	- 수도권과의 연담화 우려가 높은 천안 남부 및 진천 북서부 지역에 대한 보전과 관리 강화 - 난개발 발생가능성이 높은 행정도시 주변지역과 연기군, 청원군 오송 인근 등에서의 계획성 강화 - 우수한 자연녹지 및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토지이용 및 관리 기준 마련
기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의 지역별 편중	권역내 중심지의 시가지 정비와 외곽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 지자체별 인구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고려한 도시화 토지 수요의 합리적 배분 - 공주시, 연기군, 진천군, 증평군 등은 지역중심성 강화를 위해 시가지를 확충 또는 정비하고 적정량의 용도 배분 - 외곽 농촌지역은 환경보전성을 강화하되 취락지구는 체계적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공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정 토지이용 및 관리 지침 수립

5.2.2 추진전략

- 행정도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 광역계획권 내 거점도시 간의 위계와 기능의 연계성을 갖춘 도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방향 설정
 - 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인접도시 간의 대등하고 수평적 기능보완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을 유도
 - 신규 개발사업은 가급적 기존도시와 인접하여 유치

-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지양하고 환경, 녹지를 고려한 개발가능지를 선별하여 토지개발 수요에 대처
 - 보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를 중심으로 개발용지를 공급하여 자연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체계 구축
- 지역간 상생발전과 다양한 토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광역적 토지이용 수요의 관리방안을 “스마트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 수요와 공급의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상생적 토지수요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의 개념과 의의

-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한 의사 결정방식에 의해 성장을 수용하는 개발개념
 - 개발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개발을 강력히 억제하는 성장관리 정책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제정책으로 부작용 발생
 - 청사진적·물리적 계획이나 개발사업 주체의 맹목적 사업 추진이 아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을 협력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성장의 방향과 위치는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이미 존재하거나 기반 시설에 대한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
 - 도시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외의 녹지공간에 대한 개발압력을 완화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기성시가지는 고밀도 복합용도 재개발, 나대지 등 미활용 토지의 우선 이용 등의 전략 추진
 - 신규 개발의 경우에는 기성시가지 등 기개발지와 인접한 지역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둠
- 성장을 수용할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개발수요를 줄임으로써 고효율,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실현하고 기반시설의 추가건설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가능
 - ※ 주로 미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오리건주의 도시성장 구역 설정, 플로리다 주의 개발사업에서의 공공인프라 확보 기준 적용 등의 사례가 있음

5.2.3 광역토지이용계획 수립 과정

① 광역적 토지이용 수요 추정

- 도시화예정용지로 분류하는 주거·상업·공업용도의 토지수요를 인구조표 및 향후 지역별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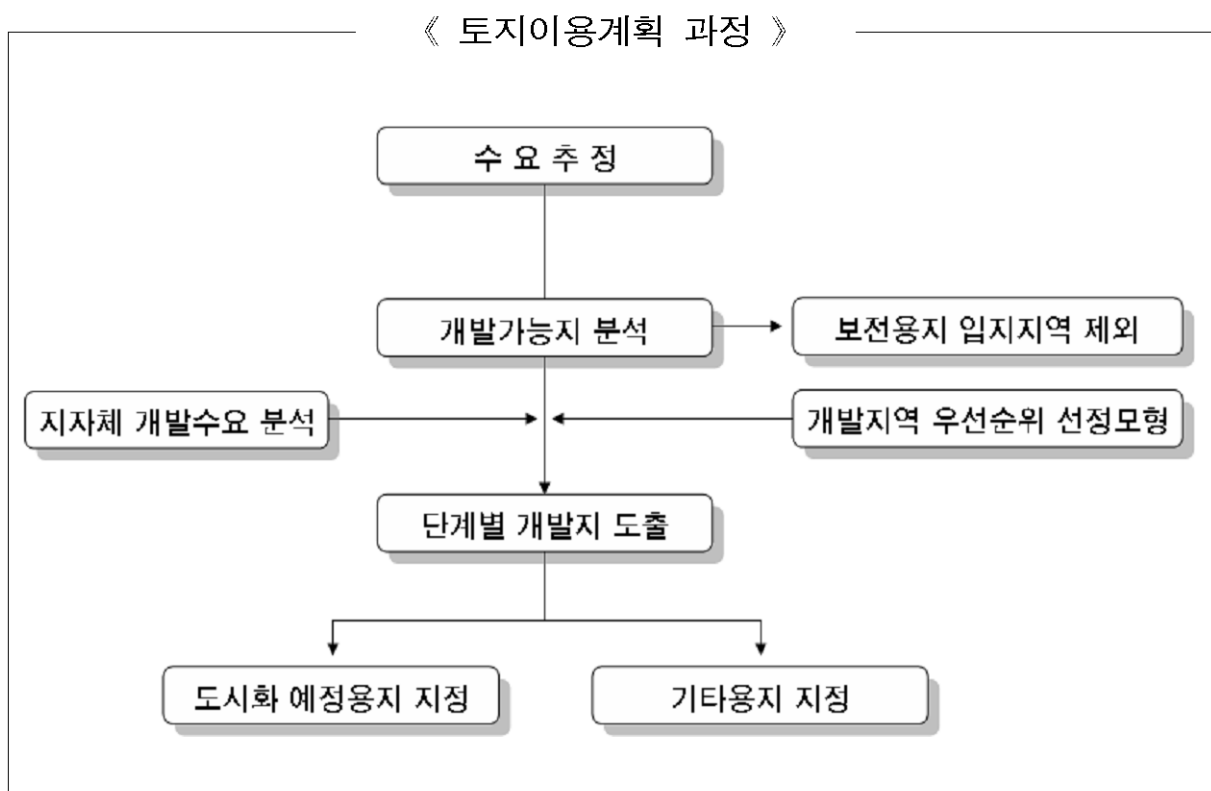
② 개발가능지 분석을 통하여 보전용지를 설정

- 광역계획권의 생태자연도, 녹지현황 분석 등을 통해 개발가능지와 보전용지를 구분하여 도출

③ 광역계획권 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상업·공업용도의 개발 수요를 취합하여 개발가능지와 정합성 분석을 통해 광역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토지개발 수요량 산출

④ 개발지역 우선순위 분석을 통하여 단계별 개발지역 및 토지개발 수요량 도출

⑤ 우선순위가 높은 개발수요는 도시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개발수요는 추가로 개발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타용지로 배분



5.3 토지이용 수요 추정

5.3.1 토지수요 추정 기본방향

- 토지수요는 도시화예정용지인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중심으로 추정
- 계획적 개발축, 녹지축 등 공간구조 관련 사항은 개발가능지 분석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간적 적합성을 검토
- 용도별 토지수요 중 주거·상업용지는 인구지표를 기초로 원단위법을 사용하고 공업용지 추정은 원단위법을 기초로 하되 지자체별 산업용지 조성계획을 감안
 - ※ 토지이용의 원단위 : 인간활동 한 단위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규모를 뜻하는 것으로 1인당 필요한 주거·상업·공업용지의 수요를 뜻함

5.3.2 주거용지 수요추정

- 주거용지 수요추정은 평균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을 사용
 - 상한·하한의 인구 시나리오와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 상의 생활권별 주거지역 밀도계획을 감안하여 150~250인/ha의 평균밀도 적용
 - ※ 상대적으로 고밀인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은 250인/ha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밀인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천안시(5개면) 등은 150~200인/ha 수준의 평균 밀도를 적용
- 추정 결과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25.63km²(하한인구 기준)~59.55km²(상한인구 기준)의 주거용지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기정 113.68km²)

5.3.3 상업용지 수요추정

- 상업용지의 토지수요는 이용인구에 의한 추정방법을 사용
 - 1일 평균 상업지역 이용인구, 평균층수, 건폐율 등 상업용지 추정을 위한 계수(Parameter)는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 상 상업용지 산정방식을 감안하여 평균치를 사용
- 추정 결과 목표연도인 2030년 1.08km²(하한인구 기준)~3.06km²(상한인구 기준)의 상업용지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기정 13.71km²)

5.3.4 공업용지 수요추정

- 1991~2003년까지 인구 1인당 생산시설 부지면적 원단위와 공업용지에서의 부지비율 변화를 감안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공업용지 추가 수요 산정
- 추정 결과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16.60km²(하한인구 기준)~36.82km²(상한인구 기준)의 공업용지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현황 63.90km²)

※ 광역계획권 내 공업용지 지정면적은 32.63km²이나 가동 중인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포함한 63.90km²를 현황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추가 수요를 추정

5.3.5 도시화 예정용지 수요추정

- 상·하한의 인구시나리오를 기초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상·하한 수요를 추정한 결과
 -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234.61km²(최소계획인구 기준)~290.74km²(최대계획인구 기준)가 도시용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

《 도시화용지의 수요 총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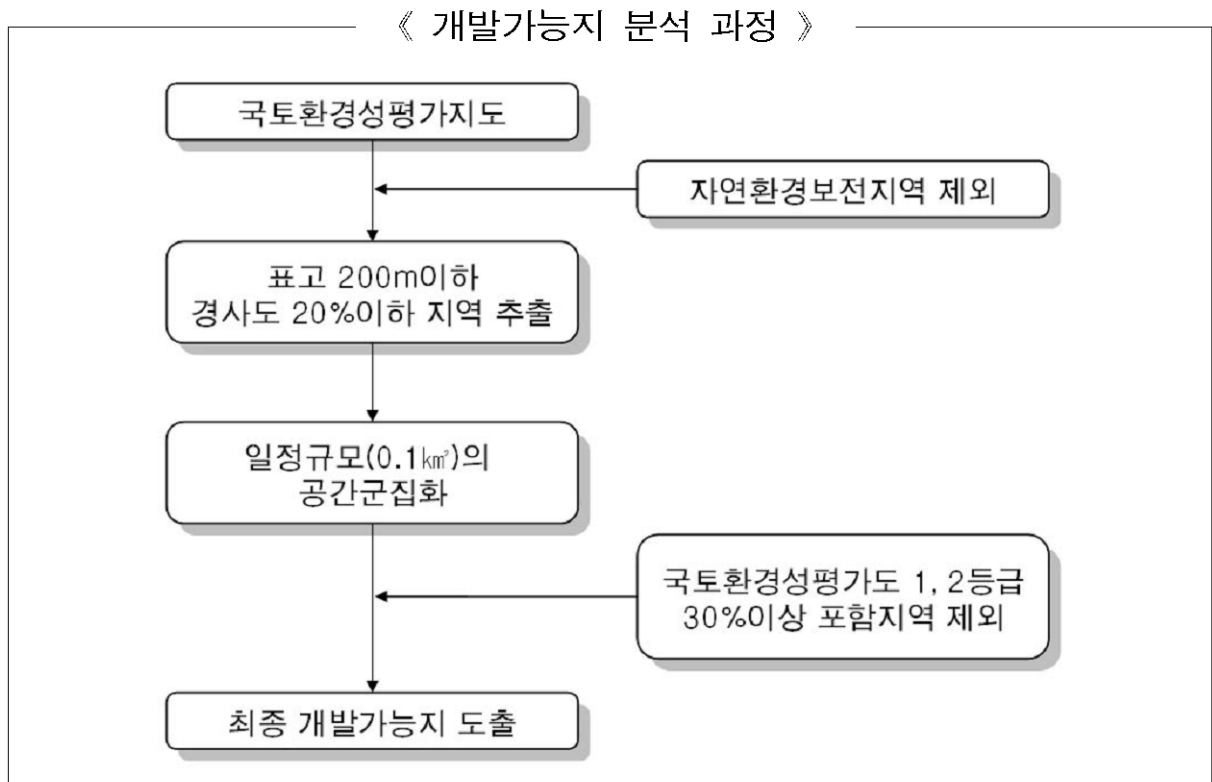
(단위 : km²)

구 분	기 지정 현황	총수요	
		최소계획인구 기 준	최대계획인구 기 준
계 (행정도시 예정지역 제외)	191.30	234.61	290.74
대전광역시	108.63	118.05	147.67
충청북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64.73	84.58	103.28
충청남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17.94	31.98	39.79

5.4 개발가능지 분석

5.4.1 분석방법

-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 내 토지의 환경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잠재적 개발가능지를 도출
 -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사용하여 분석하되 환경성평가 등급 “보전”, “완충”, “개발”의 3가지 구분의 중간 단계에 2개 구분을 추가하여 5개 등급으로 세분
-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 개발,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환경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도 될 지역”을 구분하여 환경부에서 작성한 지도



- 해당 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도 1, 2등급지를 중심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억제지역)으로 개발가능지에서 제외
-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표고 200m 이하 및 경사도 20%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추출

-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공간적 군집화 과정을 이행하되 국토환경성평가도 4, 5등급지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는 조건으로 잠재적 개발가능지를 도출
- 공간적으로 집단화된 잠재적 개발가능지 중 환경적으로 양호한 1, 2등급지가 일정 부분 포함된 토지는 다시 제척하여 개발가능지를 최종적으로 도출

5.4.2 분석결과

□ 국토환경성 평가에 기초한 개발가능 토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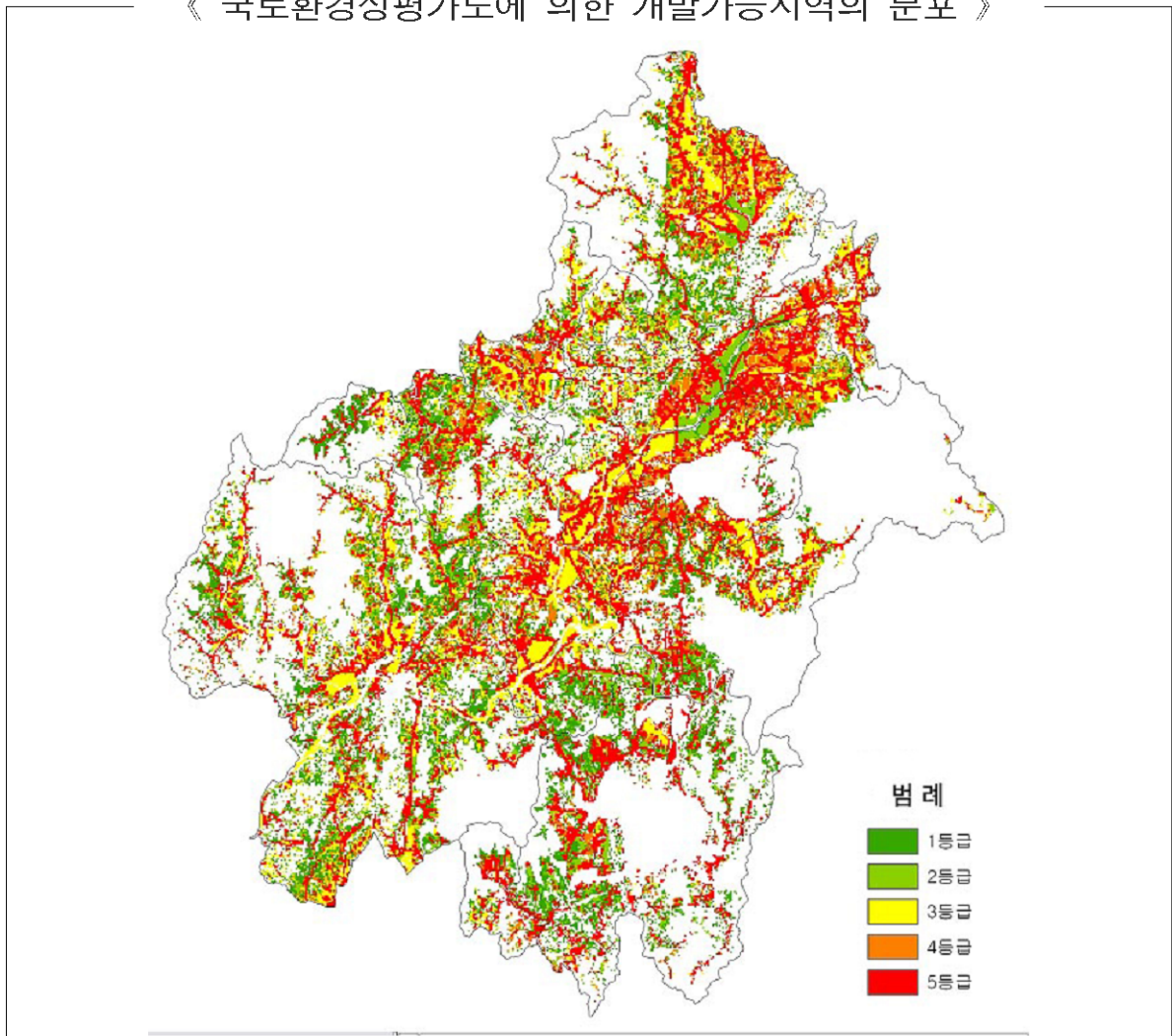
-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표고 200m 이하 및 경사도 20%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의 총 면적은 1,647.8km²임
 - 이 중 1등급지 380.6km², 2등급지 204.8km², 3등급지 324.8km², 4등급지 141.4km², 5등급지 596.2km²이며 개발에 적합한 토지면적은(4, 5등급) 737.6km²임

《 광역계획권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분포 》

(단위 : km²)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380.57	204.80	324.82	141.40	596.21
대전광역시	65.67	33.48	5.67	7.66	71.36
청주시	10.19	5.76	17.04	9.87	36.16
청원군	61.55	32.10	73.70	43.55	141.14
진천군	38.43	22.01	51.56	20.01	69.09
증평군	2.28	2.23	9.10	6.34	20.09
공주시	115.08	60.67	83.77	25.74	128.12
연기군	52.11	31.84	50.85	18.23	80.69
계룡시	5.10	1.91	2.91	1.92	10.32
천안시(5개면)	30.17	14.80	30.22	8.08	39.25

《 국토환경성평가도에 의한 개발가능지역의 분포 》



□ 개발가능지 도출을 위한 공간적 군집화

- 국토환경성지도의 공간단위는 30m x 30m의 정방형 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제개발이 가능한 일정 규모의 토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소면적 0.1km²를 기준으로 공간적 군집화 분석 수행
 - 각 공간단위(0.1km²) 내 개발가능한 4, 5등급지를 50% 이상 포함하는 경우 잠재적 개발가능지로 간주(444개소, 1,385km² 잠재적 개발가능지 도출)
- ※ 최소면적 0.1km² 기준은 국제법령의 관리지역 내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근거

□ 공간적 군집화(Neighborhood Statistics) 분석

- 단위토지(30m × 30m 정방형)를 공간적으로 군집화하지 않고 개발가능지로 적용할 경우 토지규모가 협소하여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웃하는 단위토지들을 군집화 하는 근린공간분석기법을 사용
 - 단위토지를 0또는 1의 값으로 치환하고 일정거리 내에 이웃하는 단위토지들의 치환된 값의 총합을 계산하여 일정 값(50)이상을 갖는 최소공간단위(0.1km²) 도출
- ※ 국토환경성 평가도의 4, 5등급을 1로 치환하고 나머지 보전성이 높은 1, 2, 3등급을 0으로 치환

1	1	1	1	1	1	1	1	1	0	=	53	55	57	55	53	51	45	39	32
1	1	1	1	1	1	1	1	0	1		60	63	66	63	60	57	50	43	35
1	1	1	1	1	1	1	1	1	1		67	71	75	72	68	64	56	48	39
1	1	1	1	1	1	1	1	0	1		71	76	80	77	72	68	59	50	41
1	1	1	1	1	1	1	1	1	1		69	73	77	74	70	66	58	49	40
1	1	1	1	1	1	1	1	0	0		67	70	74	71	68	64	57	48	39
1	1	1	1	1	1	1	1	1	0		67	70	74	72	69	65	58	49	40
1	1	1	1	1	1	1	1	0	0		58	61	65	63	60	56	50	42	34
1	0	1	1	0	1	1	0	1			50	53	56	55	52	49	44	37	30

- 도출된 중심지를 기준으로 분석에 사용한 일정 공간단위지역으로 버퍼링(Buffering)하여 군집화

《 군집화된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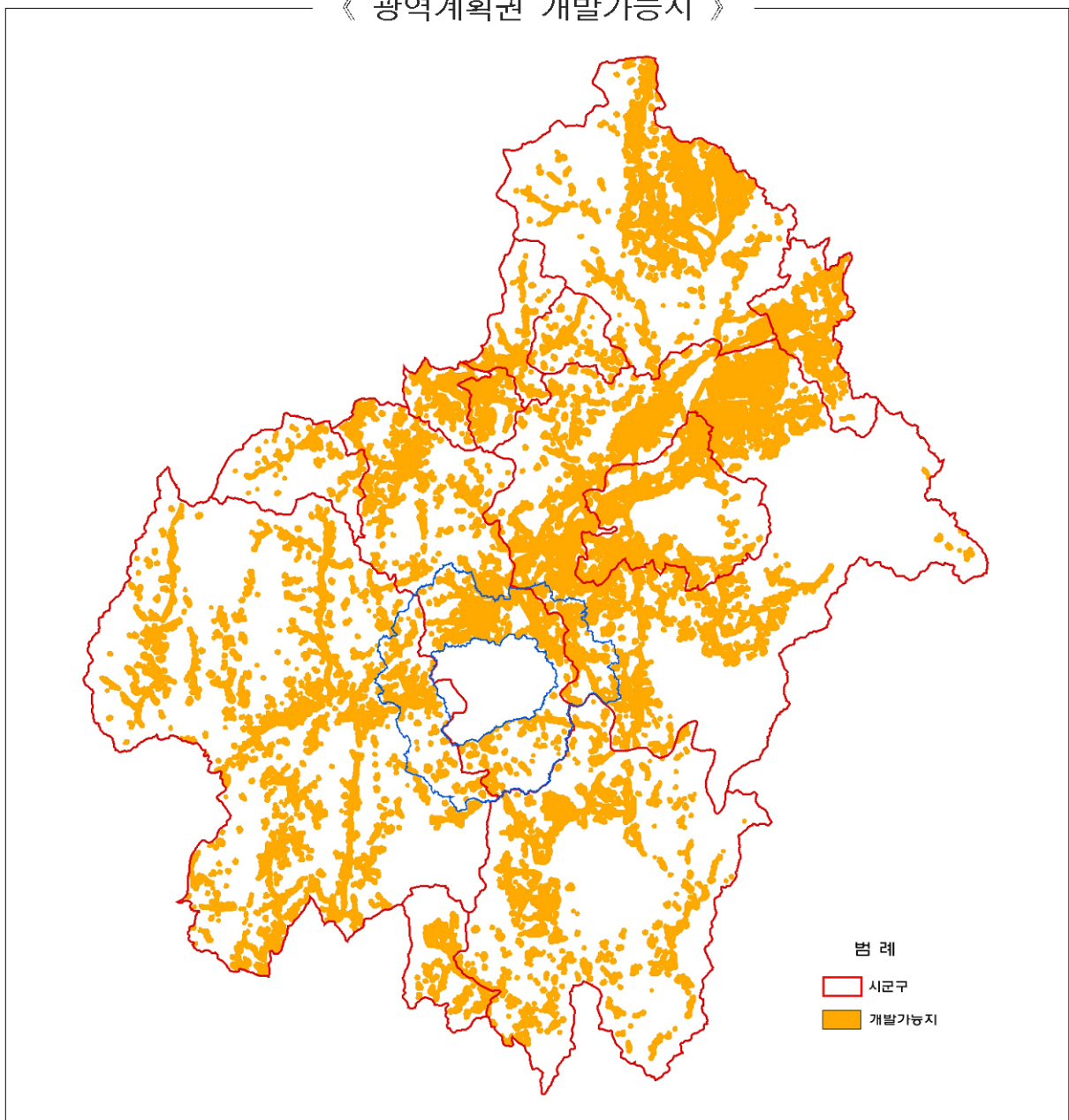
(단위: 개, km²)

구 분	0.1km ² 규모 / 4, 5등급지 50%이상
개 수	444
총 면 적	1,385.02
평균 면적	3.12
최대 면적	478.09
최소 면적	0.12

□ 친환경적 개발가능지 도출

- 잠재적 개발가능지 중 환경적으로 양호한 1, 2등급지가 30% 포함된 토지는 개발가능지에서 제외
 - 기초공간단위 0.1km²내에 환경성평가 1, 2등급지가 30%이상 포함되어 있는 지역 50.41km²를 잠재적 개발가능지에서 제척
- 광역계획권의 개발가능지는 총 1,334.6km²로 추정

《 광역계획권 개발가능지 》



5.5 지방자치단체 개발수요 분석

5.5.1 지방자치단체 개발예정지의 적합성 검토

-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시가화예정지역과 지방산업단지 등의 지역 개발계획 및 사업을 본 광역도시계획 상의 개발가능지와 중첩하여 공간적 적합성을 검토
 - 각 시·도 및 시·군별로 제시한 지역개발계획 및 사업과 개발가능지를 중첩시켜 개발가능지가 50% 미만으로 포함되는 개발계획·사업은 개발가능지를 활용하도록 위치 변경

5.5.2 토지수요 추정결과와의 적합성 검토

- 본 광역도시계획에서 추정한 주거·상업·공업용지 수요와 지방자치단체 개발 계획·사업 예정 부지의 총량을 비교, 검토 결과
 - 광역계획권 전체로는 0.93km²가 부족하며, 시·도별로는 대전광역시 18.03km² 여유, 충청북도 11.57km² 부족, 충청남도는 7.39km² 부족으로 나타남

《 토지이용 수요와 시·군 개발수요 총량 비교 》

(단위: km²)

구 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총량		
	수 요		수 요		수 요		수 요		계 획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계 (행정도시 예정지역 제외)	25.63	59.55	1.08	3.07	16.60	36.82	43.31	99.44	100.37
대전광역시	3.07	21.03	-	0.88	6.35	17.13	9.42	39.04	21.01
충청북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12.21	23.14	0.57	1.35	7.07	14.06	19.85	38.55	50.12
충청남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10.35	15.38	0.51	0.84	3.18	5.63	14.04	21.85	29.24

5.5.3 지자체 개발수요의 우선순위 시뮬레이션

- 시·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의 규모(면적)와 지역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등급화
 - ※ 기존 중심지의 기능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면서 외곽의 난개발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성장의 지역개발 원리 적용
- 개발규모 및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에 의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최소·최대수요를 고려하여 개발 우선순위 설정

□ 복수의 중심지를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 모형

- ① 단위지역(시·군을 하나의 공간단위로 간주)에서의 복수의 중심지를 상정
- ② 각 개발사업의 규모(수용인구, 면적)와 중심지의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중력지표” 산출 (Gravity 모델 적용)

$$\Rightarrow G_i = M_i \times (C_1 / d_1^2 + \dots + C_n / d_n^2)$$

G_i : 개별사업의 중력지표

M_i : 개별사업의 규모(인구 및 면적)

C_n : 제 n 중심지 규모(인구 및 면적)

d_n : 개별사업의 제 n 중심지까지의 거리

- ③ 중력지표 값의 순위에 따라 개발 우선순위 결정에 참조

《 지자체 개발수요의 우선순위 시뮬레이션 결과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개수(개)	면적(km²)	개수(개)	면적(km²)	개수(개)	면적(km²)	개수(개)	면적(km²)
계 (행정도시 예정지역 제외)	22	51.55	38	23.73	33	25.09	93	100.37
대전광역시	4	9.33	25	11.68	-	-	29	21.01
충청북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8	27.42	2	6.00	11	16.70	21	50.12
충청남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10	14.80	11	6.05	22	8.39	43	29.24

5.6 용지배분

5.6.1 용지 구분기준 및 지정

- 광역토지이용계획은 보전용지,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기타용지로 구분하되 용지 구분의 기준 및 원칙은 다음과 같음
 - 보전용지는 친환경적 도시성장 관리 도모 및 난개발과 시가지간 연담화 방지 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정
 - 도시용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상업·공업용지를 합하여 지정
 - 도시화예정용지는 향후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서 최대계획인구 기준의 토지 수요와 지자체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지정
 - 기타용지는 지역여건에 따라 향후 개발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배분

《 용지 구분의 기준 및 원칙 》

토지이용범주	용지구분 기준 및 원칙
보전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할 지역, 도시공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 함양에 필요한 지역, 호소·하천구역 및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 중 보전할 지역 등 보전용도로 이용될 지역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 1, 2등급에 해당하는 토지를 일정 기준 이상 포함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
도시용지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도시화예정용지	○장래 도시용지로 이용할 지역으로 광역공간구조 상의 개발촉 및 교통촉과 적합성이 높되 시가지간 연담화 우려가 낮은 지역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중 장래 도시용지로 이용할 지역 - 개발제한구역 중 조정가능지역 - 도시계획 수립 예정인 주거·상업·공업지역, -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예정지역 - 지자체의 승인개발계획 및 타당성이 높은 미승인 개발계획 중 보전용지와 상충되지 않는 지역
기타용지	○도시기본계획 상의 시가화예정지역등 중에서 보전용지와 중첩되는 등 정밀검토가 필요한 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으로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 :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003.

5.6.2 용도별 · 지역별 면적배분

- 광역계획권내 지자체의 토지이용 수요와 향후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용도별 면적 배분
- 광역계획권의 최대토지수요 이내의 지자체 개발수요는 도시화예정용지로 지정
 -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실제 수요에 따라 주거 · 상업 · 공업용지 등으로 활용하도록 74.75km² 지정
- 최대수요를 초과하는 지자체 개발수요는 기타용지로 지정
 - 향후 지역현안사업의 유치 또는 개발사업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 · 군에서 순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51.92km² 지정
- ※ 도시용지는 2005년 말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기지정된 191.30km²를 지정
- 향후 시 · 군별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개발용지를 둘러싼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시 · 도별로 배분

《 시 · 도별 개발용지 배분 》

(단위: km²)

구 분	도시용지 (기 지정현황)	도시화예정용지	기타용지
계 (행정도시 예정지역 제외)	191.30	74.75	51.92
대전광역시	108.63	21.01	18.03
충청북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64.73	31.84	24.99
충청남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17.94	21.90	8.90

5.7 광역토지이용 관리방안

5.7.1 도시화예정용지의 통합관리 및 단계적 개발체계 확립

- 도시화예정용지는 장래 주로 도시용지로 이용할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용지로 설정되어 있으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 및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설정
- 시·도 및 시·군별로 현재 수립중이거나 수립예정인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시가화예정용지는 본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화예정용지(신규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로 포함
- 시·도 및 시·군별로 고용기능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족도시권 형성을 도모하는 개발계획 추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공간구조상 개발축에 위치하면서 철도 등의 대중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부차적으로 고속국도 결절점상의 도시화예정용지를 개발하도록 함
- 도시화예정용지에서의 대단위 개발은 본 계획이 제시하는 광역녹지축과 조화·연계되도록 충분한 녹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5.7.2 기타용지의 지정을 통한 토지관리의 유연성 제고

- 도시화예정용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서 최대수요를 초과하는 토지는 기타용지로 설정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우선으로 관리
 - 개발수요가 발생하고 토지특성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한 토지의 경우 도시화예정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개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시화예정용지 총량을 유지하는 경우 기타용지를 도시화예정용지로 전환 허용
- 해당 시·군별 도시화예정용지에 여유가 있음에도 기타용지를 우선적으로 도시용지로 전환할 경우 해당 양만큼 도시화예정용지에서 도시용지로의 전환 규모를 축소하도록 함

※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와 광역지자체의 성장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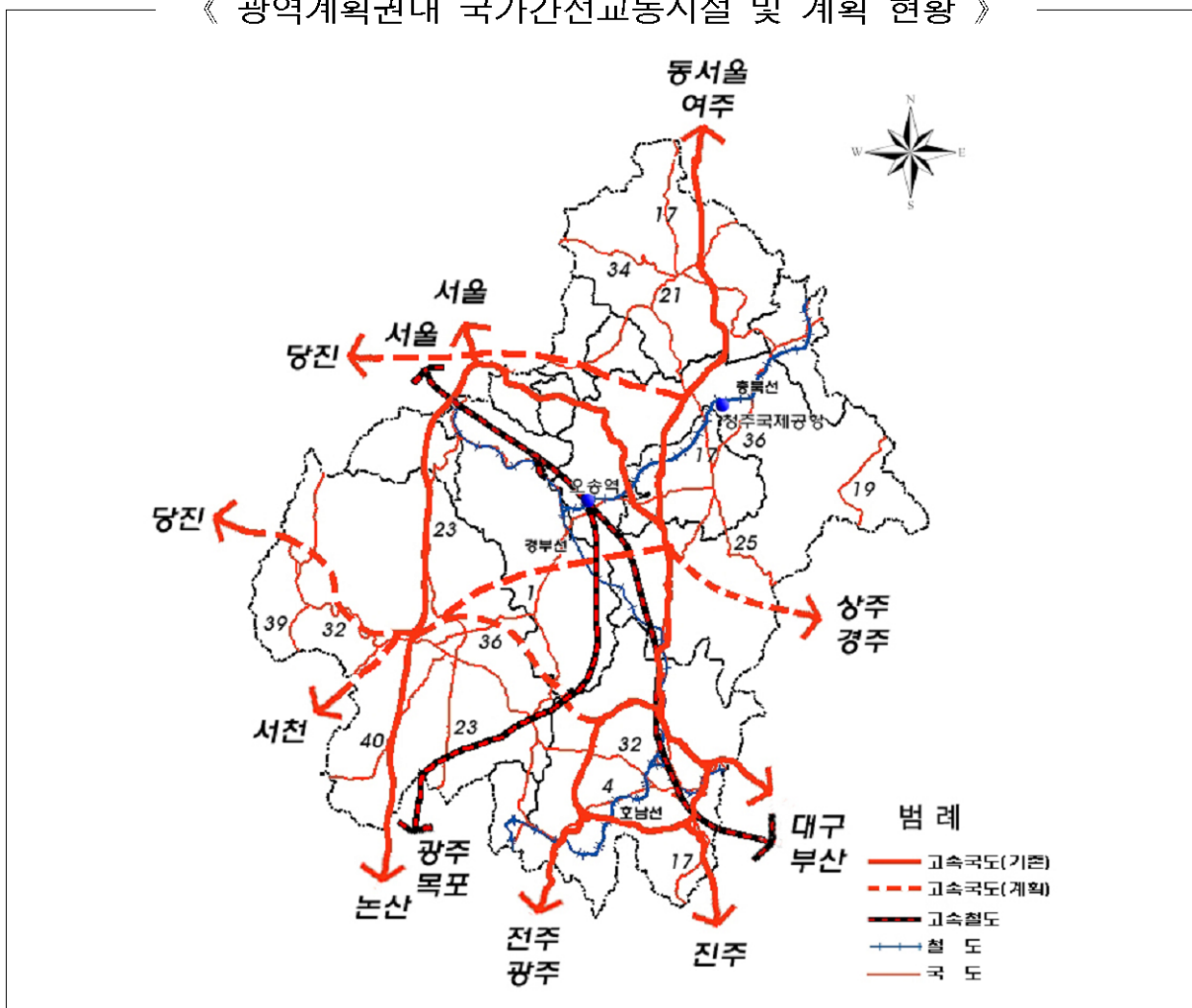
6. 광역교통계획

6.1 현황, 문제점 및 여건 전망

6.1.1 전국 고속교통 네트워크가 광역계획권 통과

-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국도, 고속철도 등 고속교통 네트워크와 간선도로망이 비교적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행정도시 건설을 전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연계성 강화 필요
- 경부·중부·논산~천안 고속국도,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계획)·경부선·충북선 철도, 청주국제공항이 입지
- 전국의 주요도시로부터 2시간 내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확충방안 장구 필요

《 광역계획권내 국가간선교통시설 및 계획 현황 》



6.1.2 광역계획권내 행정도시와 거점도시간 교통네트워크 보완 필요

- 광역계획권 내부 도시기능의 연계를 위한 간선교통 네트워크가 미비
 - 권역 내 대부분의 간선도로는 전체적으로 용량에 여유를 나타내고 있으나 청주시, 행정도시, 공주시 등을 연계하는 동서간 간선망 미흡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 필요
 - 기존 대전권 광역교통계획 등이 행정도시 건설을 고려치 않고 수립되어 정연한 토지이용과 개발축 형성을 지원할 간선교통체계 미흡

6.1.3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

- 고속철도 개통,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동북아 경제권의 신교류거점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아짐
- 행정도시의 건설과 오창·오송 산업단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확충 등으로 인구증가 및 국내·외 교류 확대 예상
- 광역계획권 내 도시기능 강화에 따른 권역 내외부의 통행량 증가 예상

6.2 핵심과제

6.2.1 행정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교통네트워크 구축

- 국가기간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추가 확충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 교통시설간 연계성 강화(inter-modal)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확충하여 건설비용 최소화 및 친환경적 정주여건을 확보

6.2.2 행정도시와 거점도시간의 도시 네트워크 형성 지원

-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 고속철도역·청주국제공항 등을 최단시간으로 연결하여 광역계획권내 균등한 접근성(accessibility) 제고

- 대중교통체계의 단계별 건설과 승용차 이용 저감 등 통행속도 향상을 통한 광역교통의 효율성 향상
- 자연환경과 시가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기반 확충 등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추진
 -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건설교통부·환경부, 2004),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건설교통부, 2005), 대중교통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중교통기본계획(건설교통부, 200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건설교통부, 2006) 등 관련 규정 적용

6.2.3 기존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교통망의 구축

- 국가 시행 간선도로 확충계획과 지자체 계획(예 : 대전 갑천도시고속도로 등)의 연계 시행을 도모하여 교통축 투자효율성 강화
 -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 국가 시행 간선도로 확충계획의 사업추진시기, 노선 연결, 도로 기능 및 시설기준 등과 연계성 강화
-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건설노선에 대중교통 수용공간을 확보하여 기반시설비용 최소화 도모
-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정비를 강화하고 첨단 도로교통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진

6.3 광역교통망 구상의 기본방향

6.3.1 개발축과 연계한 교통축 형성으로 네트워크 효율성 강화

- 개발축을 따라 간선교통축을 배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 거점 도시간 연결축에는 신교통수단 등 대중교통시스템 병행 구축
 - 간선교통축은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로 형성하여 고속교통체계 구축

6.3.2 국가 교통망 계획과 광역교통체계의 연계성 강화

-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고속순환교통체계 형성
 - 전국 및 광역교통 차원에서 행정도시를 관통하지 않고 행정도시 외곽에서 지역간 통행량을 대부분 처리

- 공주~청원 고속국도와 경부고속국도(청원~회덕), 호남고속국도(회덕~북대전), 당진~대전(북대전~동공주) 고속국도를 활용한 외곽 순환고속국도를 완비하여 전국 대도시권간 통행량을 행정도시 외곽에서 분산 처리 도모
- 행정도시 관문을 연결하는 간선교통체계 구축
 - 행정도시~오송역~청주국제공항~(진천·음성 혁신도시) 및 행정도시~공주~남공주역을 연결하는 간선교통체계 구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전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각 시·도 교통계획의 종합화를 통하여 전국 및 광역교통 네트워크 연계성 강화
 - 대전권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정합성·일관성을 확보하고 광역교통시설의 중복성 배제, 신규 확충노선의 자동차전용도로 설치 등 간선기능 강화
- 계획목표년도(2030년)의 장기성을 감안, 기존시설 확장·개량의 한계를 갖는 구간은 장기적으로 신규 계획노선을 고려

6.3.3 행정도시와 거점도시, 거점도시 상호간 연계 강화

- 행정도시~대전광역시, 행정도시~청주시, 대전광역시~청주시간 직결 간선교통망을 구축하여 광역계획권의 중심축 형성
 - 광역계획권 중심축(행정도시~청주시~대전광역시)의 직결 간선교통망에는 대중교통체계를 수용하여 광역계획권의 효율적인 수송분담체계를 확립
- 행정도시 외곽에서 광역계획권 거점도시들을 순환간선도로망으로 직접 연결하여 도시간 상호연계성 강화 및 동반 성장 유도

6.3.4 인간과 환경을 우선하는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체계 구축

-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연계한 첨단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자연환경과 시가지 환경영향을 최소화
- 대전광역시·청주시·행정도시 중심축에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간선철도(경부선, 충북선)와 연계성 강화
 - 행정도시와 일괄수송체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교통수단(첨단 BRT 등)을 고려하고 종합환승센터를 건설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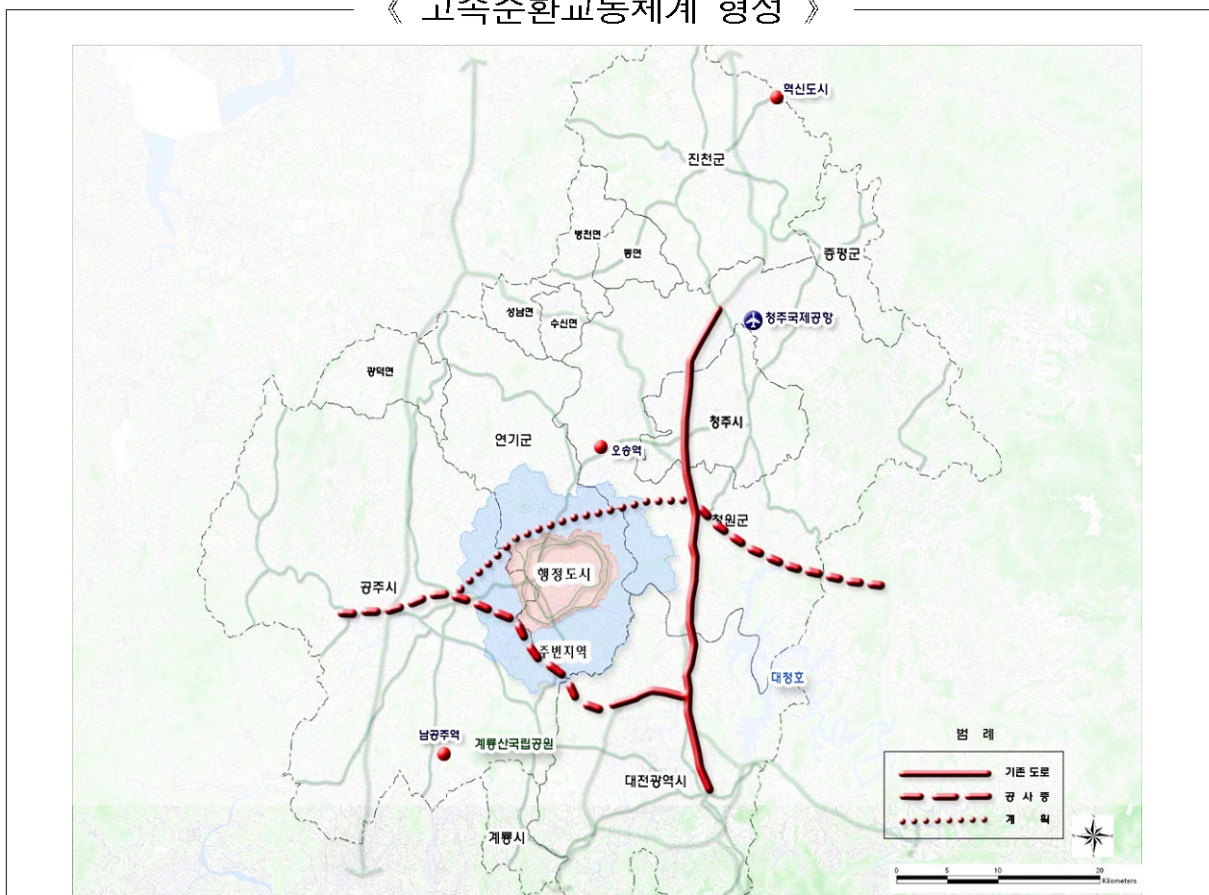
- ※ 현재 국가사업으로 중점 개발중인 신교통수단으로는 Bi-modal 굴절차량(첨단 BRT), 도시형 자기부상열차(Linear Motor Car), 경량전철(Automated Guideway Transit) 등이 있음
- 행정도시의 신교통수단(첨단 BRT 등)과 광역도시권의 대중교통체계를 가급적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
 -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기반으로 녹색교통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시, 진천군, 증평군, 당진군, 계룡시 등 권역내외 도시와의 네트워크 강화

6.4 광역교통망 구상

6.4.1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속순환교통체계 형성

- 공주~청원 고속국도를 신설하여 당진~대전, 청원~상주 고속국도 연결을 강화하는 등 행정도시 고속순환교통체계를 완비
- 서천~공주 고속국도, 수도권 간선도로망 연결 등 대도시권간 통과통행을 도시권 외곽에서 배제하여 기존 정부, 중부, 논산~천안, 호남 고속국도의 통행량을 분산 처리

《 고속순환교통체계 형성 》



6.4.2 행정도시 관문을 연결하는 간선교통체계 구축

- 행정도시의 국제 및 국가적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청주국제공항, 고속철도 오송역·남공주역으로부터 행정도시로의 신속한 이동성 확보를 위해 신대중교통수단과 자동차도로가 결합된 직결 간선도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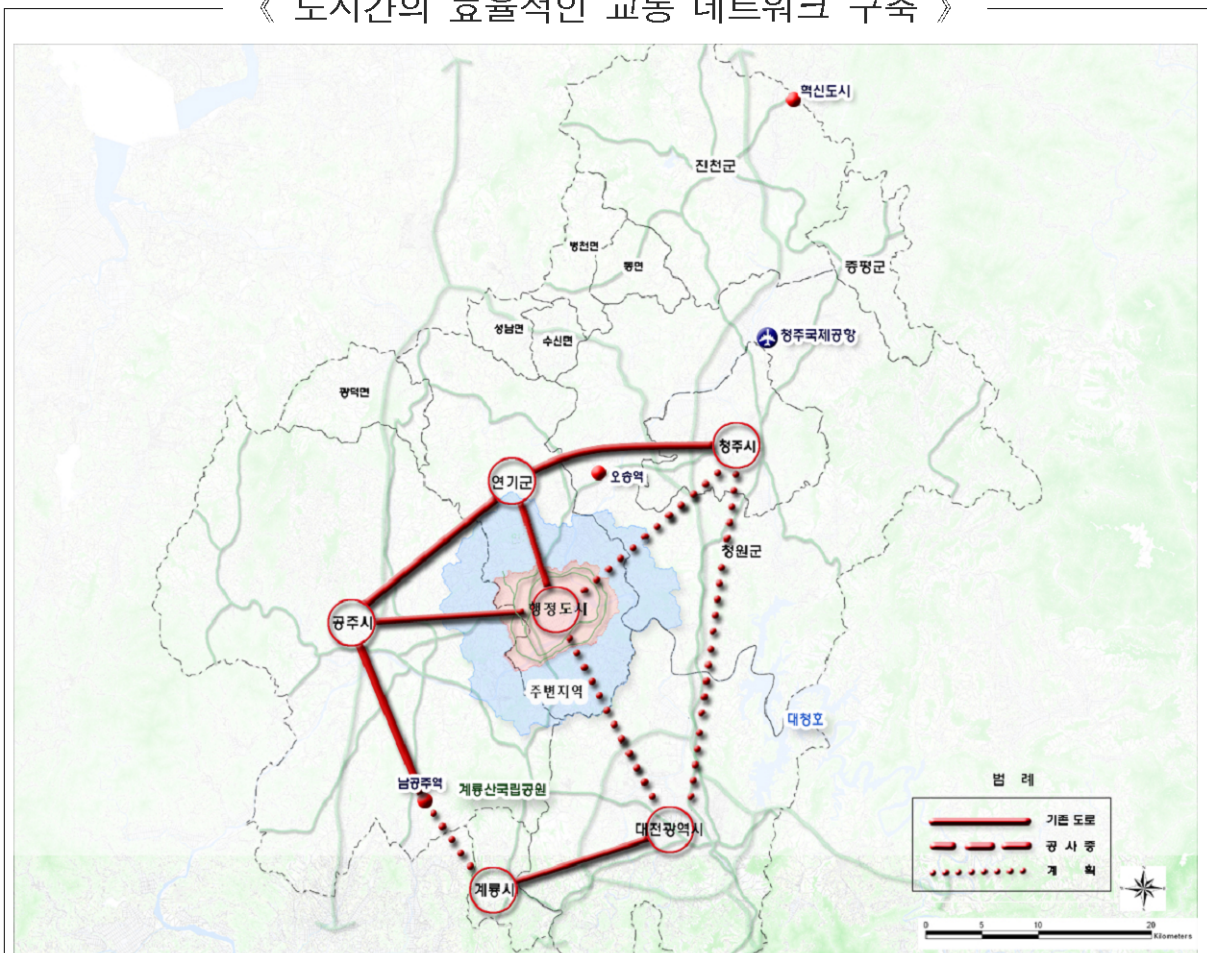
《 행정도시 관문 연결교통체계 구축 》



6.4.3 행정도시와 거점도시간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 구축

- 행정도시, 대전광역시, 청주시를 상호 연결하는 직결 간선교통망을 구축하여 광역계획권 중심축의 연계·교류 강화
- 광역계획권 거점도시간 연계발전의 기반을 이루고 신속한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순환간선도로망을 구축
 - 공주시~연기군(조치원)~청원군~청주시~대전광역시~논산시~계룡시~공주시를 연결하는 순환간선도로망(기존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을 구축하여 외곽순환 고속국도 보완
 - 기존시설과 기존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비용의 효율성 확보

《 도시간의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 구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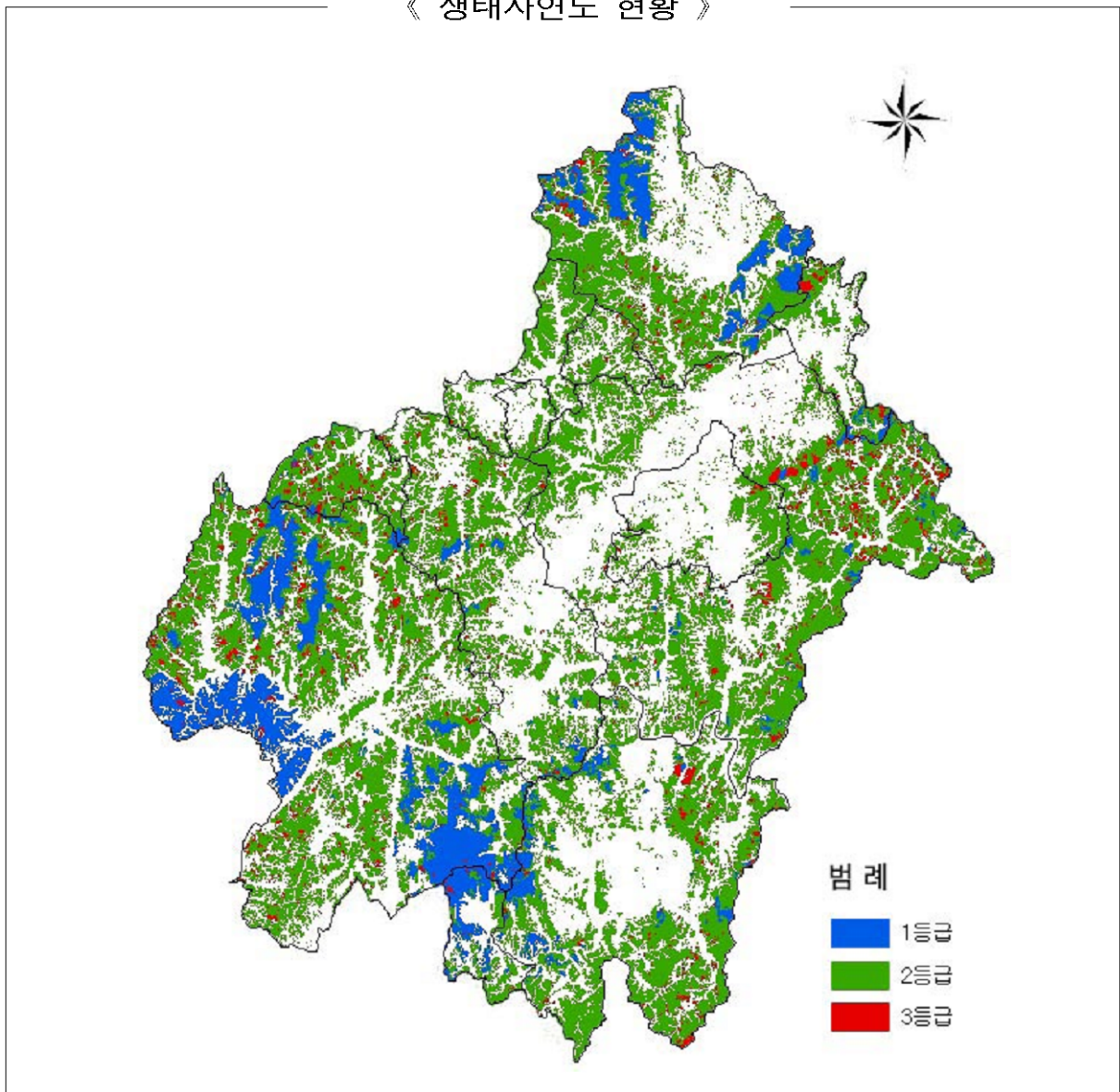
7. 녹지관리계획

7.1 현황 및 문제점

7.1.1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자연도 현황

- 광역계획권은 충청북도의 속리산·월악산·소백산에서 대전광역시의 계족산·식장산, 충청남도의 계룡산·칠갑산·가야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통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태네트워크를 형성
- 생태자연도는 1등급 8.3%, 2등급 46.4%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 생태자연도 현황 》



7.1.2 녹지등급 현황

- 토지피복도(인공위성자료, 환경부)를 통한 녹지면 중요도 분석결과 10등급이 50%를 차지하며 7~9등급이 27%를 점유하는 등 많은 녹지면들이 서로 인접하여 양호한 연결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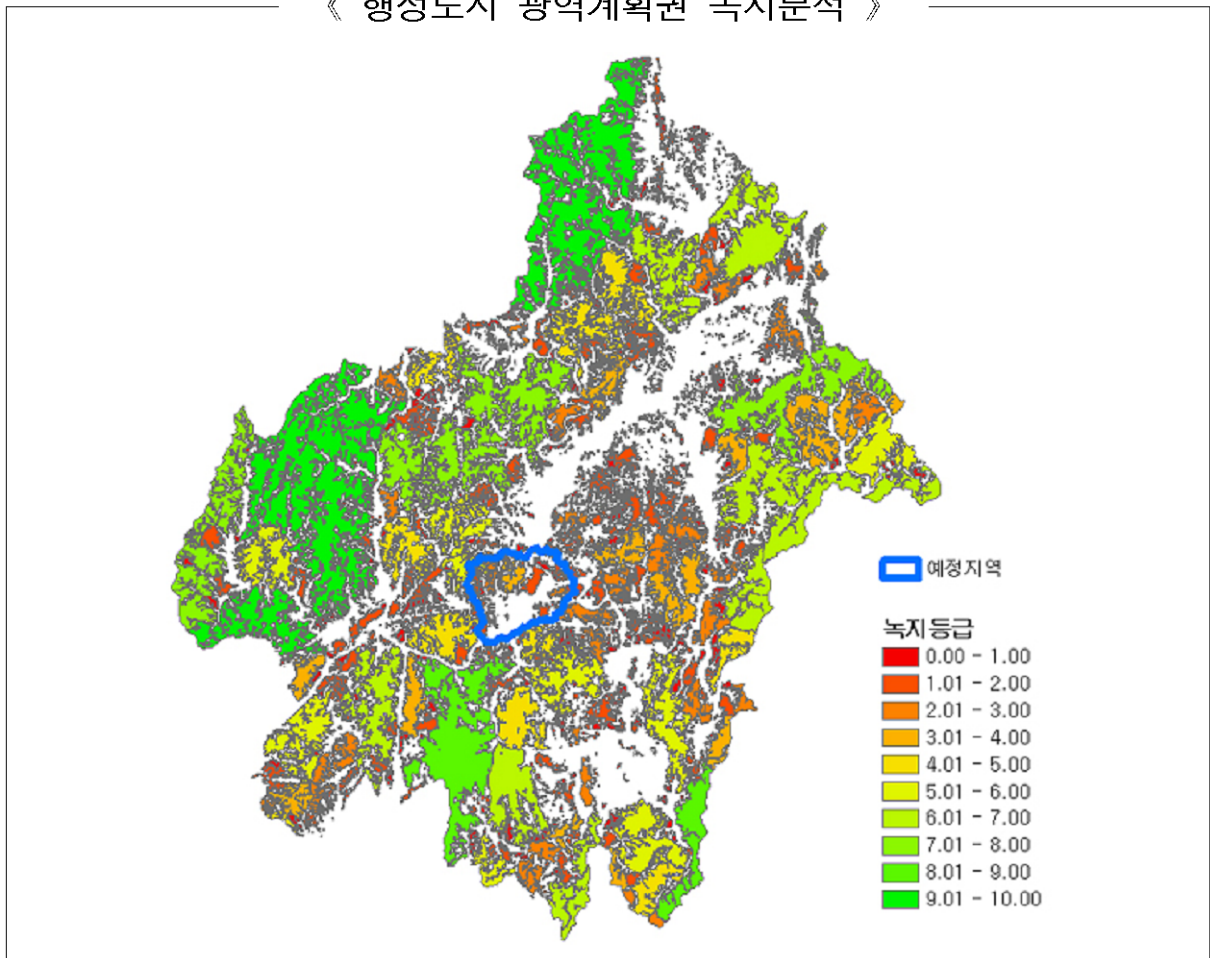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녹지면 등급별 수 및 면적 》

녹지등급	녹지면 수 (개)	면 적 (km ²)	비 율
계	2,691	5,137.64	100.0%
1등급	1,037	109.41	2.1%
2등급	1,541	258.82	5.0%
3등급	34	162.70	3.2%
4등급	17	166.20	3.2%
5등급	12	223.77	4.4%
6등급	9	251.91	4.9%
7등급	19	750.29	14.6%
8등급	6	434.05	8.5%
9등급	3	221.12	4.3%
10등급	13	2,559.33	49.8%

※ 녹지등급분석 : 토지피복도(중분류)를 사용하여 광역계획권내에 존재하는 녹지가 충청권 전역의 녹지면 중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1에서 10까지 10등급으로 분류

- 광역계획권내 높은 등급의 녹지면은 대부분 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 관리와 환경적 측면에서도 보존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수계 상류지역의 녹지는 생물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블루-그린 네트워크(Blue-Green Network)의 결절점 형성 등 그 생태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므로 보전적 성격이 강함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녹지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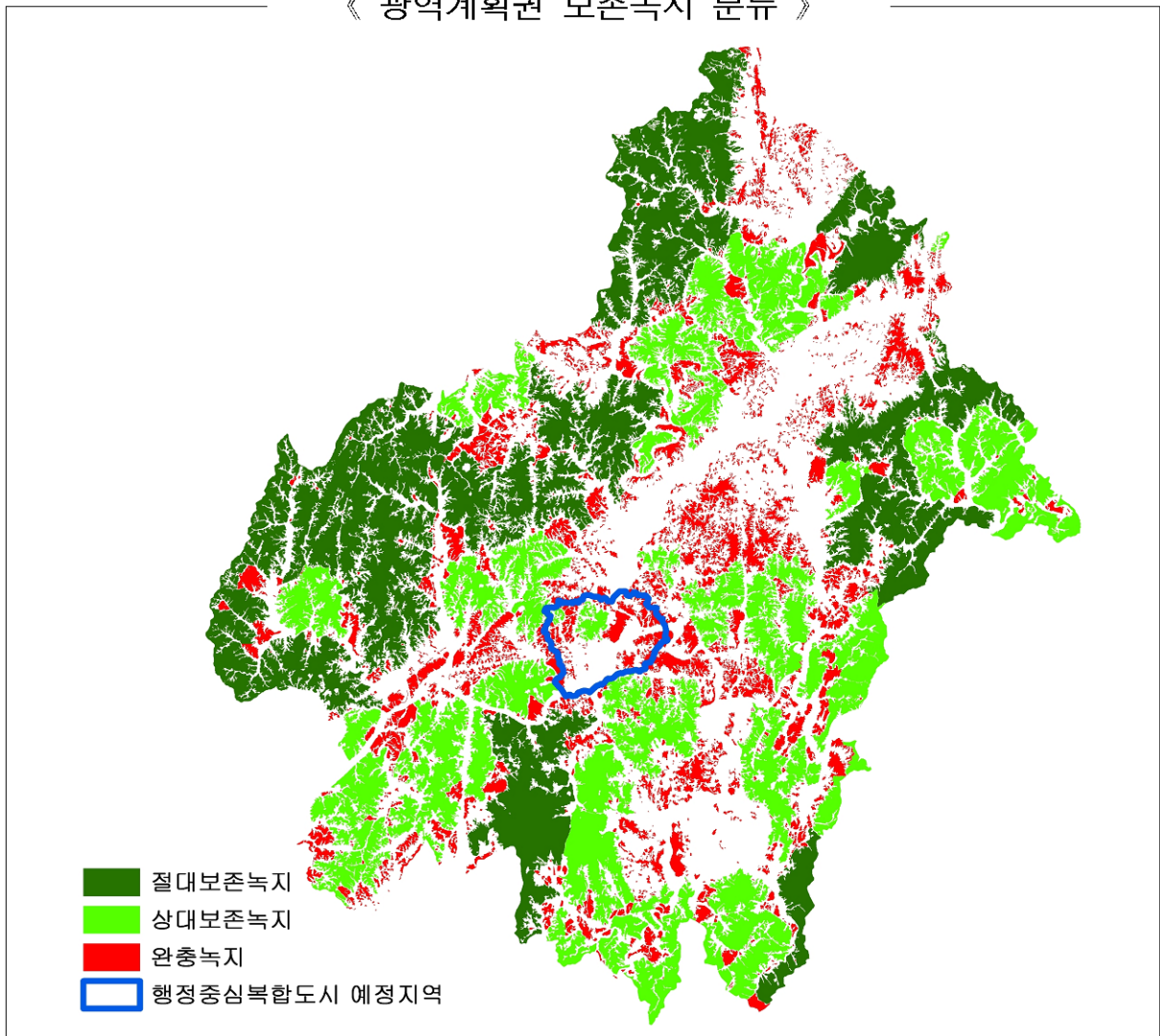
7.1.3 녹지패치분석과 보존녹지 분류

- 행정도시와 대전광역시 사이의 녹지 패치들은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기 때문에 녹지훼손 시 패치 규모가 작아져 생태적 가치가 급락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개발계획 수립 시 소규모 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녹지면 단절, 훼손 등을 최소화하도록 지침 마련 필요

※ 패치(patch) : 환경·녹지·생태 분석시 사용하는 일정 규모의 구역을 칭하는 단위

- 행정도시 주변은 이미 개발로 인한 녹지축의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광역녹지축이 추가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필요
 - 지방도, 일반국도, 고속국도 등으로 단절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해당지점의 구체적인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생태통로의 설치를 검토하고 우선연결지점을 설정하는 등 생태복원계획 수립 필요

《 광역계획권 보존녹지 분류 》



- 광역계획권 보존녹지 분류 결과 전체 녹지면적의 43.2%가 절대보존녹지, 37.8%가 상대보존녹지, 그리고 19.0%가 완충녹지로 분류됨
 - 광역계획권 녹지등급, 각 녹지패치의 넓이, 그리고 식생등급 3등급 이상 녹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
- 절대보존녹지는 녹지패치의 크기가 100ha 이상이고 녹지등급 6.9이상, 식생 3등급 이상 녹지 포함 지역임
 - 절대보존녹지는 전체면적 모두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심각한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주변개발을 허용 가능한 지역을 의미

- 완충녹지는 녹지패치가 작고 (10ha미만), 녹지등급이 낮으며 (녹지등급 2.5이하), 식생3등급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임
 - 완충녹지는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무조건 개발이 용이하고 가능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경우에 따라 지역 녹지축 연결성에 매우 중요한 녹지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수립 시 주변 녹지축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함
- 상대보존녹지는 절대보존녹지와 완충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녹지임
 - 상대보존녹지는 절대보존녹지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적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녹지축 연결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녹지패치임

7.2 핵심과제

- 전국적 광역생태축 및 행정도시의 생태네트워크를 연계한 광역녹지관리체계 구축
 - 금북정맥 등의 최상위 생태지형축은 절대 보존하고 광역생태축 및 도시생태축을 연계
- 녹지공간의 확보와 보존녹지의 관리
 - 수도권과의 연담화 및 주요 시가지간 연담화를 제어하기 위한 생태네트워크 연계 체계화 및 절대·상대보존녹지 지정 등 녹지관리체계 수립
- 산·하천을 연계한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축
 - 주요 산과 하천 등의 우수한 녹지자원을 연계하여 광역생태축, 거점녹지, 광역완충녹지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축
- 단절된 광역녹지축의 복원·관리
 - 주요 정맥·지맥의 단절을 복원하여 생태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7.3 전략 및 실천계획

7.3.1 전국 생태축 및 행정도시 생태네트워크를 연계한 녹지관리체계 구축

- 환경적·지형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금북정맥, 한남금북정맥 등은 최상위 생태지형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절대 보존

- 위의 정맥들로부터 생태축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생태축 및 도시 생태축을 설정하고 적극적 보전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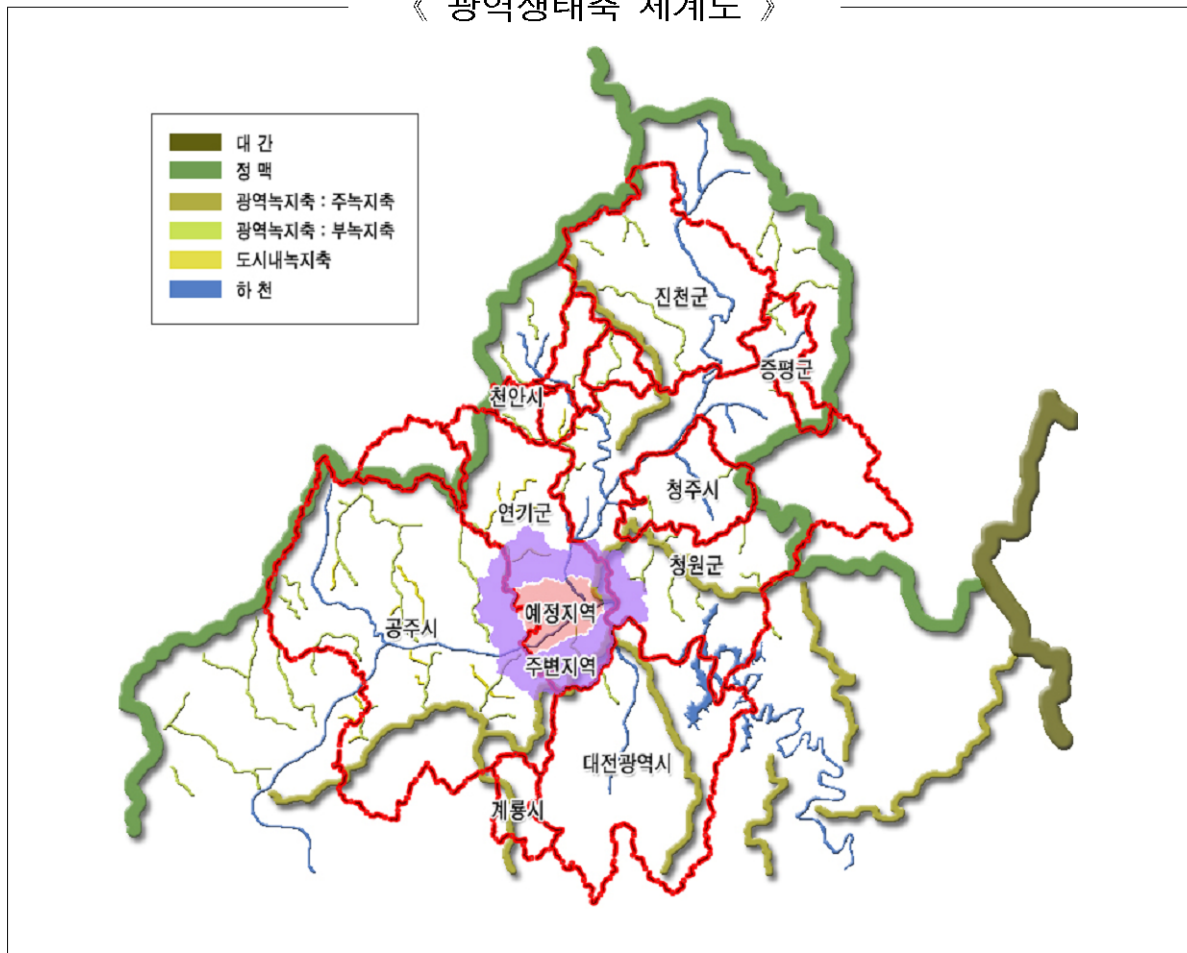
7.3.2 수도권과의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보존녹지의 관리

- 수도권과의 연담화, 주요시가지 간의 연담화를 지양하고 생태네트워크를 통한 생태계의 연계 체계화
- 광역계획권내의 개발수요 증대에 의한 심각한 녹지훼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보존녹지 관리
 - 절대보존녹지는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완충녹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토록 유도
 - 상대보존녹지는 추진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적정절차 등을 통하여 개발 또는 보존여부 결정

7.3.3 산·하천을 연계한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축

- 녹지생태축과 수변생태축이 연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적 이용을 도모하여 생태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상
- 광역생태축으로부터 파생된 도시생태축을 광역계획권내 시·군의 생태녹지축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태공간으로 활용
- 금강·대청호 주변의 수생태 보전, 하천보호를 위한 광역 수변생태축을 설정하고 이를 미호천 등 주요하천을 중심으로 한 도시수변생태축과 연계

《 광역생태축 체계도 》



※ 녹색 네트워크(Green Network)

- 정맥 : 절대보존이 요구되는 최상위 생태지형축
- 광역생태축 : 자연환경을 지속시키고 사회문화적 기능을 발휘하는 일단의 구역
- 주생태축 : 환경보전이 필요하여 자연환경중심의 관리가 요구되는 생태계의 연결축
- 부생태축 : 도시적 녹지관리가 요구되는 선형의 축
- 도시생태축 : 상위의 광역생태축과 연계하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태축

7.3.4 단절된 광역녹지축의 복원·관리

- 도로건설 등에 의해 발생한 정맥 및 생태축, 녹지축의 단절을 복원하여 생태·녹지축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생태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계획 수립
- 국도(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포함), 지방도 등에 의해 단절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지형적, 토지이용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연결성을 강화

8. 경관계획

8.1 현황 및 문제점

8.1.1 자연경관

- 광역계획권 내 시가지 확산에 따라 구릉지 및 산림이 훼손되고 산악스카이라인 및 수려한 산악경관이 차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공원·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경계부가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자연경관체계가 단절되는 부작용 발생
- 도심 통과 하천변의 호안정비 및 복개, 공영주차장, 영세공장, 음식점 등 수질 오염 유발시설이 증가하여 자연경관의 연속성 확보에 장애 초래
- 우수한 자연녹지경관의 활용 및 자연녹지의 능선을 경관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필요

8.1.2 도시경관

- 주거지역 및 택지조성 확대와 경제성장 위주의 도시화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부족한 도시경관 형성
- 공공청사, 철도역, 터미널 등 공공건축물의 개성 부족으로 도시이미지가 특화되지 못함
-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등이 부족하고 중소도시의 노후화된 건축물, 간판, 광고물 난립 등이 도시경관 이미지를 저해
- 기존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경관적 측면에 대한 고려부족으로 도시 경관이미지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실정

8.1.3 역사·문화경관

- 유적지 및 문화재 등의 관리 소홀, 홍보·안내체계 미비와 역사자원과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 및 건축으로 인한 역사경관 저해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지역적인 특성 또한 반영되지 못하여 유원지 및 관광지 경관의 개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일부 주요 관광지 주변의 각종서비스시설이 비체계적으로 확대되어 관광자원과의 부조화와 교통체증 유발

8.2 핵심과제

- 자연경관의 보존 및 보전
 - 하천경관, 산림경관의 원시성 보존 및 자연친화형 개발을 유도하고 당해 지역의 경관특성을 명확히 해주는 구릉지와 오픈스페이스 적극 보호
 - 산지경관의 특성 보전 및 여가수요를 수용, 주요 산 주변에 경관관리 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 실시
-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조
 -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랜드마크적 조망 요소와 주요 경관축(자연축, 역사문화축)을 활용하여 도시경관 수준 향상
 - 주요 산과 수변공간의 전망을 고려한 도시 가로경관계획 수립
- 역사·문화경관의 보존
 - 지역의 대표적 역사경관 보존·주변구역 정비를 통해 역사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주변과의 연계 개발 추진
 - 중요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고도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문화재와 연계된 개방공간 조성
- 경관자원을 활용한 지역이미지 향상
 - 점·선·면적으로 산재된 경관자원을 체계화하고 지역 경관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 수립
- 경관관리거점을 설정하여 거점별 특성에 따라 관리지침 수립
 - 지역의 경관특성을 고려한 경관거점을 설정하여 녹지관리, 환경보전 및 문화여가계획 등과 연계된 관리지침 마련

8.3 전략 및 실천계획

8.3.1 경관유형별 전략

○ 자연경관

- 자연지역은 자연상태로 보존하며 당해 지역의 특징과 지형을 명확히 해주는 구릉지와 오픈스페이스를 보호
- 산지경관의 특성보전 및 여가수요를 수용하고 주요 산 주변에 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를 실시
- 경관관리대상 구릉지의 경우 지역·지구를 세분화하고 필요시 공원시설 정비를 통해 경관 보전 강화

○ 도시경관

- 주요 산·수변공간의 전망을 고려한 도시 가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내 주요 전망지점을 파악하여 경관 확보
- 강변에서의 조망축을 확보하고 계곡형 간선가로변에서 주요 산으로 향하는 조망축 확보

○ 역사·문화경관

- 중요한 역사자원이나 역사적·건축적·미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보전
- 역사성이 있는 건물은 수복, 개조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설계할 때는 지역의 역사·문화와 조화되도록 함
- 중요문화재 주변에 고도제한을 실시하고 문화재와 연계된 개방공간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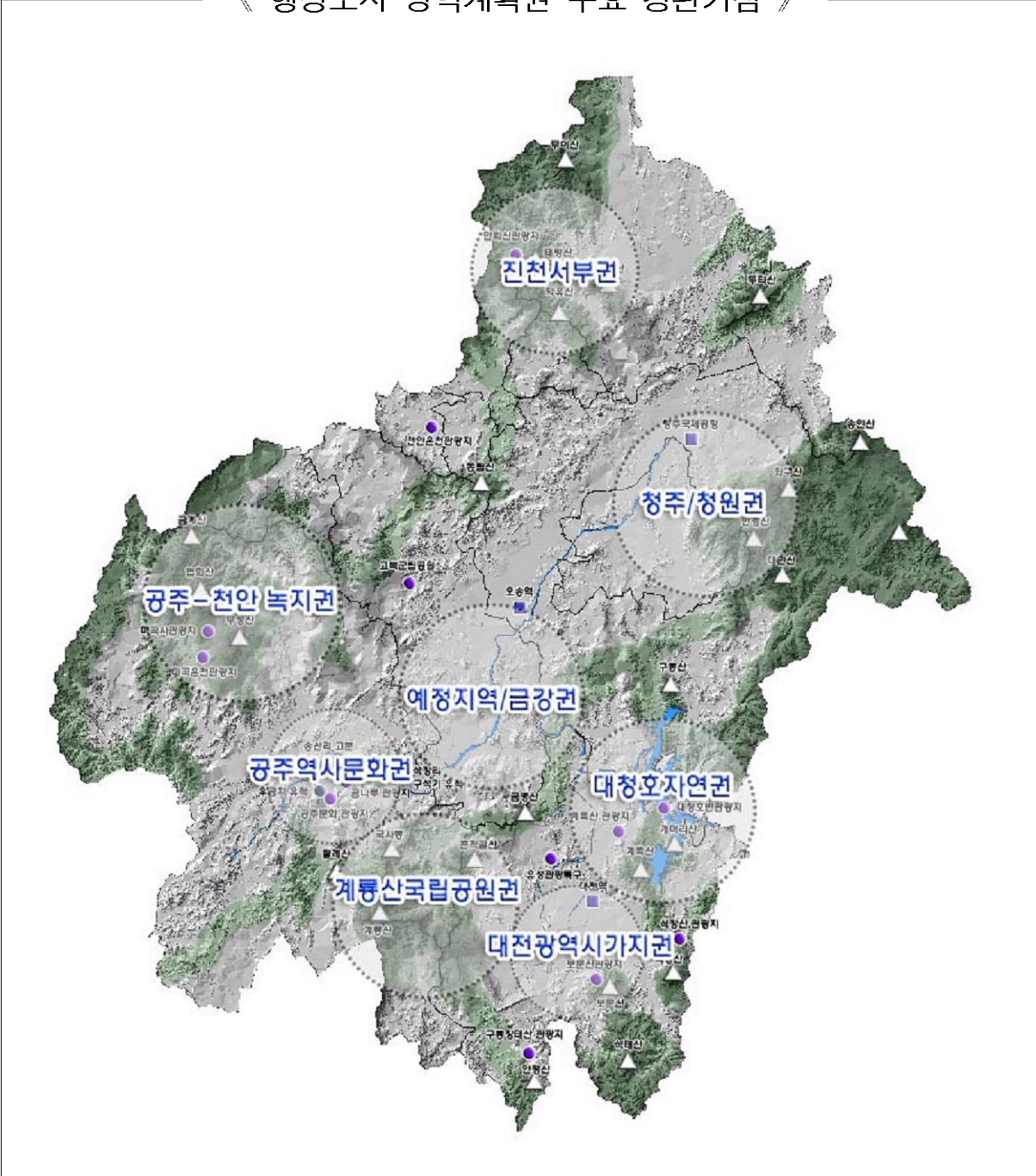
8.3.2 경관거점별 보전전략

○ 계룡산국립공원권

- 녹지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절대녹지로 지정·관리
- 절대녹지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여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 하도록 유도

- 대청호자연권
 -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광지 조성
- 공주 역사문화권
 - 공산성, 송산리 고분, 우금치 유적 등 역사·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전하여 역사·문화·사회적 특성의 계승
 - 백제문화의 흔적을 간직한 옛 토지이용형태, 장소성, 역사적 의미가 연속되는 도시재개발 유도
- 예정지역·금강권
 - 행정도시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금강수변경관 조망권을 보호하고 환경친화형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경관 보존
- 대전광역시가지권
 - 획일적인 도시경관에서 탈피하여 개성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효율적 방안 강구
 - 구시가지 재개발시 지구단위계획을 장려하고 용도지역 세분화기준설정 기초연구 등의 장기적·계획적 경관관리지침 수립
- 진천서부권
 - 덕유산, 태령산, 만락산을 중심으로 한 녹지경관축을 설정하여 경관조망 보호
- 공주-천안 녹지권
 - 공주 북부·천안 남부(금북정맥)의 양호한 산림경관을 보전하고 무성산 주변의 마곡사관광지 개발에 따른 산림경관 훼손 방지
- 청주·청원권
 - 안경산, 좌구산 등의 양호한 산림경관을 보전하고 청주국제공항, 상당산성, 고인쇄박물관 등 역사·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심경관과 자연경관의 조화 도모

《 행정도시 정책계획권 주요 정관거침 》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경관거점별 조망점 및 경관자원 》

구 분	조망점	경관자원
계룡산국립공원권	계룡산	계룡산국립공원, 국사봉, 흔적골산
대청호자연권	대청호	대청호반관광지, 계족산관광지, 개머리산
공주역사문화권	구시가지	공산성, 송산리 고분, 우금치유적, 공주문화관광지, 금강, 곰나루관광지
예정지역·금강권	금강	금강, 행정도시
대전광역시가가지권	시가지	보문산관광지, 대전역(KTX)
진천서부권	태령산	만뢰산관광지, 태령산, 덕유산
공주·천안 녹지권	무성산	마곡사관광지, 마곡온천관광지, 무성산, 법회산
청주·청원권	인경산	인경산, 청주국제공항

8.3.3 실천계획

□ 경관동질성을 갖춘 단위지역별로 일관된 경관계획 수립

- 스카이라인, 분지형태 등을 감안하여 경관계획권을 설정하고 특색 있는 경관계획 수립
- 지역별 특색 있는 도로경관을 설정·관리하며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된 경관도로 구축
- 자연형 농경지 및 우량농지, 과수원, 목장 및 목초지 등 농촌경관적 특색이 우수한 지역을 발굴하여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 자연경관 우수지역의 보전 강화 및 종합적 관리

- 시·군별로 산림, 계곡, 하천, 호수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로 지정
-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지형 및 식생 등을 보전하고 당해 지역의 특징적인 구릉지와 오픈스페이스 보호
- 하천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변의 녹지대·습지의 보존·복원, 인공호안 및 토목구조물 경관 개선 등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 자연경관과 인공시설물이 조화를 이루는 시가지 경관 형성

- 도시개발시 주변 자연경관의 변화를 예측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시가지 조성
- 중요한 역사자원이나 건축적·미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보전하고 중요문화재 주변의 고도제한을 실시하며 문화재와 연계된 개방공간을 조성
- 구릉지 개발시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사지 녹화를 통해 산사면(山斜面) 녹지의 연속성 유지
- 도시 내 하천, 호수 및 저수지는 지역의 쾌적성(amenity)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접근성이 좋은 친수공간으로 조성·활용

9. 환경보전계획

9.1 현황 및 문제점

9.1.1 대기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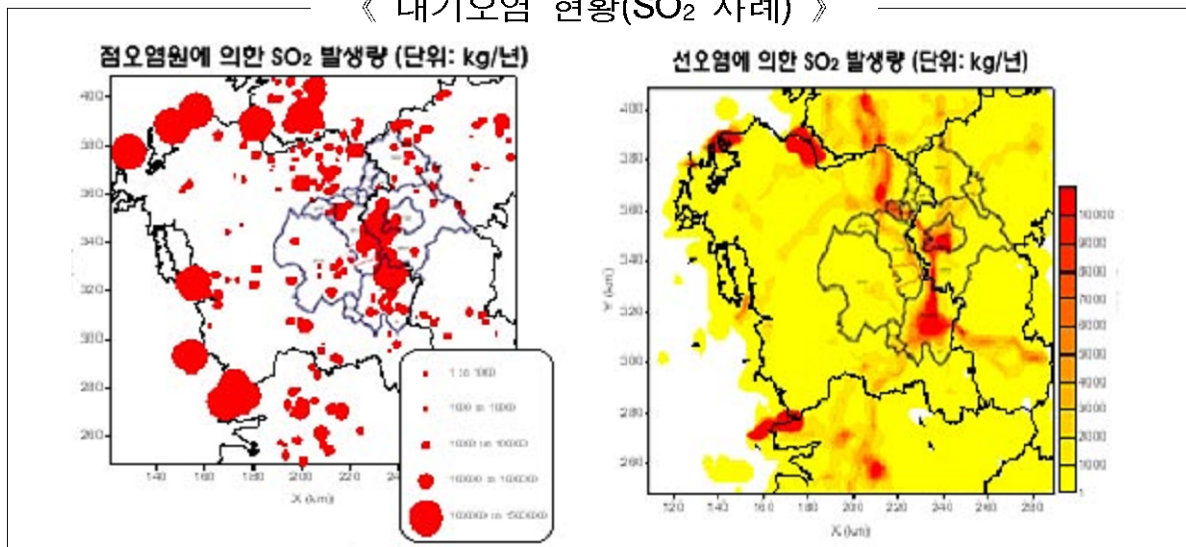
- 자동차 오염의 광화학반응 2차 생성물질인 O_3 (오존)의 경우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자동차 오염에 기인하는 NO_2 (이산화질소), PM_{10} (직경 $10\mu m$ 이하의 미세먼지) 등은 수도권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광역계획권내의 NO_2 , PM_{10} 의 경우 선오염원이 절대 우세하며 경부고속국도, 호남고속국도를 중심으로 이동오염원 기여
- SO_2 (이산화황)의 경우 광역계획권 전역에서 점오염원이 우세하나 경부고속국도를 중심으로 한 선오염원도 발생

※ 점오염원 : 오염물질이 특정한 지점 또는 비교적 좁은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것

선오염원 : 오염물질이 고속국도와 같은 선형(線形)의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것

이동오염원 :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지역

《 대기오염 현황(SO_2 사례) 》



※ NO_2 와 PM_{10} 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형태를 보임

- 광역계획권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인구 및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O_3 와 NO_2 오염도 증가로 “선진국형 대기오염” 상태로 변화될 전망

9.1.2 수질오염

- 수계별 75개 하천의 128개의 측정지점과 11개 호소의 38개 측정지점 조사 결과(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모니터링 측정자료, 환경부)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환경부고시 제1991-35호)』 대비 목표수질 달성에 미흡
- 금강수계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청원군의 경우 2003년 2.1mg/ℓ에서 2004년 2.6mg/ℓ, 2005년 상반기 3.2mg/ℓ를 기록했으며 공주는 2004년 3.0mg/ℓ에서 2005년 상반기 3.7mg/ℓ로 악화
 - 금강수계의 38개 하천구간 중 중 24개 수역이 광역계획권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II 등급의 수질을 보임(BOD 평균 2.34mg/ℓ)
- 향후 행정도시 건설 및 광역계획권 내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수질오염부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환경부에서 수립 중인 「2006~2015년 대권역 수질보전 계획」을 토대로 중권역 수질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 개선 도모 필요

9.1.3 폐기물

- 2005년 광역계획권의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822.5톤/일이며, 매립비율은 30.4%임
- 금강유역환경청 관할권역 내의 산업단지에서는 연간 49,208.9톤의 지정폐기물 배출
 - 충청권에는 전국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의 20.1%인 11,339개소가 입주
 - 청주지방산업단지는 화학물질 966톤을 배출하여 금강충청권 산업단지 전체 배출량(1,054톤)의 91.7%를 차지
-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은 광역계획권내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사용기간이 2010년 이전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추가 필요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구 분	총매립지 면적 (㎡)	총매립용량 (㎡)	기매립량 (㎡)	잔여매립 가능량 (㎡)	2005년 매립량 (㎡)	사용기간 (연도)
계	868,679	11,355,561	6,946,378	4,409,183	455,239	-
대전광역시	608,256	8,762,000	5,231,000	3,531,000	254,000	1996~2011
청주시	100,500	1,288,000	855,228	432,772	147,593	2002~2006
진천군	9,918	28,500	24,300	4,200	846	1995~2010
증평군	50,596	363,061	220,850	142,211	11,000	1994~2016
공주시	32,110	554,000	365,000	189,000	15,000	1999~2013
연기군	41,000	170,000	130,000	40,000	10,800	1994~2008
계룡시	26,299	190,000	120,000	70,000	16,000	2000~2007

자료 : 환경부, 200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6

9.1.4 생활환경

-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가동 등 광역계획권내 산업단지의 추가입주에 따른 환경부하 증가 우려
 - 진천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장 입지에 의한 자연환경 및 경관훼손, 수질·대기오염 등 생활환경의 악화 우려
- 정주공간의 증가 및 가용지개발 확산은 자연생태공간의 축소로 이어져 정주민의 쾌적성(amenity)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 내포

9.2 핵심과제

-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이 연계된 광역적 대기관리체계의 구축
 - 도시기능의 공간적 확산을 억제하여 분산적 개발을 방지하고 집약적 토지이용구상을 통한 교통발생요인 최소화
- 유역차원에서의 수질 및 하천관리 강화
 - 광역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고 공급하기 위해 유역 단위별로 조사·연구하여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연계한 종합관리 추진
- 소각시설 확충 및 협력적·광역적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 생활폐기물 감량화, 처리방식의 개선 및 소각시설 확충으로 매립발생량 최소화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폐기물시설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광역계획권 내의 비오톱(Biotope) 조성 등 적극적인 친환경 도시개발 추진
 - ※ 비오톱(Biotope) :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서식공간을 의미
- 자원 및 에너지순환을 통한 순환형 체계(Circular Metabolism) 구축
 - 폐기물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풍력, 태양력,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자원 실용화 계획을 수립·실천

9.3 전략 및 실천계획

9.3.1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이 연계된 광역적 대기관리체계의 구축

- 분산적 개발을 방지하고 집약적 토지이용구상을 통한 교통발생요인 최소화
 - 교통발생빈도와 이동거리를 저감할 수 있도록 확산적 개발을 지양하고 행정구역을 탈피한 클러스터형 개발 유도
- 산업단지, 주거단지, 교통혼잡지역 등 토지이용 특성에 맞는 대기오염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단속강화

-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의거하여 점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유도
-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자동측정망을 확충하고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대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역적인 대기관리체계 구축
-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시 하천, 계곡 및 평야지 등 지형분석 및 바람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선정 지원시스템 구축

9.3.2 유역차원에서의 수질 및 하천관리 강화

- 금강오염총량관리계획에 기초한 시행계획을 조기에 작성하고 광역계획권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강화로 계획의 효과적인 시행 유도
-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수자원 절약 및 수질관리를 위한 중수도체계의 보급 확대
- 소하천의 수질 유지를 위하여 유입지천 상류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축이나 자연적 유기물 분해·처리가 가능한 소규모 산화지(酸化池) 설치 방안 모색
 - ※ 산화지 (Oxidation pond) : 하수 중의 유기물을 자연의 정화작용에 의해 세균이나 조류의 작용을 받아서 안정화하기 위한 못을 말하며 라군(Lagoon) 또는 안정지라고도 함.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안정화에 수주일이 걸리지만 유지 관리는 용이함
-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 축산폐수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유도
- 대도시 및 인접지역, 공동수계지역 등 광역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하수도관망 및 하수처리시설의 공동설치·이용을 유도

9.3.3 소각시설 확충 및 협력적·광역적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을 전제로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소각 처리율 25%를 목표로 매립발생량 최소화 유도
-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며 폐열 이용 등 자원재활용 추진

-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광역적 시설설치 유도

9.3.4 광역계획권 내의 비오톱(Biotope) 조성 등 적극적 친환경 도시개발 추진

- 하천, 공원, 수림지에 대해서는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비오톱 조성
 - 광역계획권 내 지방자치단체별 비오톱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취약지역을 선별하고 해당지역에 대하여 주변 경관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조성계획을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기존의 단절구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단절정도에 따른 복원계획을 마련하며 하천변식생, 인공수림지, 생태연결통로 등을 조성하여 복원·정비

9.3.5 자원 및 에너지 이용의 순환체계(Circular Metabolism) 구축

-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사용을 위한 전체에너지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
 - 친환경적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체계 도입 및 CNG(압축천연가스), 바이오디젤 등 교통에너지의 다변화 촉진
 - 자전거, 보행 등 녹색교통수단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광역계획권내 지자체의 수자원·에너지관리 계획을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수립하고 하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10. 광역시설계획

10.1 현황 및 문제점

10.1.1 현황

□ 상수도 시설

- 광역계획권내 1일 1인당 평균 급수량(2005년 기준)은 365ℓ로 전국평균 363ℓ를 상회
 - 급수인구 기준의 상수도 보급률은 대전광역시가 98.8%로 가장 높고 청주시, 계룡시는 90%를 상회하는 반면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진천군 등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광역계획권 평균에 미달
- 광역계획권 상수도의 주 상수원은 대청호와 충주호이며 나머지는 각 지역의 지방상수도를 통해 공급됨
- 광역계획권 내의 24개 정수장(천안시 포함, 5개는 가동 중단)은 총 1,645,182m³/일의 용량 보유

□ 하수도시설

-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2005년 현재 14개로 권역 외부의 천안시에 위치한 시설(2개소)까지 합하여 1일 1,465,350톤의 시설용량을 보유하고 있음
- 광역계획권 내 하수처리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청원군, 진천군, 연기군, 천안시(5개면)의 하수처리율은 매우 낮게 나타남
 - ※ 하수처리율 : (처리량/발생량) × 100
- 광역계획권 내 하수처리인구는 2,237천인(86.6%)으로 대전광역시와 청주시 등 도시부가 하수도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하수도보급률(인구기준) : (하수처리인구/총인구) × 100
- 광역계획권의 하수계획관거는 5,896천km이나 현 시설은 4,618천km로 시설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78.3%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 청주시, 연기군 순으로 시설기준 하수도 보급률이 높음
 - 청원군, 진천군, 공주시, 계룡시와 천안시(5개면)는 시설기준 하수도 보급률이 광역계획권 평균에 미달하며 특히 진천군은 16.5%로 가장 취약
 - ※ 하수도보급률(시설기준) : (관거시설 시설연장/관거시설 계획연장) × 100

□ 폐기물처리시설

- 광역계획권의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량(2005년 기준)은 2,822.5톤/일임
 - 처리방법별로 살펴보면 매립 859.8톤/일로 30.4%, 소각 341.7톤/일로 12.1%를 차지하며 나머지 1,621.9톤/일(57.5%)은 재활용
- 광역계획권 3,597km² 중 3,532km²(98.2%)가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총인구의 99.7%가 관리구역 내에 있음
-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현황을 보면 천안시에 2개소, 청원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1개소씩 입지하여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대전광역시와 공주시, 증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용기간이 2010년 이전까지로 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청원군의 경우는 폐기물 매립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청주시는 사용기간이 만료됨(2006년)
-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시설은 전국 230개 중 5개가 광역계획권 내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도 처리량은 129,928톤으로 전국 처리량(2,524,362톤)의 5.15%를 차지함

□ 운동장시설

- 체육시설 현황(2005년도 기준)은 실내체육관 26개소, 종합경기장 6개소, 테니스장 13개소, 수영장 14개소 입지
- 광역계획권 내에는 광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운동장 시설 부족

□ 물류·유통시설

- 광역계획권 내에는 컨테이너 기지나 복합화물터미널 등 대규모 물류시설이 없어 광역계획권 내 물류업체들 대부분이 지역 외부 시설에 의존하고 있음
 - 현재 조성중인 대전과 천안의 유통단지와 청원·연기지역의 복합화물터미널이 완공되면 광역계획권내 유통수요의 상당 부분 충족 가능

- 광역계획권내 유통단지는 화물터미널과 집·배송단지, 창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0.56km² 규모의 대전종합유통단지가 1998년 지정 및 조성중임
- 화물터미널은 대전에 대전공용화물터미널, 중부대전화물터미널이 있으며 청주에 청주화물터미널, 천안에 중부천안화물터미널(계획권역 외부에 위치) 등 4개가 위치

10.1.2 문제점

□ 상수도 시설

- 광역계획권 전체 평균으로는 용수 보급이 양호한 편이나 청원군, 진천군, 공주시, 연기군, 천안시(5개면)는 매우 낮은 보급률을 나타내어 용수부족 우려
- 공급체계의 효율성 개선을 통한 지역간 격차 완화가 필요함

□ 하수도 시설

- 광역계획권의 하수처리율은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나 청원군, 진천군, 연기군, 천안시(5개면)의 하수처리율은 낮음
 -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도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은 양호하지만 다른 지역은 광역계획권 평균에 미달
- 하수처리시설은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 대도시 지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므로 균형 있는 시설 확충 필요

□ 폐기물 처리시설

- 대전광역시, 증평군, 공주시를 제외한 지역의 폐기물매립시설은 2006년~2010년 사이에 용량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광역계획권내 폐기물매립시설은 자체계획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

□ 이용시설(운동장 시설, 물류유통시설)

- 광역적으로 이용가능한 대규모 운동장이 없으므로 향후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의 수요증대에 대비 필요
- 광역계획권내 대규모 물류시설 부족으로 외부 물류시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물류수요 증대에 대비 필요

10.2 수요추정

□ 수요추정 방법

- 광역시설 수요는 계획인구를 기초로 원단위법을 사용하여 추정
 - 시설수요 추정을 위한 계획인구는 인구 시나리오상의 상한인구(2030년 400만)를 적용
 - 시설수요 원단위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값을 참고하여 설정
- 수요추정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대 상 시 설
공급시설	· 상수도시설(취수장, 정수장) · 하수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이용시설	· 물류·유통시설 · 대규모 운동장 및 기타 광역이용시설(문화예술회관, 체육공원 등)

□ 상수도 시설

- 2005년 현재 90.8%인 광역계획권 상수도보급률을 2020년 95.0%, 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99.0%까지 향상
- 1일 1인당 급수량은 2030년 350ℓ 수준으로 설정하여 자원절약을 위한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 유수율 제고 및 관망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상수도 공급시설이 충분한 지역과의 공동이용 도모
- ※ 2030년의 1일 1인당 급수량 원단위 지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 보완자료(2006)」의 급수량 예측치(2020년 341~367ℓ) 반영
- 광역계획권에 필요한 급수량은 2020년 1,179,268m³/일, 2030년 1,403,250m³/일로 추정
 - 광역계획권 용수공급시설의 현재 용량(1,571,005m³/일)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의 용수 수요량을 전량 충족 가능
 - 다만 지역별로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용수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용수 공동이용 추진 필요

□ 하수도 시설

- 2005년 현재 86.6%인 하수도 보급률(인구기준)을 2020년 90.0%, 2030년 95.0%로 개선
- 2030년의 1인 1일 하수처리량은 2004년 현황(80.1%)을 감안하여 상수 급수량의 85.0%로 설정함
 - 1인 1일 하수처리량은 297.5 ℓ/일임
- 수요예측 결과 광역계획권의 하수량은 2020년 920,837m³/일, 2030년 1,133,326m³/일로 추정
 - 광역계획권 하수처리시설의 현재 용량이 1,315,350m³/일임을 감안하였을 때, 2030년까지 발생하는 하수량을 전량 처리하고도 여유 용량이 발생함
 - 지역별로는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군, 진천군, 공주시, 연기군에서는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청원군의 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나 쓰레기 종량제·재활용 등을 적극 활용하여 매립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수요를 조정
 - 광역계획권의 폐기물 배출량(2005년 기준)은 1.1kg/일·인이고 매립 비율은 30.4%임을 감안하여 2030년 매립폐기물을 0.33kg/일·인으로 설정
 - 대전광역시와 중평군을 제외한 지역의 매립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매립시설 설치 필요

□ 물류·유통시설

-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를 포함하는 중부권은 총 물동량이 2011년 4.68억톤, 2016년 5.74억톤으로 전망
 - 유통단지는 총 390만m²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건설교통부,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2002)

10.3 핵심과제

- 기존 상수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취수원을 개발하되 연기군 등 일부 상수도 보급률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조기 시설확충 고려
- 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단계별 용량확충계획으로 하수 처리의 적정화 도모
-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의 조기건설과 광역적 이용으로 시설이용의 효율화 추진
- 대규모 운동장시설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관리효율성 강화
- 종합물류수송체계 구축 및 광역계획권내 거점도시별 적정규모의 유통단지 배치

10.4 전략 및 실천계획

10.4.1 광역시설 확충 및 배치의 기본원칙

-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계획적 접근, 광역시설의 공동투자 및 이용을 통해 중복개발 및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
 - 혐오시설에 대한 광역적 관리로 국토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방지하고 물류 시설, 정보·통신시설, 체육시설 등을 권역별로 균등하게 배치
- 광역시설의 확충과 배치에 있어서 광역계획권 지방자치단체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
 -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중재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 등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
 - 혐오시설과 선호시설의 전략적 배치를 통해 해당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조정
-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의 활성화
 - 광역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자유치 등을 검토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위탁 등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10.4.2 상수도 시설

□ 상수도 시설 확충전략

- 상수도 시설의 지역별 공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용수가 풍부한 지역의 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확충도 고려
-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급수원을 확보하는 한편 광역상수도망이 통과하는 농촌지역을 광역상수도 보급대상으로 확대 편입하고 건설교통부의 상수도 공급계획과 연계 공급
 - 상수도 미공급지역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간이급수에 의한 위생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개발을 적극 추진
 -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 공급시설이 충분한 지역과의 공동 이용 방안 검토
-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 사업, 노후관 개량, 계량기 교체, 누수방지 사업의 시행으로 유수율 제고
-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지역은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용수공급시설 확충 계획을 반영

《 광역계획권내 지자체의 용수공급시설 확충계획 》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일)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년)	비고
청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충청북도 청주시 지북동	125,000	802	2006-2013	기존 노후 정수장 (지북,영운) 정비사업 : 용량 증가 없음
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163,000	1,223	2001-2008	정수장 2개소 신설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구축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충청북도 청주시	254,700	748	2004-2008	가압장 2개소 증설

자료 : 시·도별 상수도 공급계획, 2006

□ 상수도 시설 배치전략

-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장의 위치는 수질이 양호하고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계획 취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
- 오수의 유입부를 피하고 하천의 경우 장래 개수계획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입지

10.4.3 하수도 시설

□ 하수처리시설 확충전략

-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한 지역(특히 청원군, 공주시)의 하수처리시설을 조기 확충
 - 기 계획된 공주지역의 공주·동학사·갑사·유구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고 청원군 읍지역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신설

□ 하수처리시설 배치전략

- 하수도 시설의 신설 및 개량사업은 시·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침수지역이나 배수불량지역을 우선 시행
- 시가화된 인구밀집지역은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농촌지역은 마을 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를 이용하여 분산처리
- 하수처리장은 광역계획권 내의 계획하수·오수량을 산정하여 각 시·군별로 배분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입지를 선정
- 하수도 시설의 신설 및 개량사업시 각 시·군의 배수체계에 따라 분류식 시스템이 적용되도록 계획
-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지역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공업단지의 조성과 병행하여 자체 처리장을 신설

10.4.4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전략

- 매립장은 광역적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입지와 시설규모는 지자체간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하되 가급적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입지를 결정

※ 대전광역시와 연기군에서 현재 계획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우선 반영

- 폐기물소각시설은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간 합의에 의한 공동이용 장려
- 일반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의 안정적 위생처리 강화
-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청정에너지화를 촉진하여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 폐기물 처리시설 배치전략

- 몇 개의 중소도시를 묶어 폐기물 소각, 재활용, 위생매립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권역별로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일정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매립 후 공원화 및 주변과 연계하여 조성
- 입지여건은 다음의 조건을 감안
 - 주거지역으로부터 격리된 지역일 것
 - 운반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일 것
 - 지형은 충분한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우수배제가 용이한 지역일 것
 - 100년 빈도 홍수 범람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호소 주변지역은 제외

10.4.5 대규모 운동장시설

- 종합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건설
 - ※ 이 규칙은 종합체육시설을 지자체당 1개소씩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본 계획에서도 주민의 화합과 지역간 균형개발 및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목표연도까지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설치
- 인구규모, 입지여건 등 제약요인으로 운동장 설치가 곤란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대규모로 설치하거나 각각의 기능을 특화하여 시설 상호간 연계체계를 구축
 - ※ 공주시, 연기군에서 현재 계획중인 광역 운동장 시설 확장계획 우선 반영
- 운동장 시설 주변에는 수림대와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가급적 체육공원을 병행 조성하여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

10.4.6 물류·유통시설

□ 물류·유통시설 확충전략

- 광역계획권을 포함하는 중부권의 총 물동량 수요에 소요되는 390만㎡의 부지를 확보하고 계획 중인 물류·유통단지를 조기에 건설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을 적기에 확충하고 간선교통망과의 연계를 강화
- ※ 광역계획권 내에는 2008년 준공 예정인 청원·연기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와 2009년 준공예정인 남대전 종합유통단지가 가동 준비 중에 있으며 청주시, 청원군, 공주시, 연기군에서 물류·유통단지의 조성 및 확장을 계획 중

《 주요 물류·유통시설 확충계획 》

구분	계획내용	위치	유치기능	부지면적 (천㎡)	사업기간	비고
청원·연기군	중부권 내륙 화물기지		복합화물터미널, ICD	489		국가물류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남대전 종합유통단지 건설	동구	집배송 및 도소매 단지	559	-	
청주시	Aeropolis(공항단지) 조성	청주국제공항 인근	항공사업단지, 물류복합단지	2,000	2010-2030	
청원군	오창 산업·항공 물류단지 개발	오창면	배후물류단지 및 주거단지	827	2011-2015	
	남이 산업물류 유통단지 조성	남이면	가구전문 유통 및 생산단지	660	2006-2015	
공주시	거점유통단지 조성	당진·대전 고속국도IC인근	-	-	-	
연기군	연기종합유통단지 확장	서면	물류유통단지	250→400 확장	-	

자료 : (2001~2020)국가물류 기본계획, 시·군별 개발계획(안)

□ 물류·유통시설 배치전략

- 지방자치단체별 물류·유통시설 확충계획을 반영하여 광역계획권 내 물류거점과 국가 물류·유통시설과의 연계 강화
- 대전광역시, 청원·연기군 등의 물류·유통단지를 중심으로 물류거점을 육성하고 광역교통망을 고려한 물류관리전략 수립
 - 청원·연기군의 유통단지는 당해지역 물류처리 및 청주권의 물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청주국제공항의 배후 물류기지 역할 수행

11. 문화 및 여가계획

11.1 현황 및 문제점

11.1.1 현황

□ 문화자원 현황

- 광역계획권에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시설, 문화보급시설 등 총 232개의 문화시설 분포
 -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 도시지역에 많은 문화시설이 있으며 특히 공연시설의 집중이 두드러짐
- 광역계획권은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 각종 유적, 유물이 넓게 분포
 - 국가지정문화재 194개와 도지정문화재 288개, 문화재자료 133개가 지정·관리되고 있음
 - 23개의 국보 중 19개가 공주시에 있으며 청주시에는 국가지정 민속자료가 많이 분포
- 문화축제와 각종 행사 등 문화적 여가자원도 풍부한 편이므로 체계적으로 연계한다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여가자원 현황

- 광역계획권에는 풍부한 자연관광 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대청호와 유성온천, 만뢰산, 계룡산 등은 향후 활용 잠재력이 우수함

《 자연관광자원 현황 》

구 분		자 원
대전광역시		보문산, 대청호, 계족산, 장태산, 유성온천, 식장산, 구봉산
충청북도	청원군	옥화 9경, 금단산
	증평군	좌구산, 두타산
	진천군	만뢰산, 연곡저수지, 백곡저수지, 초평저수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산(천황봉, 삼불봉, 연천봉, 관음봉, 갑사계곡)
	연기군	고북저수지, 백로저수지

- 광역계획권내 여가자원은 국립공원 1개소, 군립공원 1개소, 지정관광지 13개소와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등이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음

《 여가자원 현황 》

구 분	개소	자 원
국립공원	1	계룡산(61.148km²)
군립공원	1	고북산(1.949km²)
지정관광지 (관광, 운동, 휴양지)	13	대청호반, 계족산, 식장산, 구봉산, 장태산, 보문산, 유성관광특구 관광지(대전), 마곡온천, 마곡사, 곰나루, 공주문화 관광지(공주), 명암유원지(청주), 만뢰산 관광지(진천)
관광농원	1	산내대별(대전)
자연휴양림	1	만인산(대전)
기타 관광자원	-	Expo 과학공원(대전), 백제문화유적(공주), 동학사 온천(공주), 운주산성(연기), 국립청주박물관(청주), 초정약수(청원군),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진천) 등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여가자원 현황 》



11.1.2 문제점

□ 문화·여가공간의 지역적 편재 및 네트워킹 미흡

-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시설 기반이 취약함
 - 관광지과 운동·휴양지 등 지정관광지가 대전광역시, 공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
- 개별 단위 문화·관광자원 또는 시설에만 의존하고 있어 관광자원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별, 관광지별, 문화·관광자원별 특화전략도 미흡
- 광역계획권내 거점도시를 아우르는 관광·여가체계 및 관광루트, 문화·관광 정보네트워크 등 문화·여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체계적 기반 미흡

□ 문화·여가행태 수요변화에 대응한 대처능력 부족

- 문화·여가시설 개발이 단조롭고 획일적이며 관광경관·시설의 이미지 연출이 미흡하여 지역정서 및 특성과의 연계성 부족
- 문화·여가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단위 시설이나 자연경관 자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다양화·고급화되어 가는 문화·여가 수요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미흡

□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문화·여가공간

- 경제·사회의 발전,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문화·여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문화·여가공간의 개발 및 정비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주말체류형 여가활동이 활성화되어 농촌지역의 소득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민의 주말체류형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
- 기존의 산재한 관광자원을 홍보·안내하는 지역관광정보센터가 부족하여 관광 자원의 활용도 저하
- 대규모 광역체육시설, 생활권별 체육시설, 레저 및 위락시설 등이 부족

11.2 핵심과제

- 광역계획권의 문화자원, 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 중심거점 육성
 - 광역문화거점인 공주의 백제문화, 청주의 고인쇄문화, 대전의 과학관광자원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관광거점 육성 추진
- 광역적 문화·여가 및 관광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적 문화·여가·관광 체계와 연계
- 지역별 문화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 지역축제 등을 활용한 지역 이미지 향상 등 문화·여가자원의 적정관리 및 여가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 녹지축을 근린 여가활동의 배후지로 활용하고 자연자원과 인공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문화·여가계획을 수립
- 행정도시 및 대전광역시 등의 대규모 문화시설을 광역적으로 활용

11.3 전략 및 실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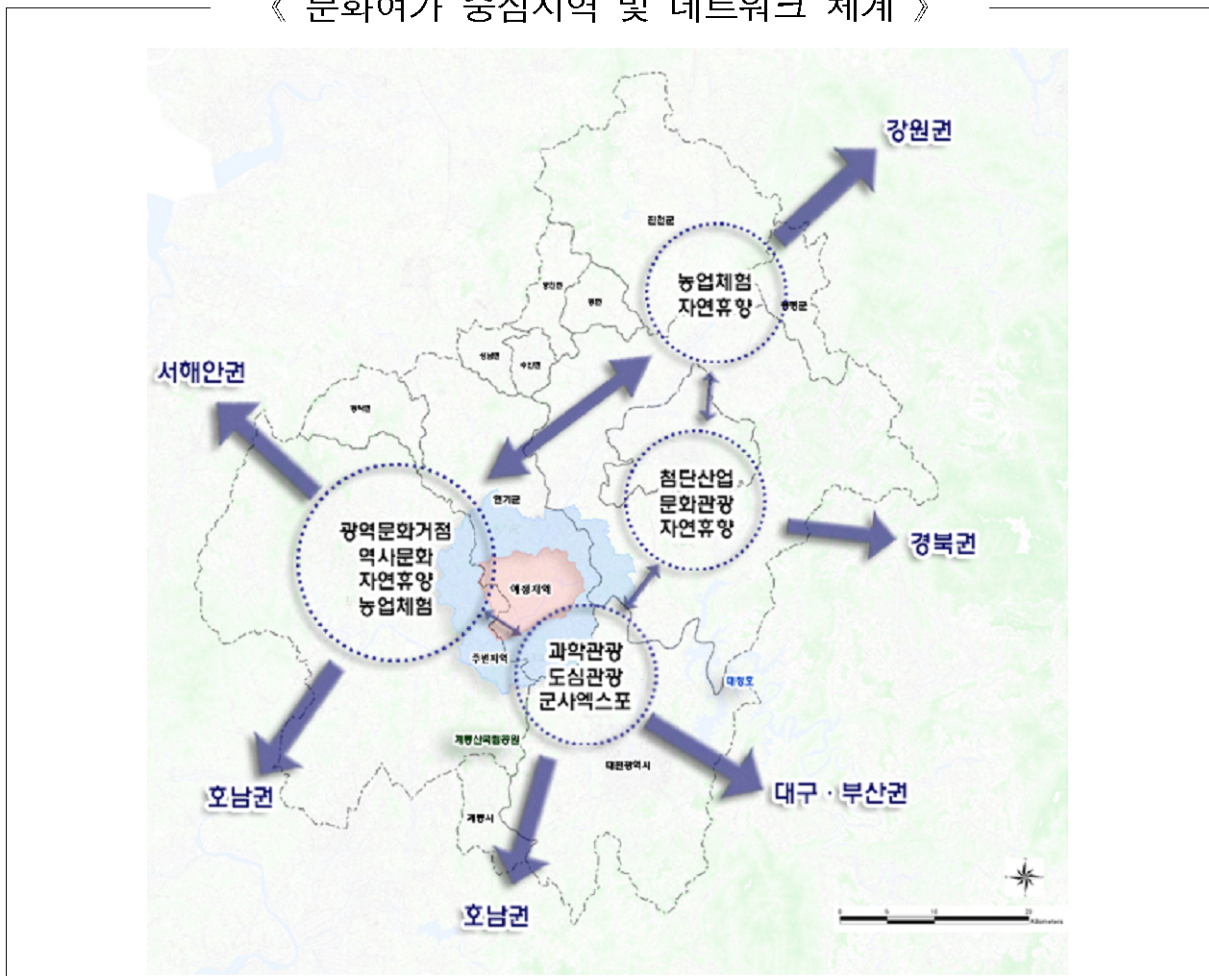
11.3.1 문화·여가 중심지역의 설정

- 행정도시·대전광역시·계룡시를 연계하는 도심관광·문화시설 중심지역, 청주시·청원군의 첨단과학기술관광 중심지역, 공주시·연기군의 백제문화·계룡산 중심지역, 진천군·증평군·천안시 남부지역의 생태관광 중심지역 설정
- 소단위지역 문화·여가권 설정을 지양하고 유사지역을 연결한 통합 관광권을 조성하여 산재된 관광자원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고 상징성과 경쟁력을 지닌 문화·여가 중심권으로 육성
- 다양한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광역계획권내 문화·여가자원의 통합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다양성과 일관성이 조화된 이미지 창출

《 문화·여가 중심지역별 테마 》

중심지역	주요도시	테마	개발방향
행정도시·대전권	행정도시, 대전광역시, 계룡시	도심관광, 행정도시 이미지	- 행정도시 도시시설 - 엑스포공원 연계 - 갑천과학문화관광벨트 - 유성관광특구 - 계룡산국립공원 - 군사엑스포
청주·청원권	청주시, 청원군	첨단과학기술	- 오송생명과학단지 - 오창과학산업단지 - 청원 청정지역 활용
공주·연기권	공주시, 연기군	역사문화(백제문화)	- 백제문화 적극 활용 - 여가·스포츠·레저 - 금강수변관광축 개발 - 복숭아·밤 축제
진천·증평권	진천군, 증평군, 천안시(5개면)	농업체험, 자연휴양	- 생태농원 조성 - 지역 자연환경 활용

《 문화여가 중심지역 및 네트워크 체계 》



11.3.2 문화·여가공간 네트워크 구축

- 전국적 문화·여가체계와 광역계획권을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 및 관광정보 네트워크 체계 강화
 - 광역계획권 및 인접한 지역의 문화·여가자원을 수도권, 충청권, 중부내륙권 등 다른 지역과 연계 도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여가·관광자원에 대한 홍보의 협력 강화
- 행정도시·대전권, 청주·청원권, 공주·연기권, 진천·증평권으로 연계되는 광역계획권 문화·여가공간 네트워크 구축
 - 문화·여가공간은 광역교통망 및 녹지축을 따라 선적·면적으로 배치

11.3.3 문화·여가·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 시립박물관, 거점도서관 등 지역문화시설 설치 최소기준(문화관광부, 2004) 이상의 문화시설을 생활권별로 확충
 -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민간자본 활용 방안 검토

《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

구 분	기 준
공공도서관	- 인구 6만인당 1개소 + 국립디지털정책 정보도서관 1개소
박물관·미술관	- 인구 9만인당 1개소 + 국립박물관 1개소 + 국립미술관 1개소
문예회관	- 인구 1인당 0.005석
문화의 집	- 인구수 5만명당 1개소

- 다양한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관광상품 및 지역 특산물 개발을 유도
- 관광상품 개발, 관광 안내정보의 생산 및 공급, 시장조사 및 마케팅, 각종 이벤트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 관련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하고 관광객 유치,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11.3.4 녹지축을 근린 여가활동의 배후지로 활용

- 여가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역녹지축 및 도시 내 녹지축과 연계하여 도보, 조깅, 자전거 타기 등 근린형·순환형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
- 청소년들이 쉽게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녹지축 인근 공간에 청소년 여가공간 및 체육시설 설치
- 광역계획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우수한 산림자원을 문화·여가활동 자원으로 활용
- 도시민들이 농촌이해 및 체험, 휴양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11.3.5 행정도시 및 대전광역시 문화시설의 광역적 활용

- 행정도시에 건설되는 문화인프라와 월드컵경기장, 예술의 전당 등 기 구축된 문화·여가시설을 광역적으로 활용
- 미디어테크, 전문공연시설, 생태·생활사 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국제 회의장, 미술관, 각종 전시관 등의 시설을 인근지역과 연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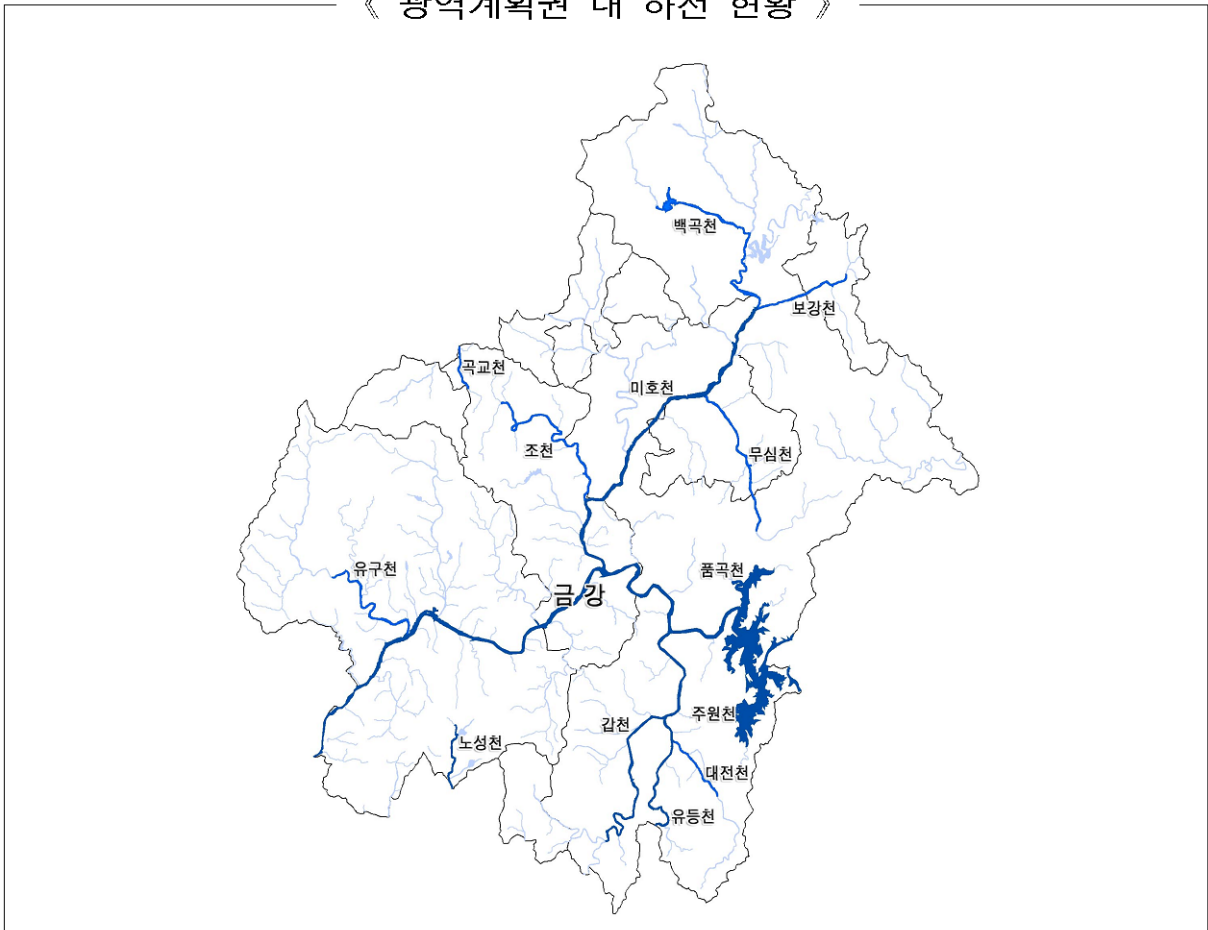
12. 방재계획

12.1 현황 및 문제점

12.1.1 하천 및 수해 관련 현황

- 광역계획권 내에는 총 206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이는 국가하천 4개소, 지방1급 하천 8개소, 지방2급하천 194개소 등
- 하천 개수율은 전체 86.2%이며 국가하천 94.8%, 지방1급하천 94.8%, 지방2급 하천 84.5%로 나타남

《 광역계획권 내 하천 현황 》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내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하천재해 위험성이 높음
-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율이 충청북도 60.1%, 충청남도 55.3%로 매우 낮은 실정임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율 》

구 분	총 연장(km)	수립구간 연장(km)	수립율(%)
계	5,562.35	3,272.15	58.83
대전광역시	213.68	202.58	94.81
충청북도	2,343.11	1,407.56	60.07
충청남도	3,005.56	1,662.01	55.30

자료 : 건설교통부, 「한국하천일람」, 2006.

-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충청북도 45개소, 충청남도 34개소로 전국의 17.1%이며 이 중 충청북도 42개소, 충청남도 30개소가 상습침수지구로 지정
 - 미호천 유역의 청주, 청원, 진천 지역의 홍수피해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금강과 미호천의 합류지점 하류부가 지형적으로 홍수에 취약

12.1.2 기타 자연재해 및 인적 재난 관련 현황

- 충청권의 자연재해 원인별 비중은 풍수해에 의한 피해 61.8%, 대설에 의한 피해가 38.2% 차지
- 과거 홍성지진 발생지역과 광역계획권이 인접하고 있어 지진 대비 필요
 - 충청권의 지진발생 경향은 전국 추이와 유사하고 충청남도 지역은 지진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의 하나임
 -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충청남도 홍성지진 발생지역 (1978.10.7, 지진규모 5.5)과 인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최근 10년(1995년~2004년)간 충청도 일원의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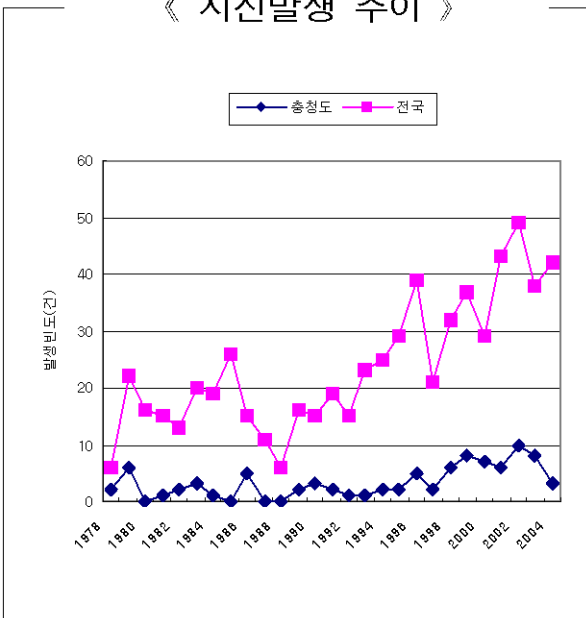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년 도	태풍·폭풍			호우			대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 국	11,391,818			476,550			1,239,689		
계	2,249	280,705	171,287	27,666	453,425	265,856	74,530	81,587	640,981
1996	378	2,765	5,261	-	-	51	-	-	13,273
1997	-	4	-	11,605	49,170	27,799	-	3	2,966
1998	12	450	588	8,882	148,904	94,118	424	9,289	5,858
1999	67	18,662	51,056	1,808	113	39,173	-	-	144
2000	70	6,708	51,579	359	11,723	1,894	-	-	-
2001	-	-	-	-	4,608	10,336	5,546	72,295	236,358
2002	717	178,269	40,468	14	109,871	43,762	-	-	-
2003	37	41,781	470	4,700	15,933	42,051	-	-	-
2004	969	25,032	6,487	258	110,960	6,005	68,560	-	361,332
2005	-	7,034	15,378	40	2,143	668	-	-	21,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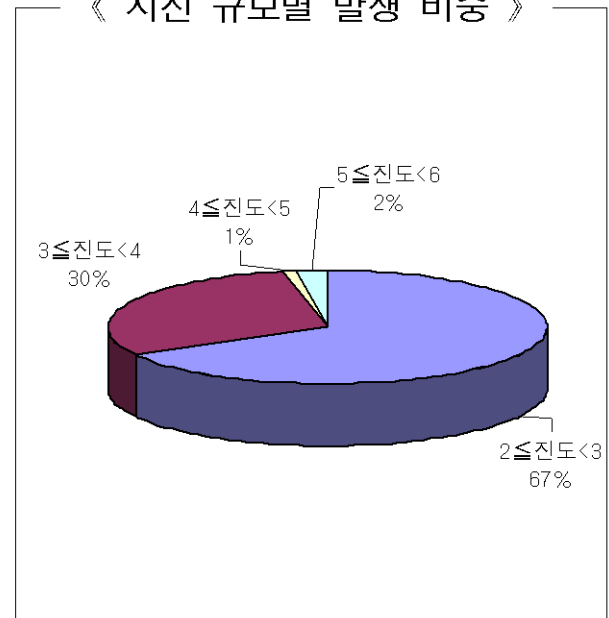
주 : 2005년 환산기준 가격임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1996~2005.

《 지진발생 추이 》



《 지진 규모별 발생 비중 》



- 광역계획권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산불, 가스폭발, 오염물질 유출 등 인적 재난 발생빈도가 높음
 - 광역계획권 내 지자체 중에서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의 인적재난 발생건수가 크게 나타남
 - 4개 지자체의 인적재난 발생건수는 전체 광역계획권 발생건수의 89.2%를 차지하며 특히 산불,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

《 최근 6년(2000년~2005년)간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인적재난 현황 》

연도	대전광역시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천안시	
	빈도 (건)	인명 (명)	빈도 (건)	인명 (명)	빈도 (건)	인명 (명)	빈도 (건)	인명 (명)	빈도 (건)	인명 (명)	빈도 (건)	인명 (명)	빈도 (건)	인명 (명)	빈도 (건)	인명 (명)	빈도 (건)	인명 (명)
2000	1,101	127	605	63	121	36	85	61	49	3	307	51	-	-	9	-	304	33
2001	1,150	132	601	25	108	21	58	10	83	122	154	12	53	14	6	-	279	20
2002	1,041	116	788	48	60	13	65	5	31	2	110	10	33	10	6	-	283	13
2003	901	98	524	56	16	-	77	7	41	4	141	9	38	10	7	-	271	39
2004	946	119	614	50	81	28	77	11	35	8	209	5	44	12	5	1	284	23
2005	-	-	536	43	69	21	80	11	9	1	210	9	33	7	11	2	152	25
계	5,139	592	3,668	285	455	119	442	105	248	140	1,131	96	201	53	44	3	1,573	153

주 1) 대전광역시는 2007년 3월 현재 통계연보가 미발간 상태임

2) 천안시는 읍·면·동별로 구분되지 않아 천안시 전체자료를 사용함

자료 : 각 시·군, 「2006 시·군 통계연보」, 2006.

12.2 핵심과제

- 행정도시 및 거점도시 간 광역적 방재체계 구축
 - 행정도시 건설계획 및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일관된 방재계획 수립
- 건전한 물 순환이 이루어지는 친환경 방재계획 수립
 - 하천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방재거점 및 대피공간으로 활용
-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재해에 강한 도시환경 조성
 - 주요하천 계획빈도 상향조정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제고, 기반시설 및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등 시가지 방재계획 강화

- 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체계 구축
 - 대피소 사전 지정 및 광역적인 대피체계, 이재민 대피를 고려한 공공시설 설계, 재해발생시 거점도시간 상호지원체계 등을 구축

12.3 전략 및 실천계획

12.3.1 행정도시 및 거점도시 간 광역적 방재체계 구축

- 행정도시의 치수정책과 연계하여 금강 및 미호천 유역의 일관된 치수정책 수립
 - 미호천 유역의 천변저류지 조성 및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을 통한 미호천 하류부의 홍수량 경감 도모
- 재해발생 시 도시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도시의 순환도로와 연계되는 주요도로를 방재간선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상수도, 가스 등 생활필수 공급선의 연계 강화
- 하천 유역별 수해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유역 상·하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체계를 통한 광역적 수방체계 구축
- 기상, 지형, 지질, 시설물 및 재해이력 등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재해예측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광역계획권 내 각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적인 방재정보전달체계 구축

12.3.2 건전한 물 순환이 이루어지는 친환경 방재계획 수립

- 빗물의 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에 우수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 유도
- 제방의 안전성과 환경성,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 시 제방의 경사를 최대한 완경사로 유도
- 하천변 공간 확보 및 녹지대·수림대 등 친환경 재해완충지대를 조성하여 하천 범람 시 침수피해를 줄이고 비점오염원 차단 도모

- 공원·녹지를 포함하여 도시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재해 발생 시 방재거점 및 대피공간으로 활용

12.3.3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재해에 강한 도시환경 조성

- 기후변화, 도시화 등에 의한 재해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하천 및 홍수위협성이 높은 하천의 계획빈도 상향 조정을 검토
-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방화기준 강화
- 도시개발 시 녹지 및 산지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위험지도 등을 활용한 체계적 산림관리계획 수립
- 저지대, 상습침수지구 등은 인구유인 시설계획을 지양하되 시설 설치시에는 가급적 성토하여 자연배수체계 구축
- 신시가지 조성 시 인접 하천의 홍수위를 고려한 건축설계, 투수성 포장 유도, 도로변 건축물 불연화, 주민대피를 고려한 도로계획, 돌출간판 지양 등 시가지 방재계획을 강화
- 재해위험도에 따른 재해반복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신규 개발지역은 재해위험도를 반영하여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방재를 고려한 계획 수립
- 재해경감을 위한 저류지, 펌프장 등 방재시설 확충 및 다양한 재해를 고려한 도시방재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도시방재능력 제고 및 방재 유지관리 강화

12.3.4 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체계 구축

- 재해위험도 분석을 통해 대피로 및 대피소를 사전 지정하여 재해발생 시 주민의 신속·안전한 대피를 확보하고 광역적인 대피체계 구축
- 홍수, 지진 등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피기준을 개발하고 첨단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전달체계 확립
- 공공시설(청사, 학교, 체육관 등) 신규 계획 시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방재 기준 적용 및 이재민 대피를 고려한 설계기준 적용
- 재해발생 시 행정도시 및 거점 도시간 인력 및 물자 등의 상호지원체계 구축

13. 행정도시 주변지역

13.1 현황 및 여건

13.1.1 공간적 범위

○ 행정도시의 건전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주변지역 지정·고시(2005. 5. 24)

-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남면·동면·서면·공주시 장기면·반포면·의당면,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강내면 일대로 3개 시·군, 9개면, 74개리로 구성 되어 있으며, 면적은 223.8 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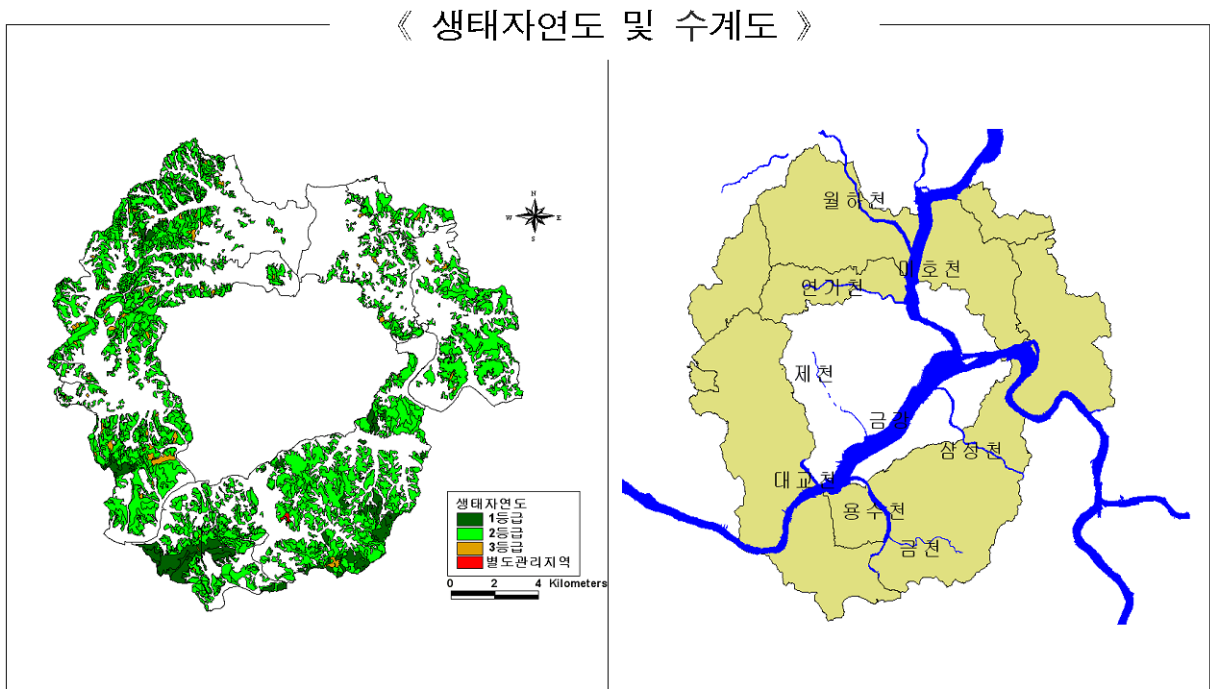
※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도시적으로 개발되는 예정지역과 차별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계획적인 공간관리 방안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정주 환경 정비방안 마련 필요

《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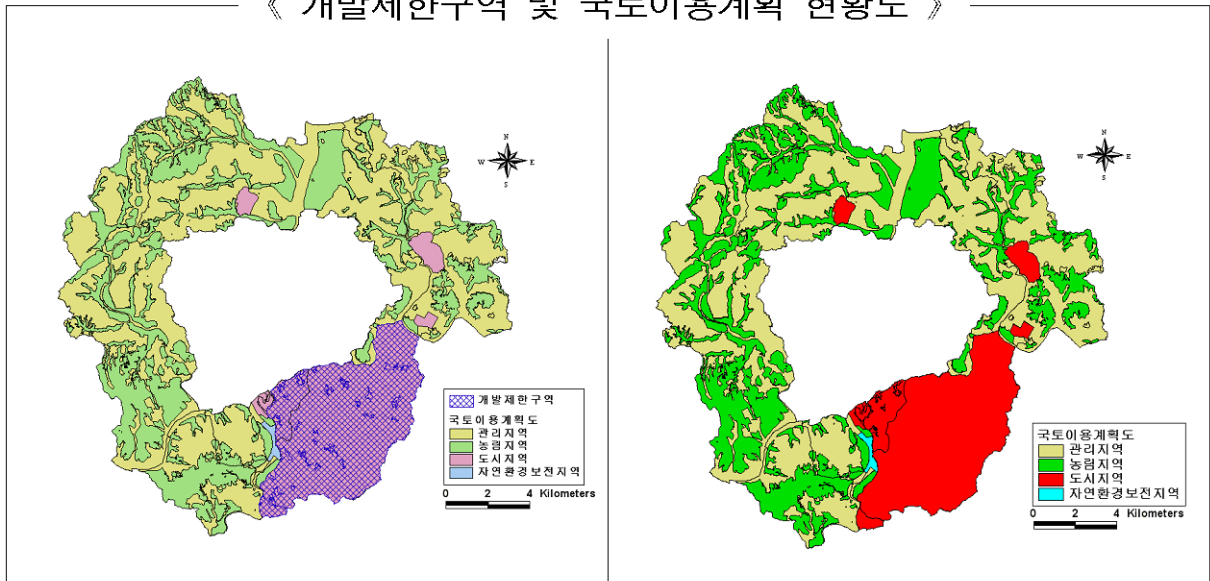
13.1.2 자연 및 주변지역 현황

- 대체로 평탄한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형으로 표고 100m 이하가 90.8%를 차지하며 생태자연도 1, 2등급지가 49.2%로 환경적으로 양호한 지역임
- 하천은 금강을 중심으로 월하천, 연기천, 제천, 대교천, 용수천, 금천, 삼정천 등이 있음



- 주변지역 총 인구는 약 35,400명이며 세대수는 약 13,600세대로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전체 인구의 10.5%에 해당
- 산업단지는 조치원 지방산업단지, 부용 지방산업단지 등 2개소와 농공단지 2개소 (웅암농공단지, 부용농공단지), 대규모 공장 11개소가 입지
- 주변지역의 도시지역은 전체면적의 20.6%인 46.2km²(개발제한구역 36.5km² 포함)이며 농림지역은 32.5%(72.8km²), 관리지역은 46.7%(104.6km²), 자연환경보전지역은 0.3%(0.6km²)임

《 개발제한구역 및 국토이용계획 현황도 》



- 고속철도 오송역이 예정지역 경계에서부터 약 7km, 천안·아산역과 약 35km, 대전역과는 약 25km정도 거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음
- 경부, 호남, 중부고속국도 등을 비롯하여 서해안 중앙, 중부 내륙고속국도 등이 통과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양호한 접근성을 보이며 일반국도는 국도 1호선을 비롯한 총 12개의 노선이 통과

《 주변지역 교통현황 》



13.1.3 주변지역 여건 전망

- 인접지역에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하여 대단위 산업단지들이 조성 및 진행 중에 있어 미래지향산업인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대부분 지역이 농경지를 비롯한 산지이므로 환경적 가치가 높으나 행정도시 건설로 개발의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어서 보전과 이용에 대한 관리계획수립 필요
- 행정도시 건설로 주변지역을 비롯한 광역계획권내 유기적인 도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거점도시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새로운 개발축이 형성될 것임
- 행정도시 완공 이후에는 많은 인구유입으로 주변지역 기반시설정비와 계획적 개발 및 관리 수요 증대가 예상됨

《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SWOT 분석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역사·문화관광 자원풍부 ▪ 양호한 광역교통망 및 접근성	▪ 도시개발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미흡 ▪ 인접지역의 개발압력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광역계획권내 유기적 도시네트워크 구축 가능 ▪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잠재력 내재	▪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많은 인구유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상충

13.2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13.2.1 정책과제

- 행정도시 예정지역-주변지역-광역계획권으로 연결되는 상생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기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기반 마련 필요
- 행정도시 건설 초기단계에서는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수적
- 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문화·여가·관광·의료 등의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주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모색 필요
- 장기적으로는 행정도시 건설로 주변지역을 비롯한 광역계획권내 유기적인 도시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므로 행정도시 생활권과 주변지역이 통합되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13.2.2 주변지역 관리 및 발전전략

- 행정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고 인접지역 개발압력을 완화하며 미래의 토지수요를 감안한 계획적 관리방안 모색
-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시행을 고려한 토지 이용을 구현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 장기적으로 행정도시와 통합된 생활권 형성과 동반 발전을 위한 교통·환경·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연계

13.2.3 주변지역 인구시나리오 설정

-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가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므로 행정도시의 단계적 발전과정과 연계하여 검토

- 주변지역의 인구지표는 위와 같은 정책적·규범적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인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인구 시나리오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변지역 내 용도별 적정 인구밀도 등의 요인을 감안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

13.3 공간구조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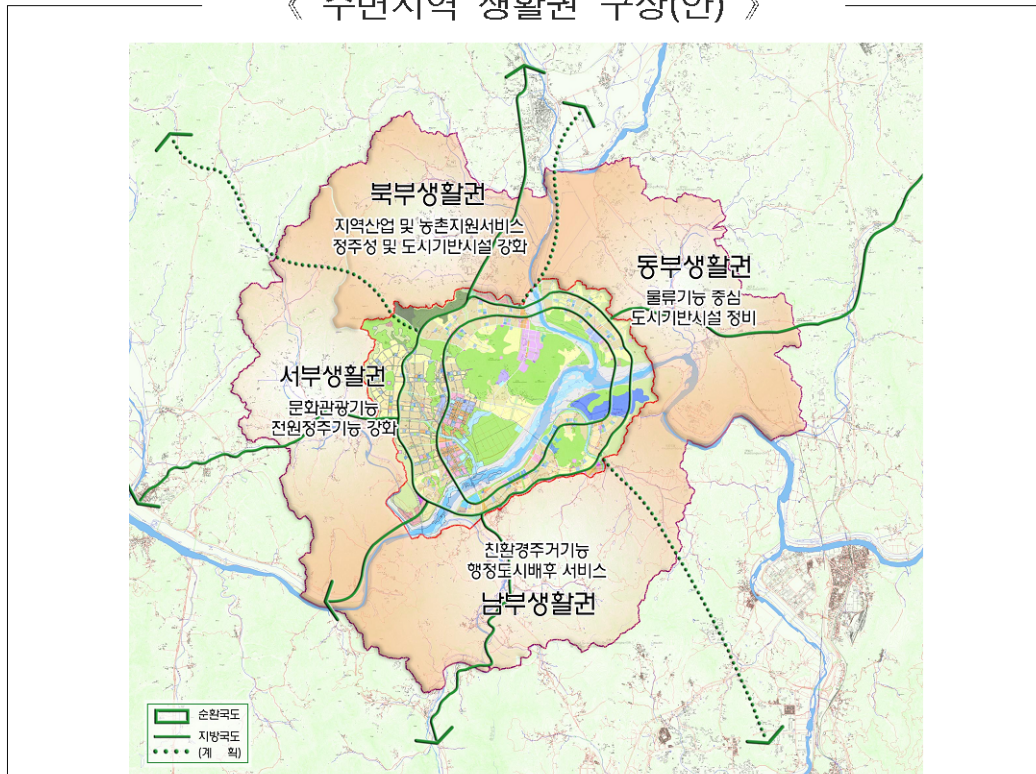
13.3.1 공간구조 구상의 기본방향

-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급격한 여건변화와 무계획적 개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개발지를 중심으로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중적 토지이용은 허용하되 산발적 개발은 억제
- 양호한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고 도시공간 구조상 도시지역으로 개발되는 예정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개발밀도를 차등 적용

13.3.2 생활권 설정

- 장기적으로는 행정도시의 생활권과 연계, 통합된 도시체계를 형성하되 공간적·지형적 특성 및 편의시설의 이용거리와 배치기준을 감안한 생활권 설정
- 행정도시 개발계획상 공간구조(주출입 동선 및 단계별 생활권 개발계획 등)와 연계하여 4개 지역 생활권으로 구분
 - 읍·면의 행정단위, 초등학교, 시장 등의 기본여건, 지형·지세와 간선도로 등을 감안하여 정주체계의 기본단위로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복수의 소생활권으로 설정
 - 동부생활권 (54.6km², 2005년 현재 12,274인), 서부생활권 (53.8km², 5,311인), 남부생활권 (72.6km², 9,810인), 북부생활권 (42.9km², 7,999인)의 4개 소생활권으로 구분

《 주변지역 생활권 구상(안) 》



《 생활권별 기능배분 및 발전방향 》

구 분	기능 및 발전 방향
동부 생활권	- 중부권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물류유통 기능 수행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정비 - 정주생활권 기능과 주변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기능 강화
서부 생활권	-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정비하여 정주생활권 기능을 강화 하고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 편리한 교통접근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문화, 관광 기능 강화
남부 생활권	- 공주시의 반포면과 연기군의 금남면 소재지의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정주생활권 기능 강화 - 행정도시의 배후 전원주거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주거 기능 강화
북부 생활권	- 조치원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정비 하여 생활권 중심성 강화 - 연기리 일대는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주변 농촌 지원 및 관광지원 기능 강화

13.4 부문별 계획 및 관리 기본방향

13.4.1 토지이용 및 관리

□ 기본방향

-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급격한 여건변화와 무계획적 개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를 중심으로 보전용지 설정
- 양호한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밀도 설정
 - 도시지역으로 개발되는 예정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개발밀도를 차등 적용

□ 지역 유형별 토지이용관리 방안

- 건축물 집단화 분석, 개발축·보전축 분석자료를 기초로 계획적 관리지역, 현상유지지역, 보전지역으로 지역유형 구분
 - 계획적 관리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지역
 - 현상유지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현재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역
 - 그 이외 지역은 보전지역으로서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는 관리 수준 유지
- 행정도시 건설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주변지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지역유형 구분 결과를 토대로 입지 결정
 - 자연자원을 기초로 하는 관광·휴양시설 등은 보전축에도 입지가 가능하며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경관관리와 함께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책 마련
 - 도시기반시설은 토지적성평가 4·5등급지 중에서 집단화하여 입지 허용
- 주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주민불편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각종 지원사업 추진방안도 마련

13.4.2 교통

- 공간구조상 설정된 개발축을 고려하고 광역교통망과 예정지역내 간선교통축과 연계한 각 생활권의 간선가로망을 형성
- 광역교통계획과 관련계획을 수용하여 행정도시와 연계되는 다양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 및 확장
- 각 읍·면을 연결하는 연계도로망이 미흡하여 지역생활권간의 단절현상이 보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망 구축
- 지역간 도로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추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기존 도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를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곳은 기존도로의 확포장 및 선형을 개선

《 행정도시 주변지역 도로망 체계 》



13.4.3 공원·녹지, 환경 및 경관

□ 공원·녹지관리 기본방향

- 기존공원과 신설공원, 녹지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체계를 구축하고 각 생활권내의 근린공원 관리 강화
- 수변지역에 일정폭의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한 완충지대로써 방재기능 부여

□ 환경보전 및 관리 기본방향

-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해저감 및 방지대책 수립
- 오염유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추가적 개발은 예정지역 개발개념에 부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은 보존용도의 존치구역으로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발을 제한하고 환경 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
- 예정지역 기본계획·개발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서 계획한 생태네트워크 및 녹지축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친생태적인 정주공간 창출

□ 경관

-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행정도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주위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예정지역 경관계획과 일관성 있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
 - 양호한 경관조성을 위해 건축물외관 관리방안 및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 강화

□ 방재 및 안전관리

- 중점 안전관리시설 지정·관리 및 재해위험지구의 적극적 운영
 - 공공시설물과 각종 건설 공사장 등 재난 요인물을 지정하고 시설물에 대한 재난 예방관리체계 구축
 - 재해위험지구의 지정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행위규제 등 강화
- 도시·비도시, 하천유역·저지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재대책 마련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해위험지구를 파악하고 상습침수지역, 지하공간 등의 침수방지 대책 수립

제3부 집행 및 관리

- 14. 집행 및 관리체계
- 15. 계획의 수정·변경

14. 집행 및 관리체계

14.1 여건과 정책과제

14.1.1 여건전망과 예상 문제점

-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고 자립적 발전 기회가 점차 증대되어 광역계획권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예상
 -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하고 중복·상충되는 개발의욕이 광역계획권의 난개발 및 과다개발을 초래할 우려 있음
-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개발 의지는 행정도시 건설과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의 현실에 관한 심층적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간의 과다경쟁·소모적 갈등·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의 유기적인 기능적 네트워크 형성을 저해할 우려
- 행정도시 건설 추진에 따라 초기 단계에는 유입되는 건설인력을 위한 인근 지역의 배후 및 지원 기능 활성화로 이에 관한 관리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행정도시 입주(2010년) 이후에는 수도권 뿐 아니라 광역계획권에서도 행정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광역계획권의 정주기반 정비와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 수요가 증대될 것임
 - 특히 광역계획권 내 상대적 낙후 지역으로부터 과다한 인구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광역계획권 내 각 지역에 대해 적정한 기능과 인구의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 모색 필요

14.1.2 정책과제

- 지역별 지정 또는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상설 협의체의 구성, 운영
- 광역계획권 내 인구유출 및 감소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 기초편익 시설 배치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주환경 정비 및 개선 대책을 모색 필요

- 행정도시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개발을 담보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인근 도시·지역에서 추진 또는 계획 수립 중인 주요 개발사업의 규모·내용 및 추진 일정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한 자원배분, 지자체간 개발욕구의 합리적 조정 등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행재정적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 필요
 - 광역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지자체간 협력 및 국가지원체제를 구축 필요

14.2 광역도시계획 집행체제

14.2.1 광역계획권 내 행정체제

- 본 광역계획권에 대한 행정체제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추진체계와 공존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음
 - 일반적인 광역도시계획의 행정체제는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의 위계로 구성되나,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의 행정체제는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행정도시-중앙정부의 병렬적 구성의 요소가 강함
-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건설의 초기단계에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 법률에 의하여 행정도시의 지위와 명칭이 정해지고 새로운 자치단체를 발족한 이후에는 행정체계와 역할 분담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에도 대비

14.2.2 광역행정협조체제와 역할분담

□ 기초자치단체

- 특정한 목적을 가진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광역지자체·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제외한 일반적 도시개발은 대부분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추진

- 이러한 사업들 중 인근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사전에 협의조정 필요
- 도로 등의 광역시설과 인접 시·군의 학교 등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조정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과의 동시성 검토제도를 도입
- 동시성 검토제도는 해당 시·군의 개발에 따른 주변 시·군으로의 영향범위를 설정하여 시·군별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
- ※ 동시성 검토제도 : 공공시설물이 개발과 동시에 개발계획 내용을 수용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공공시설의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주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마산·창원·진해 광역도시계획(2005. 12) 등에서 도입
- 공공시설이 적정하게 제공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아 토지개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과 동시에 기반시설의 충족될 수 있도록 유도

□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는 동시성 검토 기준을 기초지자체 및 인근 광역지자체와 협의 하여 작성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
- 동시성 검토기준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행정협치 등에 있어 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
- 광역자치단체는 광역도시계획과 부합하게 작성된 도시기본계획 등의 시·군별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별 관리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등 개별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 행정도시건설청

- 특별법에 근거하여 행정도시건설청이 입안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인근 시·군 또는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 및 시·군과 협의, 조정하고 광역도시계획 협의기구도 설치·주관

□ 중앙정부

- 중앙정부는 광역도시계획의 집행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광역도시계획 협의 기구에 참여하여 행정·재정 측면의 협의·관리 등을 지원
- 중앙정부는 광역도시계획과의 부합성을 토대로 도시기본계획 등의 시·군별 종합계획 및 부문별계획과 택지개발계획 등 개별 개발사업계획을 협의·승인

14.2.3 관련주체간 협력체계 확립 방안

- 광역도시계획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는 계획수립의 근본 취지에 걸맞게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 본 광역도시계획은 행정도시의 건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건설교통부 및 행정도시건설청)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발전적 개편

- 광역도시계획의 집행과 관리 및 집행성과의 평가 그리고 계획변경여부의 검토를 위해 현재 본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도시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검토
-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중앙정부·행정도시건설청·행정도시의 실무대표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정부의 실무대표자 및 학계·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
 - 관련지자체 도시계획위원이 이 협의회 위원을 겸임 가능하게 함
 - 광역도시계획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실무자 및 전문가를 포함
- 행정적인 기속력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관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모색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행정도시 건설청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실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 검토

14.3 광역도시계획의 구현

-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내용은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단위사업계획 속에서 구체화되어 실현성을 확보해야 함
 - 도시기본계획 자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을 통하여 조정권한을 행사
-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시 광역도시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하도록 함
- 시·군간 이견 조정이 어렵거나 광역적 현안사안으로서 중요한 정책 사항인 경우에는 광역지자체가 직접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방안도 강구

15. 계획의 수정·변경

15.1 집행사항의 평가 및 관리

- 광역도시계획 집행 및 관리를 위한 협의 기구(광역도시계획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일정 기간마다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의 집행사항을 검토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검토과정에 참여
- 광역도시계획기구 내에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련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조직을 활용할 수 있음

15.2 계획의 변경체제

- 광역계획권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음
- 광역도시계획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협의·검토 및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변경
 -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 및 해당 시·군의 시장, 군수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변경을 승인
- 광역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경우 특별법이 규정하는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계획을 변경

